

2020

정책연구 2020-02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연구진 양원탁 · 서환석 · 정미선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0-02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양원탁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서환석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미선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박우성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기획경영실장
	김영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팀장

연구관리 코드 : 19JU2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구요약

식품산업은 먹거리와 관련된 필수 산업으로 세계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농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식품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인 식품기업 유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 입지, 제도적 측면에서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식품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현황을 통해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산업적, 입지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전략적인 식품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식품기업 유치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식품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식품산업은 기술혁신의 위험이 낮아 경쟁 강도가 크고, 지역농업과의 연관성이 큰 산업에 해당한다. 식품기업은 1차 가공과 2차 가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주요기업은 수직·수평적 통합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 정책은 FTA 대응을 위해 2008년 이후 본격 추진되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대응, 외식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식품산업 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측면의 연구에서 산업구조 분석으로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장되고 있다.

둘째,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산학연 현황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북의 식품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소기업 중심이며, 도축·육류, 곡물 가공 업종의 비중이 크다. 전북의 식품 관련 대학은 12개, 공공연구 기관은 9개로 혁신 인프라가 우수하다. 전북의 식품산업 정책은 농업연계 강화에서 최근에는 고부가가치화와 수출확대로 확대 추진 중이다.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제도는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제도로 구분되며, MOU 체결 조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북도-시군-기업 간 사전 협의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산업, 입지,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특화도 분석과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화도 분석결과, 전북의 식품산업은 특화도가 높고(식료품: 2위, 음료: 4위), 축산·곡물·주류·발효 식품 업종에 더욱 특화되어 있다. 전북 식품산업의 지역 생산유발효과는 전국 3위 수준이나, 농업부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 5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곡·제분(1.81), 육류·낙농(1.73)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입지적 측면의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을 위해 식품산업의 분포 특성과 식품 전문단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북 식품산업은 서북부 지역의 집중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전북 내 식품특화/전문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포함)는 10개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활성화(국클·정읍소성·고창북분자)와 기반시설 정비(순창가남·진안홍삼·진안2농공)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공급자(공무원)와 수요자(식품기업)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업장 특성에 있어 지역 원료의 가격경쟁력 및 생산량 확보, 물류비와 인력수급 부담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입지 측면에서 저렴한 용지가격, 단점은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으며, 품질 안전성, 기능성 평가 지원시설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북 식품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입지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소재의 전략적 유치, R&D 지원센터 확충(국가),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농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기업 유치여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과 도-시군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으로부터 지역상생발전(산업), 투자환경조성(입지), 협력지원체계(제도)의 정책요인과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비전은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투자 중심지 조성'이며,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산업)',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입지)', '협력·지원체계 강화(제도)'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9개 추진전략과 주요사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부 기업유치 여건을 토대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후속 과제로 미래 식품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치대상이 되는 외부 타겟 기업에 초점을 둔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가. 연구 범위	4
나. 연구 방법	5
3. 연구의 주요 내용	7
가. 식품산업 개념과 동향	7
나.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7
다.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8
라.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9
 제2장 식품산업의 개념과 동향	11
1. 식품산업의 개념	13
가. 법률적 측면	13
나. 학술적 측면	13
다. 본 연구의 식품산업 개념 정립	15
2. 식품산업의 특성과 동향	16
가. 식품산업 특성	16
나. 식품산업 정책 동향	19
3. 선행연구 고찰	21
가. 정책 측면	21
나. 산업 측면	22
다. 입지 측면	23
4. 소결	25

제3장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27
1. 개요	29
2. 전북 식품산업 현황	29
가. 식품기업 현황	29
나. 식품 관련 대학 현황	33
다. 연구기관 현황	34
3. 식품산업 정책 및 기업유치 제도	36
가. 식품산업 관련 정책 현황	36
나. 식품산업 및 식품기업 유치 관련 제도	43
4. 소결	53
 제4장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55
1. 분석 개요	57
2. 식품산업구조 분석	59
가. 특화도 분석	59
나. 전북 식품산업 연관구조 분석	63
3. 식품기업 입지특성 분석	67
가. 식품기업 분포 특성	67
나. 식품 특화단지 조성 현황	71
4. 소결	74
 제5장 정책 수요조사	 75
1. 조사 개요	77
2. 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80
가. 조사 참여자(응답자) 현황	80
나. 사업장 특성	81
다. 기업입주 지원	86
라. 입지여건	91
마. 정책수요	94
바.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100
3. 공무원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106
가. 지역별 식품기업 유치여건	106
나. 시군별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108

4. 소결	109
제6장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111
1. 전략 수립 개요	113
2.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종합	113
3.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기본구상	115
가. 비전과 목표	115
나. 추진전략 도출	115
다. 전략체계 종합	119
4. 분야별 추진계획	120
가.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산업)	120
나.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입지)	129
다. 협력·지원체계 구축(제도)	136
참고문헌	141
부록	145

표목차 | Contents

〈표 1-1〉 주요 연구 질문 및 차별성	4
〈표 1-2〉 전문가 자문방법	6
〈표 1-3〉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의 주요 내용	8
〈표 1-4〉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틀	8
〈표 2-1〉 식품 공급의 연결고리를 구성하는 하위산업부문	14
〈표 2-2〉 본 연구의 식품산업의 범위	16
〈표 2-3〉 식품산업의 특성	18
〈표 2-4〉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 관련 업무 부처별 수행현황	20
〈표 2-5〉 식품산업 관련 연구 동향(정책)	21
〈표 2-6〉 식품산업 관련 연구 동향(산업)	23
〈표 2-7〉 식품산업 관련 연구 동향(입자·기업유치)	24
〈표 3-1〉 시도별 음식료품 제조업 변화 추이	30
〈표 3-2〉 종사자 규모별 식품제조업 현황(시도별)	31
〈표 3-3〉 전라북도 식품제조업 업종별 현황	33
〈표 3-4〉 전라북도 4년제 대학 식품 관련 학과 및 재학생 현황	34
〈표 3-5〉 식품 분야 연구기관 현황	35
〈표 3-6〉 식품산업 관련 정책 조사대상 개요	37
〈표 3-7〉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의 식품산업 육성 방향	38
〈표 3-8〉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2020~2024)	39
〈표 3-9〉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40
〈표 3-10〉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방향	41
〈표 3-11〉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육성	42
〈표 3-12〉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촉진계획	42
〈표 3-13〉 전북 식품산업 육성 관련 주요 자치법규 현황	44
〈표 3-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범위	45

〈표 3-1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현황	47
〈표 3-16〉 전라북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현황	48
〈표 3-17〉 도 단위 투자 인센티브 제공 현황	49
〈표 3-18〉 시군 단위 투자 인센티브 제도 사례	50
〈표 3-19〉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조건	51
〈표 3-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비교	52
〈표 4-1〉 시도별 식품산업 특화도 변화 추이	60
〈표 4-2〉 전라북도 식품산업 업종별 특화도(소분류)	61
〈표 4-3〉 전라북도 기타 식료품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세세분류)	62
〈표 4-4〉 시도별 식품제조업의 생산 유발계수	63
〈표 4-5〉 전북 식품산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산출결과	65
〈표 4-6〉 전북 식품제조업의 지역 내 전후방 파급효과 비교	66
〈표 4-7〉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산업 현황	67
〈표 4-8〉 전라북도 식품산업 업종 현황(소분류, 종사자 기준)	70
〈표 4-9〉 전라북도 식품 특화단지 일반현황	72
〈표 4-10〉 전라북도 식품 특화단지 업종 및 인프라 현황	73
〈표 5-1〉 정책 수요조사 대상 산업단지 현황	78
〈표 5-2〉 정책 수요조사 개요	79
〈표 5-3〉 응답자 현황	80
〈표 5-4〉 현 사업장의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	82
〈표 5-5〉 기업의 이전특성에 대한 응답 분포	83
〈표 5-6〉 해당 지역의 원료(농산물) 이용 현황	84
〈표 5-7〉 지역 원료 투입비율이 낮은 이유(50% 미만 업체 대상, 중복응답)	85
〈표 5-8〉 판매 및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	85
〈표 5-9〉 현 사업장 입주 시 행정 기관지원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87
〈표 5-10〉 주요 지원기관에 대한 응답 분포(중복응답)	88
〈표 5-11〉 주요 지원항목 대한 응답 분포(중복응답)	89
〈표 5-12〉 행정기관 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분포 및 평점	91
〈표 5-13〉 사업장 위치선정 고려사항 및 전라북도 유치여건(장점)	92

〈표 5-14〉 사업장 위치선정 애로사항 및 전라북도 유치여건(단점)	93
〈표 5-15〉 필요한 기업지원시설 수요에 대한 응답 분포	94
〈표 5-16〉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 평가	96
〈표 5-17〉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만족도 평가	97
〈표 5-18〉 전략적 유치업종에 대한 응답분포	100
〈표 5-19〉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분포(중복 응답)	102
〈표 5-20〉 기타 애로사항	104
〈표 5-21〉 지역별 식품기업 유치여건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107
〈표 5-22〉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108
〈표 6-1〉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요인 도출	114
〈표 6-2〉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향	118
〈표 6-3〉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술지원 사업 현황	120
〈표 6-4〉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 주요 내용	122
〈표 6-5〉 전라북도 식품기업 인력공급 방향	123
〈표 6-6〉 지자체 출자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개요	130
〈표 6-7〉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시설 설치 관련)	131
〈표 6-8〉 울산광역시 물류공동운송사업 협동조합 사례	132
〈표 6-9〉 국가식품클러스터-시군 공동투자유치 활동 사례	136
〈표 6-10〉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세부사업 제안	137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식품산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7
〈그림 1-2〉 식품산업 분석 틀	8
〈그림 1-3〉 연구 흐름도	10
〈그림 2-1〉 식품산업과 타 부문 간의 연관 관계	15
〈그림 2-2〉 본 연구의 식품산업 개념	15
〈그림 2-3〉 식품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계획 추진 흐름도	20
〈그림 3-1〉 전북 식품산업 현황 조사개요	29
〈그림 3-2〉 전북 식품업종별 종사자 비중(좌: 소분류, 우: 세세분류(기타))	32
〈그림 3-3〉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46
〈그림 3-4〉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급 절차	49
〈그림 4-1〉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흐름	58
〈그림 4-2〉 전북 식품산업 특화도 추이(2008~2017)	59
〈그림 4-3〉 전북 식품제조업 특화도(2017년, 소분류 기준)	61
〈그림 4-4〉 시도별 식품산업이 지역농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	64
〈그림 4-5〉 전북 식품산업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농업부문)	65
〈그림 4-6〉 전북 식품업종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66
〈그림 4-7〉 시군별 식품 종사자 추이(08~17)	68
〈그림 4-8〉 전북의 식품산업 지역집중도 변화	68
〈그림 4-9〉 전북 식품산업의 주요 업종별 종사자 분포 현황(2017)	69
〈그림 4-10〉 전라북도 식품특화단지 위치 현황	71
〈그림 5-1〉 정책 수요조사 개요	77
〈그림 5-2〉 현 사업장의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유형별)	82
〈그림 5-3〉 현 사업장의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기업규모별)	82
〈그림 5-4〉 기존사업장 위치 응답 분포(이전업체)	83
〈그림 5-5〉 지역 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응답 분포(유형별)	84

〈그림 5-6〉 지역 원료 투입비율 응답 분포(기업 규모별)	84
〈그림 5-7〉 지역 원료 투입비율이 낮은 이유(중복응답)	85
〈그림 5-8〉 판매 및 노동시장의 범위	86
〈그림 5-9〉 입주 시 행정기관의 지원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86
〈그림 5-10〉 지원기관에 대한 응답 분포(입지유형별)	88
〈그림 5-11〉 지원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입지유형별)	89
〈그림 5-12〉 지원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기업규모별)	90
〈그림 5-13〉 지원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기능별)	90
〈그림 5-14〉 행정기관 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점	90
〈그림 5-15〉 사업장 입지 애로사항 및 전라북도 장점 응답 분포	92
〈그림 5-16〉 사업장 입지 애로사항 및 전라북도 단점 응답 분포	94
〈그림 5-17〉 기업지원시설 수요(입지유형별)	95
〈그림 5-18〉 기업지원시설 수요(기업규모별)	95
〈그림 5-19〉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 평가(유형별)	96
〈그림 5-20〉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 평가(기업규모별)	97
〈그림 5-21〉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만족도 평가(유형별)	98
〈그림 5-22〉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만족도(기업 규모별)	98
〈그림 5-23〉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종합(입지유형별)	98
〈그림 5-24〉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종합(기업규모별)	99
〈그림 5-25〉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유치업종(입지유형별)	101
〈그림 5-26〉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유치업종(기업규모별)	101
〈그림 5-27〉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 방향(유형별)	102
〈그림 5-28〉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 방향(기업규모별)	103
〈그림 5-29〉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 방향(기능별)	103
〈그림 6-1〉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개요	113
〈그림 6-2〉 전라북도 식품산업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안)	121

1

장

연구의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식품산업은 사람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산업으로서 세계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 식품산업은 전 세계 농산물의 수요처이자 사람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에 해당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식품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20년 7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전라북도는 농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는 농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한국식품연구원 본원(2007),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2010)이 이전 및 설립되었으며, 지역 전략제품 육성을 위한 지자체 출연연구소들이 설립되었음
 -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복분자·홍삼 등 식품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식품산업 집적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전북의 식품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기업유치가 요구되고 있음
 - (중소기업 중심) 전북의 음식료품 공장은 2006년 827개에서 2018년 1,428개로 증가하였으나 50명 이상 업체는 9개로 시장 영향력을 지닌 업체의 입주는 제한적¹⁾
 - (특정 지역 중심) 식품기업 유치 정책이 신규산업단지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농공단지와 군 지역의 식품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음
 - (정책 수요) 식품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나 기업

1) 소수의 식품기업은 수직·수평적 통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어 전략적인 기업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효과적인 기업유치 전략 마련에 한계

- (지역·산업특성) 지역별 식품산업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어떤 세부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유치전략을 마련할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산업, 입지,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식품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1-1〉 주요 연구 질문 및 차별성

구분	내용
주요 연구 질문	•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은 어떠한가? •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농업과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정책 수요가 높은 지원제도는 무엇인가? • 효과적인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은 필요한가?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전북의 지역, 산업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식품기업 유치전략 제시 •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효과적인 식품기업 유치전략을 제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20 ~ 2030년(분석 범위: 2008~2017년)
-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
- 분석 범위(2008~2017) : 2008년은 식품산업 관련 제도적 기반과 정책이 추진된 시점으로서 10년간의 정책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음

나.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 조사

- 식품산업의 개념 정립을 위한 법률, 학술연구, 보고서 등 문헌 자료 검토
- 식품시장 및 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정부 정책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점 도출

○ 통계자료 조사

- 국내 및 전북 식품산업 현황 분석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조사 수행
- 전국사업체조사(식품산업 현황), 공장등록현황·산업단지현황통계(특화단지 특성) 등 산업단지 및 기업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한 식품산업 현황 분석 수행

○ 지역경제 분석

- 산업 측면에서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분석(특화도 분석, 산업연관분석) 수행
- 특화도 분석은 시도별 식품산업의 특화도 비교와 전북 세부 특화업종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제조업 종사자수를 이용한 IQ 지수를 산출
- 산업연관분석은 전북 식품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시도 및 전북 단위의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를 산출

○ 입지특성 분석

- 입지적 측면에서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을 위해 식품산업 입지특성 분석과 식품산업의 공간적 집중도 분석을 수행
- 식품산업 입지특성을 위해 ArcGIS 10.4를 이용한 시군별 식품업종 분포 분석과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공간적 집중도 추이를 분석하였음

○ 정책 수요조사

- 제도적 측면에서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공급자(공무원)와 정책 수요자(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

- 식품기업 대상 조사는 2019년 12월 16일 ~ 12월 30일(10일) 동안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으
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1 방문 조사를 수행하였음
- 공무원 대상 조사는 2019년 12월 4일 ~ 12월 12일(국클 11월 7일) 동안 특화단지가
있는 시군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담 수행

2) 전문가 자문 방법

- 분석 방향을 설정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동향, 전
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전략 수립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 수행
- 식품산업 동향: 국내 식품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및 전북 식품산업의 현황과
동향, 연구 쟁점과 관련된 자문 수행
-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전북 부문별(입지, 산업, 제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
석 방향을 설정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기업 자문 수행
-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도내 식품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

〈표 1-2〉 전문가 자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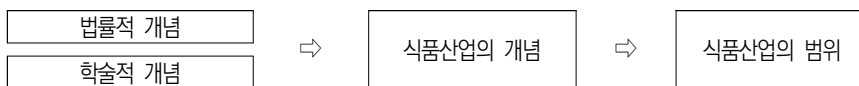
구분		대상	방법	비고
산업 동향	식품산업 동향/ 연구쟁점	식품산업 전문가	방문면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11.12) • 한국농수산대(19.11.20)
기업 유치 여건 분석	지역별 특성 파악	시군담당자 (국클지원센터)	방문면담	• 공무원 정책 수요조사 연계 (7개 시군 방문¹⁾)
	식품산업구조 분석	지역경제분석 전문가	방문면담	• 국토연구원(20.1.20.)
	기업 의견수렴	도내 식품기업 담당자	방문면담	• 풀무원다논(2019.12.16.) • 대상 순창공장(19.12.26)
전략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도내 식품산업 전문가	방문면담	• 전북생물산업진흥원(20.2.19.)

주1: 7개 시군은 익산(지원센터)·순창·무주·진안·고창·정읍·부안임

3. 연구의 주요 내용

가. 식품산업 개념과 동향

- (식품산업 개념) 식품산업의 개념을 법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식품산업의 정의와 분석의 범위를 설정함
- (법률적 정의) 식품산업의 법률적 개념은 식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농업식품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정리함
- (학술적 정의) 식품산업의 학술적 개념은 연구자 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의를 도출함
- (식품산업 범위) 식품산업의 법률·학술적 개념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분석을 위한 식품산업의 범위를 설정함



〈그림 1-1〉 식품산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식품산업 특성과 동향) 식품산업의 특성, 정책 동향, 연구 동향을 조사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토대를 마련함
- 식품산업 특성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식품산업의 산업적 특성, 구조(가치사슬 중심), 시장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수행
- 식품산업 정책 동향은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흐름을 파악하고, 부처별 주요 정책 내용을 조사함
- 선행연구 고찰은 식품산업 및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학술연구의 흐름과 주요내용을 정책, 산업, 입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

나.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현황과 식품산업 육성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의 토대를 마련
- 전북 식품산업 현황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식품산업 관련 산업, 대학, 연

구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전북의 식품산업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

- 전라북도 식품산업 정책 동향은 전북의 식품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관련 정책별 주요 내용을 조사하여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향에 대한 토대 마련

다.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은 입지, 산업,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업유치 여건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의 토대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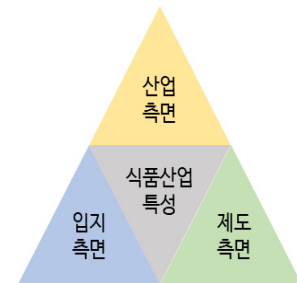
- (산업) 식품산업 구조를 특화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농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계량 분석하여 산업 측면의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토대 마련
- (입지) 시군 단위에서 식품산업의 업종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식품 특화단지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단위에서의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
- (제도) 도내 식품기업 담당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의 토대 마련

〈표 1-3〉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산업	식품산업 구조분석	- 전북의 식품산업 구조를 계량 분석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도출 • 세부업종별 특성(특화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수출량 등)을 산출하고, 주요업종의 특성을 제시하여 세부업종별 유치전략의 토대 마련
입지	식품산업의 공간분포	- 식품기업 및 관련 기관의 공간분포와 지역별 특성 차이를 도출 • 지역(시군)별 주요업종, 품목 등을 분석하고, 권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기업유치 전략 수립의 토대 마련
제도	정책 수요조사	- 식품기업 관계자 대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 수행 • 지역별, 세부업종별 차이에 초점을 두고 식품기업 유치 지원제도의 만족도,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여 기업유치 전략의 토대 마련

〈표 1-4〉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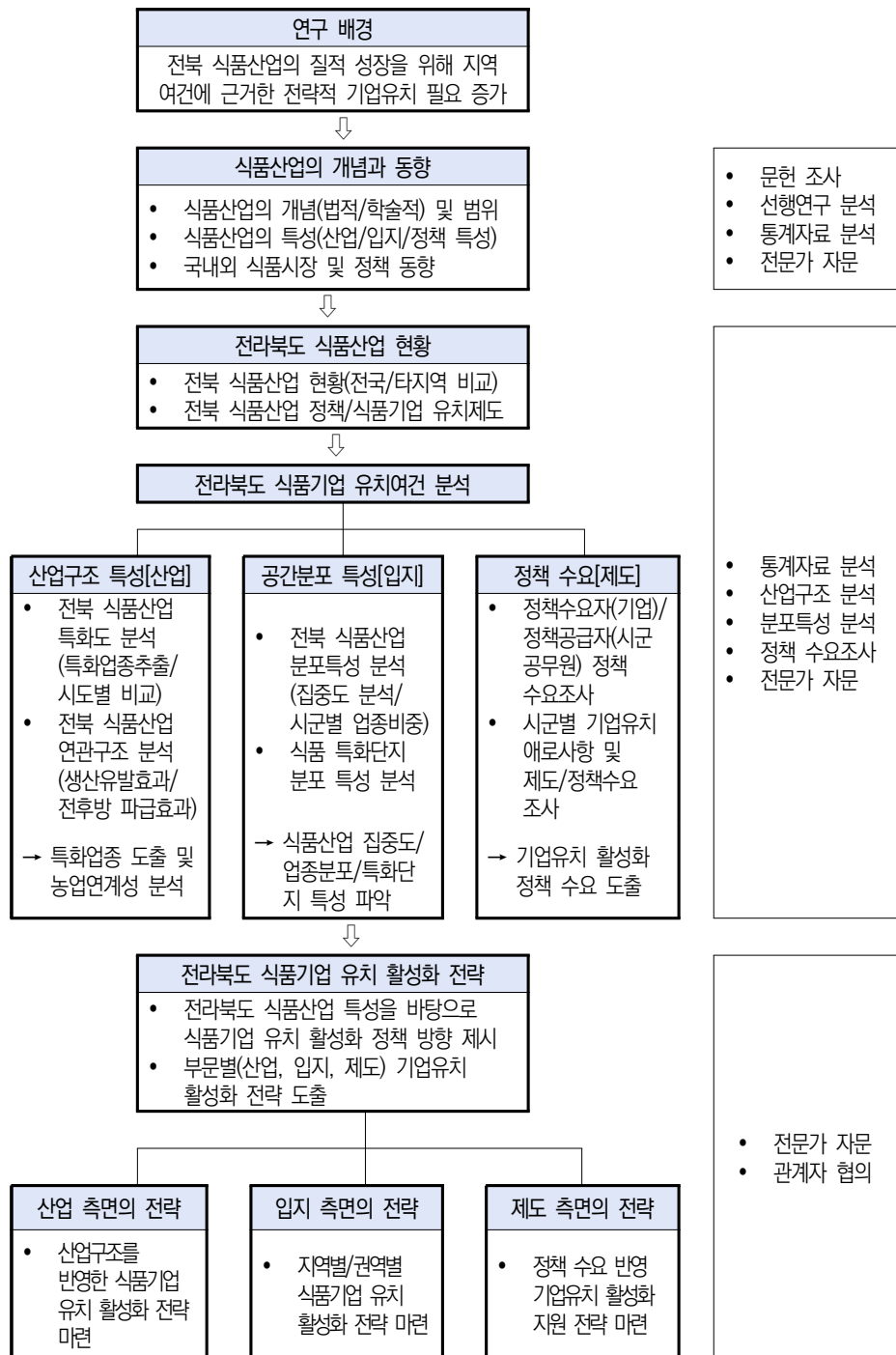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산업	특화업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부업종별 유치전략 토대
입지	식품산업 입지특성 및 특화단지 특성	⇒ 지역별 유치 전략 토대
제도	식품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요 조사	⇒ 유치 활성화 정책 토대



〈그림 1-2〉 식품산업 분석 틀

라.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부문(산업, 입지, 제도)별 추진전략을 제시함
- (산업) 전북 식품산업의 특화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측면의 전략을 제시
- (입지) 전북 식품산업 입지특성과 특화단지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의 식품산업 입지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함
- (제도) 도내 식품기업과 공무원 대상 정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



〈그림 1-3〉 연구 흐름도

2

장

식품산업의 개념과 동향

Jeonbuk Institute

-
1. 식품산업의 개념
 2. 식품산업의 특성과 동향
 3. 선행연구 고찰
 4. 소결

제 2 장 식품산업의 개념과 동향

1. 식품산업의 개념

가. 법률적 측면

- “식품”의 법적 개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 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각각 정의되고 있으며 관점에 있어 차이를 보임
 - 「농업·식품 기본법」에서 식품은 ‘농산물의 이용’의 측면에서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됨
 -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은 ‘먹거리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 “식품산업”의 정의는 「농업·식품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식품의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농업·식품 기본법」에서의 식품산업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연관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 학술적 측면

- 식품산업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크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광의) 식품산업은 원료의 공급, 가공, 유통·외식 등 식품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산업을 의미(강태진, 2006; 김관수, 2016)
 - (협의) 식품산업은 산업연관표상에서 식·음료품 제조산업(식품소재, 식품가공)에 한정되어 정의될 수 있음(한국무역공사, 2018)
- 식품산업은 1차와 2차 가공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문별로 시장경쟁 구조와 기업의 비용구조가 상이함(김성용, 2019)

- 1차 가공산업은 조미료 등 식품소재를 생산하며, 2차 가공산업은 1차 가공된 원료를 이용해 소비자 대상 음식료품을 생산함
- 1차 가공산업은 공정설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소수의 대기업이 과점하는 형태를 보이며, 대부분 기업 간 거래(B2B)에 기반을 두고 있음
- 2차 가공산업은 다수의 기업 참여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업종에 따라 마케팅 능력과 유통체계를 바탕으로 소수의 업체가 과점하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함

○ 식품산업은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 농수산물과 민간 소비부문, 가치사슬 외부에서 정부와 거시경제 부문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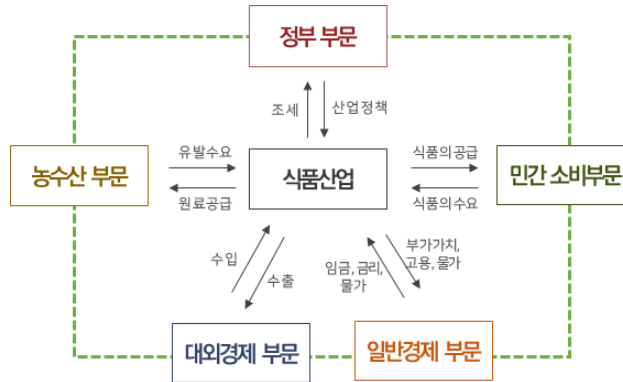
-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 농수산물 부문은 원료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에 해당하며, 민간 소비부문은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전방산업에 해당함
- 가치사슬 외부에서 산업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정부 부문, 수출입과 관련된 대외경제 부문, 자국 내 임금, 금리 등과 관련된 일반 경제 부문으로 구성

○ 학술적 차원에서 식품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분석의 목적과 통계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식품산업의 개념과 범위 설정이 필요함

〈표 2-1〉 식품 공급의 연결고리를 구성하는 하위산업부문

농업투입재	농산물 생산자	도매유통	가공/제조		식품유통
			1차 가공	2차 가공	
종자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수입유통	사탕수수·제당	음료	식자재유통
				라이신/ 핵산	
			조미료	제빵	
				제과	
사료			밀·제분	라면	단체급식
				주류	
				커피	
				냉동식품	
			옥수수·전분/ 전분당	장류	외식
플랜트/ 농기계	수산물	도매유통센터/ 직거래		유지가공	
			대두·대두박/ 유지	유가공	
				육가공	
				수인가공	

자료 : 김성용(2019)



자료 : 식품저널 편집부(2016), 식품유통연감

〈그림 2-1〉 식품산업과 타 부문 간의 연관 관계

다. 본 연구의 식품산업 개념 정립

- 본 연구의 식품산업은 기업유치의 목적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료품 소재를 생산하거나,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음식료품 가공산업”으로 정의
- 제조업은 기반산업으로서 서비스업과 타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쳐 기업유치의 주된 대상이 되며, 기업유치 수단은 산업단지 조성(강영훈, 2018)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식품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의미하며, 식품산업의 구조분석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현동, 2009; 김정필 외, 2014)
- 본 연구의 식품산업의 정의에 따라 산업 범위는 산업분류체계 상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이 해당(2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그림 2-2〉 본 연구의 식품산업 개념

〈표 2-2〉 본 연구의 식품산업의 범위

구분	소분류	세분류
식료품 제조업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도축업 •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유지 제조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기타 식품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설탕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	• 발효주 제조업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2. 식품산업의 특성과 동향

가. 식품산업 특성

1) 산업적 특성

- 식품은 필수재에 해당하므로 식품산업은 수요가 안정적이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기술혁신의 위험이 낮지만, 경쟁의 강도가 큼
- 식품산업은 생필품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수요의 가격과 소득탄력성이 낮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식품산업은 기술혁신에 따른 위험이 낮지만 동시에 신규 식품 가공기업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권대영, 2017)
- 식품산업은 원료인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유통·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에 해당함

- 식품산업은 제품의 생산비용 중에서 원재료(농산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에 해당함(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농축수산물은 기후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 시기별 생산량 차이가 커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고정삼, 2008)
- 세계시장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은 지역농업과 연계성이 강한 산업으로서 지역농업의 특성이 입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규모화가 제약을 받음

- 소득 증가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식품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모화는 제약을 받음(고정삼, 2012)

○ 식품산업은 생산과정에서 폐수발생량이 많고 업종과 공정에 따른 폐수형태의 변동성이 큰 산업에 해당함

- 식품제조업의 폐수량은 제조업종 중에서 세 번째로 많고 폐수형태의 변동이 심해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임(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²⁾

2) 시장 특성

○ 식품 시장은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시장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구분(강상욱, 2016)

- 대기업 주도형 시장에서 주요 식품회사들은 생산 규모, 유통망, 브랜드를 바탕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도를 보임(강대일, 2017)
- 전통식품 등 차별화된 원료와 고도의 생산능력을 요구하는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식품 시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시장(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세부시장으로 구분된다는 특성을 보임(농림수산식품부, 2016)

- 소득증대,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 기호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식품산업의 제품군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

2) 국가식품클러스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foodpolis1/220558827282>)

- 인스턴트, 간편식은 디자인의 변화 등으로 유행성 상품화를 촉진하며,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점차 변화

○ 유통업 및 주요 식품회사의 대형화와 수직·수평적 통합으로 시장 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반면, 소규모 식품산업의 교섭력은 약화되는 특성(김성용, 2019)

- 90년대 이후부터 유통업체의 대형화가 추진되면서 시장에서 식품회사의 가격교섭력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일부 대형 식품업체는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자금력을 바탕으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음

○ 식품산업은 식품소재를 중심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시장 지배력을 지닌 제품의 독과점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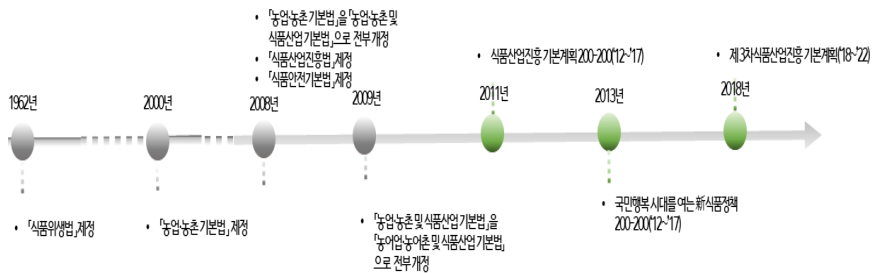
- 장류, 소스류 등 식품소재의 경우 음식의 맛에 영향을 미쳐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신제품 출시 시점에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이 중요
- 음료 및 주류시장의 경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형태의 시장 특성을 보이며, 각 세부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는 높은 편에 해당

〈표 2-3〉 식품산업의 특성

구분		내용
식품 산업	산업적 특성	• 필수재로서 수요가 안정적이지만 진입장벽이 낮음 • 원료(농축수산물)의 확보가 중요해 지역농업과의 연관성 높음 • 소비자의 기호에 민감하게 작용해 규모화가 어려움 • 생산비에서 유통·물류와 폐수처리의 부담이 큼
	시장 특성	• 식품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도형 시장으로 구분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시장의 세분화가 지속 • 유통업과 주요 식품회사의 수직·수평적 통합으로 지배력 강화 • 소재산업(장류/소스류)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음

나. 식품산업 정책 동향

- 농식품부는 1990년대부터 식품, 농축산물 가공산업 등을 담당하며 농식품의 수출, 식품안전, 외식산업 등에 이르는 정책을 추진해왔음
 - 식품산업 분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2000년대 중후반으로 다자간 무역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농업·농촌 및 국민 식생활 형태의 급변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
 - '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식품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안정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개정(2008) 등 관련 법의 입법을 추진함
 - 「식품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 측면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운영, 진흥기반의 조성, 시책 등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 분야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 농정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농업자재산업의 육성 시책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관산업의 정책 방향 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개정(2008) 이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9), 「김치산업진흥법」 등 특정 식품 분야 진흥과 관련된 법 제정이 추진되었음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5년을 주기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운용 중임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0-200(12 ~ '17) :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고용 200만 명 달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농어업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농식품부 신식품 정책(14 ~ '17) : 식생활/영양개선, 품질관리, 안전관리기반,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글로벌 경쟁력, 한식진흥/외식산업 선진화
 -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 ~ '22) : 미래 유망산업의 선제적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기술 개발, 영세한 식품산업계 혁신동력 내재화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식품 3D프린팅, 미래 대체 식품 등 차세대 10대 기술분야를 선정해 미래를 대비하고, 법적 근거와 산업 표준을 마련해 신시장 개척 지원
 - 미래 유망분야 육성,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식품·외식 산업 균형 성장, 농업 식품산업 간 연계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등 5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



〈그림 2-3〉 식품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계획 추진 흐름도

- 농식품부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농생명소재, 농기자재,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기자재 R&D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식품, 외식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연계하여 후방산업을 공고히 하고, 해외 판로 개척, 유통 체계 마련 등 공동물류 인프라를 확대하여 수출을 확대에 기여
- 식약처, 산자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에서도 식품산업, 식품안전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별 추진 정책과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음

〈표 2-4〉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 관련 업무 부처별 수행현황

구분	소관 부처	주요 정책	관련 법규
식품 산업	농식품부	식품 및 외식산업진흥 전반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관련업종 신고	「식품위생법」
	산업부	외식업(프랜차이즈) 산업육성	「가맹사업진흥법」
	과학기술부	식품 R&D	「과학기술법」 등
식품 안전	중소기업청	식품 중소기업 R&D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농식품부	농축산물 생산 안전관리 등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	식품안전 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교육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교급식법」
	환경부	먹는 물 관리	「먹는물관리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 식품·외식산업 정책평가 및 성과측정방안 연구. 13p 재구성

3. 선행연구 고찰

가. 정책 측면

- 국내 식품산업 및 식품기업 유치 관련 연구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가공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 이후 아시아 식품 시장 성장으로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요구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음³⁾
- 식품산업 관련 연구는 국내외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
- 강태진(2006)은 국내 식품산업이 원료의 수입의존도와 부처별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처별 역할 조정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하였음
- 이상만(2008)은 식품산업의 양극화, 통계관리 미비, R&D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행정체계 일원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
- 김동환(2008)은 식품산업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 수준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업과의 연계 발전과 가치사슬 체계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이정화·황성혁(2012)은 푸드 시스템의 관점에서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발전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박재홍·강혜정(2013)은 2008년 이후 추진된 식품산업 정책을 평가하여 원료수급지원 및 컨설팅과 관련된 정책이 식품제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힘

〈표 2-5〉 식품산업 관련 연구 동향(정책)

구분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결과
정책	강태진 (2006)	식품산업현황과 발전방안	식품산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제언	• 국내 식품산업은 원료의 수입의존도 부처별 중복기능 문제 발생 • 부처별 역할을 통합하고 위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 조정하여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전략이 필요함

3) 2007년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8년 「농업·농촌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며, 이후 세부산업별 개별법안이 제정

구분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결과
정책	이상만 (2008)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 방향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식품산업 정책 추진의 시사점 도출	- 국내 식품산업은 규모 양극화, 통계관리 미흡, R&D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대기업과 소기업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 행정체계 일원화, 주체 간 역할분담 필요
	김동환 (2008)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업연관 체계를 반영한 식품산업정책 방향 제시	- 국내 식품산업은 영세성과 낮은 기술 수준 등의 문제 발생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과 연계 강화, 소비자 지향적 정책, 공급사슬적 접근이 요구됨
	황익사· 김관수 (2010)	농어촌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농식품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농어촌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 지역식품산업정책은 사업별 연계성이 약하고 R&D 기반과 제품화 기반이 취약함 - 지역별 전통식품기업 육성, 광역 지원조직을 통한 사업간 연계, 안정적 원료공급체계 필요
	이정화· 황성혁 (2012)	식품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	푸드시스템의 측면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푸드시스템은 식품산업의 가치 사슬구조를 포괄하며 기능성(편의, 영양 등)이 강조되고 있음 - 식품산업은 농업과의 연계 발전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
	박재홍· 강혜정 (2013)	주요 식품산업 정책평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제시	- 원료매입 지원과 컨설팅은 기업의 매출액 상승에 큰 영향 2008년 이후 수행된 식품정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속 확대 추진 필요
	최지현 (2017)	식품산업의 산업융합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진흥정책 비안 마련 연구	국내 식품산업 여건 분석과 정책성과 평가를 토대로 중장기 식품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	- 국내 식품산업은 R&D 투자 확대, 식품클러스터의 질적 성장, 통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 - 식품산업 정책은 혁신 역량 제고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나. 산업 측면

- 식품산업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이후, 산업 측면에서 식품산업(주로 제조업)의 특성과 식품시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 이현동(2009)은 수산식품산업(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후방 연쇄효과가 우수함을 밝혔으며,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였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6)는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단계별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가공단계에서는 설비의 운용 효율성 증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2016)는 국내외 식품시장 분석을 통해 기능성 식품(건강, 안전, 영양, 간편)을 중심으로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 한국무역보험공사(2018)는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수익성은 국제 곡물 가격, 환율, 가격 인상, 공급자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음

〈표 2-6〉 식품산업 관련 연구 동향(산업)

구분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결과
산업	이현동 (2009)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수산식품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수산식품의 구조, 경제성, 고용 등 파급효과 도출	• 수산식품 제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전방보다 높음 • 수산물, 도소매, 운수업을 중심으로 경제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농림수산 식품부 외 (2016)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분석	국내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구조 도출하고, 단계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식품제조업은 원료·가공·생산·유통·판매와 보조적 활동으로 구성 • 농산물생산비 절감(투입), 설비효율화(가공), 유통효율화(유통) 요구 • 보조활동은 기업규모와 지역별 정책추진, R&D 확대 등이 필요
	농림축산 식품부 (2016)	국내외 식품 시장 정보 및 동향 분석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 분석을 토대로 국내 식품산업 육성의 시사점을 제시	• 국내 식품산업은 기능성(건강·안전·영양·간편)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바이오융합 기술 확보 필요
	농림축산 식품부 외(2016)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국내 식품산업의 산업연관효과와 투입산출구조 분석	• 국내 식품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자금육과 도축육이 가장 크며, 국산 농산물 이용률은 67% 이하임
	박익성 유철중 (2016)	전북지역 농생명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전북 농생명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	• 전북은 정책추진의 효율성 확보, 영세 업체 자생력 강화, 관광산업 연계 전략이 요구됨
	한국무역 보험공사 (2018)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최근 트렌드	식품산업(제조업)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수출 확대 시사점 도출	• 식품산업은 세계진출, 기능성식품 성장, 원료수입의존도 이슈 존재 • 수익성은 국제곡물가격, 환율, 가격, 공급자 파워와 관련

다. 입지 측면

- 식품산업 정책이 국가 중심에서 지역 단위로 구체화되면서, 지역 식품산업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 김성용(2013)은 경남지역에 초점을 두고 식품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 농어업 연계시스템 마련과 항노화 관련 기업 집적화 등을 제시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하여, 김경필 외(2014)는 지원프로그램의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이용도가 높은 지원기능 확대와 R&D 네트워크 구축을 주장하였음
- 조승현 외(2016)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안정성, 기능성, 가치사슬 구조를 반영한 식품기업 유치전략이 필요함을 주장
- 최정은 외(2018)는 전북의 식품제조업 구조와 주요 집적지를 대상으로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도시화 경제 확보, 지역농업과의 연계,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

〈표 2-7〉 식품산업 관련 연구 동향(입자기업유치)

구분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결과
입지 · 기업 유치	김성용 (2013)	지역농업과 연계한 경남 지역 식품산업 육성하재!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고, 정책 추진과제 제언	• 식품산업은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경남은 컨트롤타워 마련, 지역 농업 연계 강화, 항노화 분야 집적화 등이 필요
	김경필 외 (201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R&D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용도가 높은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
	박건형 외 (2015)	강원지역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유치 지원제도별 특성을 비교하고, 강원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지방의 기업유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 수립 필요 • 이전효과가 큰 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조승현 외 (2016)	식품산업 경쟁력의 원천, 국가식품클러스터 : 도약과 응집을 위한 제언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및 기업유치 전략 제언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은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으로 나타남 • 안정성, 기능성, 가치사슬을 반영한 효과적인 식품기업 유치와 협력 R&D 강화가 요구됨
	최정은 외 (2018)	전북지역 식품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전북 식품제조업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방향 제시	• 전북 식품산업은 도시화 경제 확보, 지역농업과 연계, 혁신역량 제고가 요구됨

4. 소결

- 본 장은 식품산업의 법적·학술적 정의를 통해 본 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 동향(산업특성, 정책)을 조사하여 식품기업 유치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
- 식품산업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치의 관점에서는 식음료품 제조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은 연구자에 따라 광의의 개념에서 농업에서 유통·외식업을 포괄할 수 있으나, 식품산업 여건분석과 기업유치 관점에서는 협의적으로 식품제조업에 초점
- 식품산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고유한 산업, 구조, 시장 특성을 나타내며, 이를 반영한 기업의 유치전략이 필요함
 - 식품산업은 기술혁신의 위험이 낮아 경쟁 강도가 크고, 원료가 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 지역농업과의 연관성이 큰 산업에 해당함
 - 식품산업은 1차(소재 생산)와 2차 가공산업(식품 가공)으로 구분되며, 부문별로 경쟁 구조와 비용구조가 상이함
 - 식품산업은 대기업 주도형 시장(표준화된 제품)과 중소기업 주도형 시장(전통식품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기업은 수직·수평적 통합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 식품산업 정책은 FTA 대응을 위해 2008년 이후 본격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외식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개정 이후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식품산업 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측면의 연구에서 산업구조 분석으로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장되고 있음
 - 식품산업의 개념, 특성, 정책 및 선행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을 비교하여 지역 단위 식품여건 분석의 토대 마련이 필요함

3

장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Jeonbuk Institute

-
1. 개요
 2. 전북 식품산업 현황
 3. 식품산업 정책 및 기업유치 제도
 4. 소결

제 3 장 전라북도 식품산업 현황

1. 개요

- 전북 식품산업 현황은 식품기업 유치 여건분석에 앞서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현황과 정책 동향으로 구성됨
- 전북 식품산업 일반현황은 전북의 식품기업(업체, 종사자, 업종 등), 대학(학과, 재학생 등), 연구기관(중앙, 지자체 출연연) 등 산학연 현황을 조사함
- 전북 식품산업 정책 동향은 전북의 식품산업 육성 방향, 주요 정책 현황,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제도를 조사함

구분	분류	내용
전북 일반 현황	식품기업 현황(산)	• 시도별 식품기업 현황(추이) • 전북 식품산업 업종 현황
	식품 관련 대학 현황(학)	• 전북 식품 관련 대학/학과 현황 • 전북 식품 관련 재학생 현황
	식품 관련 연구기관 현황(연)	• 전북 식품 관련 출연(연) 현황 • 전북 식품 관련 지자체 출연연구소 현황
↓		
전북 정책 동향	식품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전북 산업정책 및 식품산업 정책 방향 • 식품 관련 정책별 주요 내용
	식품산업 및 기업유치 제도	• 전북 식품산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전북 식품기업 유치 지원제도 현황

〈그림 3-1〉 전북 식품산업 현황 조사개요

2. 전북 식품산업 현황

가. 식품기업 현황

- 2017년 기준 전국의 식품제조업체는 60,089개, 종사자는 346,021명이며, 도 지역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농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 특별·광역시외의 식품제조업체는 17,143개(전국 28.5%), 종사자는 68,669명(전국

19.8%)이며, 2008년 대비 식품제조업체 수는 -4.0% 감소율을 나타냄

- 도 지역의 식품제조업체는 42,946개(71.5%, 성장률 16.6%), 종사자는 277,354명(80.2%, 성장률 32.5%)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전북의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전국의 7.6%(종사자는 9.8%) 수준으로 비중이 높으며,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전국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 2017년 전북의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4,159개(전국 7.6%), 종사자는 26,585명(전국 9.8%)에 달하며, 이는 전북 제조업(전국 2.9%)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 2008~2017년 전북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연평균 1.6%(종사자는 3.7%) 성장하여, 전국 성장률(사업체: 1.1%, 종사자: 2.8%)보다 큼

〈표 3-1〉 시도별 음식료품 제조업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구분	음식료품 제조업체 수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수		
	2008	2017	증감률	2008	2017	증감률
전라북도	3,580 (6.6)	4,159 (7.6%)	16.2	19,189 (7.1%)	26,585 (9.8%)	38.5
특별·광역시	17,853 (32.6)	17,143 (28.5)	-4.0	61,357 (22.7)	68,667 (19.8)	11.9
서울	5,797	5,242	-9.6	14,490	14,461	-0.2
부산	3,654	3,457	-5.4	15,321	17,540	14.5
대구	2,820	2,669	-5.4	9,359	10,357	10.7
인천	1,898	1,979	4.3	9,805	11,450	16.8
광주	1,406	1,383	-1.6	4,839	5,659	16.9
대전	1,310	1,369	4.5	4,809	5,937	23.5
울산	968	1,044	7.9	2,734	3,263	19.3
도 지역 (전북 포함)	36,836 (67.4)	42,946 (71.5)	16.6	209,245 (77.3)	277,354 (80.2)	32.5
경기	8,248	10,246	24.2	58,107	80,500	38.5
강원	2,704	3,326	23.0	13,944	19,893	42.7
충북	2,668	3,062	14.8	21,590	31,910	47.8
충남	4,004	4,572	14.2	24,553	31,839	29.7
전남	4,864	5,427	11.6	21,119	25,087	18.8
경북	5,489	6,087	10.9	22,145	27,196	22.8
경남	4,608	5,257	14.1	24,923	29,209	17.2
제주	671	810	20.7	3,675	5,135	39.7
전국	54,689 (100.0%)	60,089 (100.0%)	9.9	270,602 (100.0%)	346,021 (100.0%)	27.9

주: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하였음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7)

○ 전북 식품산업의 대부분은 10명 미만의 소기업이며, 최근의 식품산업 성장 역시 종사자 50명 미만의 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북 식품제조업체는 10명 미만 업체가 3,800개(91.4%), 10~49명 업체가 284개(6.8%)로 50명 미만 업체가 98.2%를 차지하고 있음
- 10명 미만 업체 비율(91.4%)은 전국(90.9%)과 도 지역(89.6%) 수준보다 높으며, 업체당 종사자는 6.4명으로 도 지역(6.5명)보다 작은 수준을 나타냄

〈표 3-2〉 종사자 규모별 식품제조업 현황(시도별)

(단위: 개, 명, %)

구분	10명 미만	10~49명	50~99명	100~300명	300명 이상	합계	업체당 종사자
전라북도	3,800 (91.4)	284 (6.8)	43 (1.0)	26 (0.6)	6 (0.1)	4,159 (100.0)	6.4
특별·광역시	16,181 (94.4)	819 (4.8)	85 (0.5)	52 (0.3)	6 (0)	17,143 (100.0)	4.0
서울	5,110	124	3	4	1	5,242	2.8
부산	3,166	240	34	15	2	3,457	5.1
대구	2,533	117	10	7	2	2,669	3.9
인천	1,774	170	20	15	0	1,979	5.8
광주	1,311	60	8	4	0	1,383	4.1
대전	1,287	70	5	6	1	1,369	4.3
울산	1,000	38	5	1	0	1,044	3.1
도 지역 (전북 포함)	38,461 (89.6)	3,654 (8.5)	515 (1.2)	277 (0.6)	39 (0.1)	42,946 (100.0)	6.5
경기	8,823	1,171	151	86	15	10,246	7.9
강원	2,987	286	38	13	2	3,326	6.0
충북	2,571	356	75	52	8	3,062	10.4
충남	4,020	444	64	41	3	4,572	7.0
전남	5,023	359	32	13	0	5,427	4.6
경북	5,733	296	35	21	2	6,087	4.5
경남	4,792	372	68	23	2	5,257	5.6
제주	712	86	9	2	1	810	6.3
전국	54,642 (90.9)	4,473 (7.4)	600 (1.0)	329 (0.5)	45 (0.1)	60,089 (100.0)	5.8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7)

○ 전북 식품제조업 업종은 기타 식품(38.6%), 도축·육류 가공(26.6%), 곡물 가공(9.6%)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종사자 기준)

- 기타 식품제조업의 종사자 합계는 10,251명(38.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만, 전국 비중(46.8%)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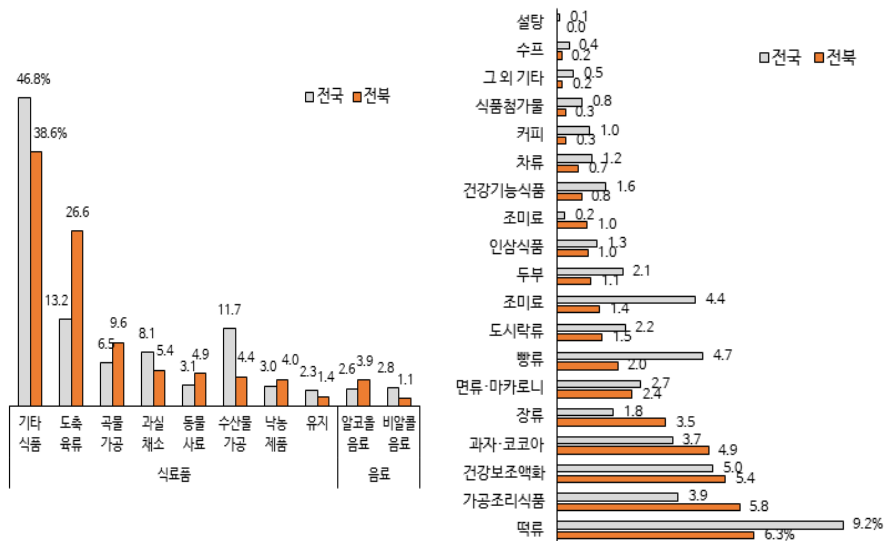
- 전북의 도축·육류 가공업은 7,063명(26.6%), 곡물 가공은 2,562명(9.6%)으로 전북 비중(도축·육류: 13.2%, 곡물가공: 6.5%)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기타 식품제조업의 경우에는 떡류(16.4%), 가공식품(15.2%), 건강보조용 액화 식품(14.0%), 과자·코코아(12.6%), 장류(9.0%) 비중이 67.2%를 차지함

- 가공·조리식품(62.2명), 면류·마카로니(26.7명), 식초·발효(13.5명) 등 식품소재와 관련된 1차 가공업체의 경우 업체당 종사자 수는 비교적 크게 나타남
- 떡류(2.1명), 건강보조용 액화 식품(1.6명) 등 최종 식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함

○ 업체당 종사자 수는 4.0~27.0명으로 업종별 차이가 큰 편이며, 낙농·육류 관련 업종의 종사자가 크게 나타남

- 도축·육류 가공업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45.6명으로 가장 많고, 낙농제품(27.0명), 동물용 사료(16.4명)의 순서로 종사자 규모가 크게 나타남
- 동·식물성 유지(3.5명), 곡물 가공(3.7명), 기타 식품(4.0명)의 순서로 업체당 종사자가 적으며, 기타 식품은 사업체 비중이 61.6%로 영세업체 비중이 높음



〈그림 3-2〉 전북 식품업종별 종사자 비중(좌: 소분류, 우: 세세분류(기타))

〈표 3-3〉 전라북도 식품제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
		업체수	비율	종사자	비율	
식료 품	기타 식품제조업	2,560	61.6	10,251	38.6	4.0
	떡류	795	31.1	1,680	16.4	2.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25	1.0	1,555	15.2	62.2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906	35.4	1,438	14.0	1.6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124	4.8	1,290	12.6	10.4
	장류	147	5.7	925	9.0	6.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24	0.9	640	6.2	26.7
	빵류	37	1.4	519	5.1	14.0
	도시락류	49	1.9	387	3.8	7.9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124	4.8	362	3.5	2.9
	두부 및 유사식품	85	3.3	289	2.8	3.4
	인삼식품	99	3.9	265	2.6	2.7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19	0.7	257	2.5	13.5
	건강기능식품	30	1.2	213	2.1	7.1
	차류	42	1.6	184	1.8	4.4
	커피	24	0.9	84	0.8	3.5
	기타 식품 첨가물	10	0.4	74	0.7	7.4
	그 외 기타 식료품	9	0.4	47	0.5	5.2
	수프 및 균질화식품	11	0.4	42	0.4	3.8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5	3.7	7,063	26.6	45.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699	16.8	2,562	9.6	3.7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59	6.2	1,445	5.4	5.6
음료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80	1.9	1,309	4.9	16.4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7	2.8	1,177	4.4	10.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39	0.9	1,054	4.0	27.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8	2.6	380	1.4	3.5
	알코올음료 제조업	99	2.4	1,047	3.9	10.6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43	1.0	297	1.1	6.9
	합계	4,159	100.0	26,585	100.0	6.4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7)

나. 식품 관련 대학 현황

- 전북의 22개 대학(산업·전문대 포함) 중에서 12개 대학에서 식품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식품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도내 대학(원)에 개설된 식품 관련 학과는 69개(재학생: 6,937명)에 달하며, 식품공학, 화학, 생명공학, 한약, 농식품자원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됨

- 표준분류체계⁴⁾(소분류)에 따르면, 생명과학(13개, 19.1%), 조리과학(8개, 11.8%), 식품 가공·식품영양학(각 7개, 10.3%)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도내 4년제 식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12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은 5개(57개 학과), 전문대학은 7개(12개 학과)임

- 도내 4년제 대학 9개 중 5개 종합대학에 식품 관련 학과 57개가 개설되어있으며, 5,609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학부생 5,111명, 대학원생 498명)
- 도내 전문대학 13개 중에서 7개 대학에 식품 관련 학과 12개가 개설되어있으며, 1,328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표 3-4〉 전라북도 4년제 대학 식품 관련 학과 및 재학생 현황

(단위: 개, 명)

대학명		학과 수	재학생 수				비고
			전문	학부	대학원	계	
4년제	군산대	10	-	881	71	952	식품영양, 화학공학, 생명공학과 등
	우석대	9	-	779	54	833	식품생명공학, 외식산업조리학, 한약학 등
	원광대	12	-	1,330	78	1,408	식품생명공학, 한약학, 화학공학 등
	전북대	20	-	1,549	262	1,811	식품공학, 한약자원학, 생명과학 등
	전주대	6	-	572	33	605	바이오기능성식품학, 농생명융합학 등
	소계	57	-	5,111	498	5,609	
전문대	군장대	3	97	-	-	97	농식품자원, 호텔외식조리, 바리스타
	서해대	1	1	-	-	1	외식조리산업과
	원광대호텔	2	704	-	-	704	한방건강학과, 자연건강학과
	원광보건	2	367	-	-	367	식품영양(학)과, 외식조리(학)과
	전북과학	1	38	-	-	38	호텔외식조리학과
	농수산대	1	57	-	-	57	농수산가공학과
	호원대	2	64	-	-	64	외식조리학부, 호텔외식조리학과
	소계	12	1,328	-	-	1,328	
합계		69	1,328	5,111	498	6,937	

자료: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자료 확인일 : 2019. 12. 04.)

다. 연구기관 현황

○ 전북에는 식품과 관련된 이공계 출연연구원이 4개(본원 1, 지역조직 3) 있으며,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4)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5대 계열(유사성, 배타성, 포괄성, 규모성, 보편성, 유연성)을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편제단위 현황 및 이력 관리를 위한 교육편제단위 분류체계임

- 한국식품연구원(본원)은 식품 분야 연구 · 개발을 수행하는 300명 규모의 국내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완주(혁신도시)에 위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본원), 원자력연(첨단방사선), 안전성평가연(흡입안전성)은 직·간접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읍에 집중되어 있음

○ 전북 지자체에서 출연해 운영 중인 식품 관련 연구기관은 5개(광역: 1, 기초: 4)이며, 도내 식품산업 정책 수립, 전략품목 기술개발, 기업 지원 담당

-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도의 식품산업 정책 및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R&D 수행 및 기업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 연구소는 주로 지자체 전략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기업지원, 사업기획 기능을 담당하며, 주로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
- 지자체 연구소는 출연연 비해 인력 규모는 작지만,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네트워크가 강한 특성을 보임

〈표 3-5〉 식품 분야 연구기관 현황

구분		위치	인력 (연구)	역할
출연 (연)	한국식품연구원 (본원)	완주 (혁신도시)	299 (176)	•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보
	한국생명공학연 (전북본원)	정읍 (과학단지)	112 (69)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 생물자원 배양 및 장기보존기술개발
	원자력연 (첨단방사선)	정읍 (과학단지)	113 (96)	• 방사선/동위원소 이용 기술개발 • 방사선 기반 생명공학 연구
	안전성평가연 (흡입안전성평가)	정읍 (과학단지)	72 (37)	• 영장류 및 흡입독성 시험 • 안전성 시험(CRO 인프라 구축)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전주 (혁신도시)	60 (53)	• 전북 농생명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 기업지원/선도사업 발굴·지원
지자체 출연연	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임실 (치즈파크)	18 (12)	• 임실 치즈 유산균주 등 개발 • 치즈 관련 기업 지원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고창 (북분자단지)	25 (10)	• 미생물 활용 발효식품 개발 • 건강기능식품/특화자원소재 개발
	진안홍삼연구소	진안 (홍삼단지)	21 (20)	• 기능성 시험 검사 및 신뢰 확보 • 홍삼 한방 R&D 추진 및 기업지원
	(재)발효미생물산 업 진흥원	순창 (장류특구)	34 (19)	• 우수 발효미생물 균주 확보 • 전통 장류 산업 동반성장 견인

자료: 각 기관 경영공시자료를 참조하였음

3. 식품산업 정책 및 기업유치 제도

가. 식품산업 관련 정책 현황

1) 검토 정책 개요

○ 전북의 식품산업 육성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적 측면과 기업유치 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정책 측면은 2000년대 이후 전라북도에서 수립된 산업육성 및 식품산업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조사
- 기업유치 제도의 경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식품산업 관련 조례와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조사하였음

○ 전라북도 식품산업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과 식품산업 관련 된 계획을 조사하였음

-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전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중장기 지역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하위계획의 지침이 됨
- 전북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2020~2024)은 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산업구조 체질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해당함
- 전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산업 중에서 농업·농촌·식품산업에 한정하여 발전상을 제시하는 법정·기본계획에 해당함
- 전북 식품산업 육성계획(2017)은 식품산업에만 초점을 두고 단기적으로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의 방향과 세부 시책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에 해당함
- 전북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2018)은 농식품산업의 수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 정책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에 해당함

〈표 3-6〉 식품산업 관련 정책 조사대상 개요

구분	전라북도 종합계획	전북 혁신성장 산업 육성계획	전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전북 식품산업 육성계획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계획
개요	전북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 방향 제시	6대 혁신성장 산업육성 실행계획	전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상 제시	전북 식품산업 육성 방향과 시책사업 제시	농식품 수출 지원 방향과 사업 제시
시간 범위	2012~2020 (9년)	2020~2024 (5년)	2019~2023 (5년)	2017년 (단기)	2018년 (단기)
내용	종합	산업	농업·농촌·식품	식품산업	농식품(수출)
특성	• 법정계획 • 종합계획 • 장기계획 • 지침계획	• 산업계획 • 중단기계획 • 실행계획	• 법정계획 • 기본계획	• 단기계획 • 세부시책	• 단기계획 • 세부시책
비고	도 최상위 계획/ 시군정책 지침	산업구조 체질 개선 구체화	전북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	단기적 식품산업 육성 시책제시	농식품 수출촉진 사업 제시(단기)

자료: 각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음

2) 정책별 주요 내용

가)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은 전북 발전 방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도내 균형발전, 고도화, 발전기반 구축의 내용이 포함

- 도내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시·군)별 전략·특화 식품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제시
- 고도화 측면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확대, RFT·생물산업 융합을 통한 식품산업 고도화를 제시
- 발전기반 구축은 농식품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반영한 식품산업 육성, 지역별 농식품 미니클러스터 조성, 소규모 식품기업 지원 등이 제시되었음

○ 전라북도를 공간적으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특화된 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중추도시권(전주·완주·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혁신기관 중심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고, 국제생산·교역권(군산·익산·김제)은 국제교역과 물류거점 조성을 제시
- 생태영농복합휴양권(정읍·부안·고창)은 고부가 생명·방사선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산악청정·관광레저휴양권(무주·진안·장수)은 고랭지 특화작물 클러스터 조성 추진

〈표 3-7〉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의 식품산업 육성 방향

구분		내용
비전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거점 전라북도
목표		•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과 지역 상생발전 • 신성장산업과 한류문화 중심지 육성 •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실현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식품산업 관련 추진전략		• (균형발전) 중추도시권 육성과 지역 간 상생발전 • (고도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 (발전기반 구축) FTA에 대응한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
세부 과제 (식품)	균형/특화발전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전략/특화 식품산업 육성 • 시·군별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고도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기 완공 및 식품산업 투자유치 확대 • RFT와 생물산업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 고도화
	발전기반 구축	•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구조를 반영한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의 안정적 기반구축(지역 미니클러스터 조성)
권역 (식품)		

자료: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요약·정리하였음

나)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2020~2024)

○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은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혁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수립(전라북도, 2019)

-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2017)과 한국GM 공장 폐쇄(2018)로 인한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제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성장산업 육성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
- 전통과 첨단업의 융합 가속 성장으로 전북경제 대도약을 비전으로 신산업 발굴 및 주력 산업 고도화,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 5대 전략을 제시

○ 식품산업 포함 스마트농생명 산업은 혁신성장산업으로서, 미생물·기능성 식품 중심 R&D, 수출, 기능·안전성,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육성정책 추진

- 핵심프로젝트 중 스마트농생명 분야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는 1.6조 원으로 6대 혁신 혁신성장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큼
- 식품산업 분야 핵심프로젝트는 바이오·미생물 산업과 기능성 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R&D, 수출지향, 기능·안전성, 인재양성과 관련된 전략을 추진

〈표 3-8〉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2020~2024)

구분		내용
비전		전통과 첨단 융합 가속성장으로 전북경제 대도약
5대 전략		- 신산업 발굴·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다각화 -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창업기반 활성화 및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 - 전문인력 양성공급 플랫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R&D 기술사업화 촉진 및 혁신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식품 산업	주요 전략	(농생명 R&D/상용화)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및 기술이전 활성화 (수출지향산업 육성): 수출지향 제품 개발, 국가별 지원 컨트론타워 구축 (기능성/안전성) 제품 효능/안전성 검증 기반구축 및 기능성 식품소재 생산 (전문 인재양성) ICT 융복합 생산유통 시스템 실현 및 융복합 인재양성
	핵심 과제	(바이오/미생물) 바이오헬스 중심 전북형 미생물 글로벌 산업기반 구축 (기능성 식품) 미래기능식품의 글로벌 메카 구축
비고		

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 계획(2019)

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전라북도 농업·농촌·식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5년 단위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임(전북연구원, 2019)
- 2008년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식품산업 정책이 농정 분야에 포함되면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에 해당
-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9~2023)이 수립되

었으며, 시기별 주요 농업, 농촌, 식품산업 관련 이슈들이 반영되었음

- 2019년 새롭게 수립된 계획에서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스마트 농생명 산업’, ‘사람 찾는 농촌’ 등 4가지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9~2023)에서는 농식품산업의 정책적인 중요도가 증가하였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

- 2019년 수립된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스마트농생명 산업, 사람 찾는 농촌’을 비전으로 제시
- 지난 계획과 달리 스마트농생명과 관련된 비전과 목표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식품산업의 정책적 중요도가 증가하였음
-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발효·미생물 산업’, ‘마케팅 강화’, ‘맞춤형 R&D 강화’, ‘6차 산업화’, ‘향토식품산업’ 등 4개 과제를 제시

〈표 3-9〉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전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4~2018)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9~2023)
비전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스마트농생명 산업(추가), 사람 찾는 농촌
목표	• 농민 행복 • 농업 안정 • 농촌 활력	• 보람 찾는 농민 • 제값 받는 농업 • 스마트농생명 산업 • 사람 찾는 농산어촌
추진 과제 (식품)	• (수출 활성화) 농식품 세계유통망 확대 • (6차 산업화) 도농연계지원, 지구조성 • (향토식품산업) 향토식품산업 육성	• (마케팅) 농식품 마케팅 활성화 • (맞춤형 R&D)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 • (6차 산업화)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 (향토식품산업) 향토식품산업 육성

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계획(2017)

라)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계획(2017)

○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계획은 식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단기적인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수립되었음

- 전라북도 민선 6기 5대 첫 번째 핵심과제인 농업농촌 삼각농정에 맞추어 식품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육성 방향은 크게 ‘농생명 R&D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성, '지역농식품산업 육성', '마케팅·수출 지원'으로 구분됨

- 농생명 R&D 지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강화, 'R&D 지원체계 운영', '발효·미생물 R&D 지원', '지역산업진흥(건강기능식품/바이오소재)'이 포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성과 관련하여 'R&D/지원센터' 등 산단 내 기업지원시설 구축과 식품기업·연구소 유치 관련 사업이 포함
-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 '향토건강식품 지원', '지역농업 연계 산업육성' 등 지역특화·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추진
- 지역 농식품 마케팅 및 수출지원을 위해 '국제한식조리학교 운영',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개최' 등 전북 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들이 포함됨

〈표 3-10〉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방향

구분	농생명 R&D 지원 및 기반확충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	지역 농식품 마케팅 및 수출지원
방향	• 농생명 고부가가치화 R&D 추진 • 발효·미생물산업 기반 구축	• 식품 전문 국가산단 최초 조성 • 식품기업/연구소 유치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 6차산업화 통한 지역 식품산업 육성, 소득 창출 • 지역농업연계 식품산업육성	• 농식품 수출확대 인프라 구축 • 수출기업 마케팅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주요 내용	• 맞춤형 R&D • R&D 지원센터 (생진원+5지자체 연구소) • 발효식품, 지역별 R&D 지원	• 식품기업지원시설 /R&D센터 구축 •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 활성화	•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 향토 건강기능식품 명품화 • 중소기업 지원	• 국제한식조리학교 운영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지역 식생활·식문화 실천교육
비고	• 중소기업 R&D • 발효·건강기능·바이오소재	• 지원시설 조성 • 기업/연구소유치	• 동부권/지역농업 연계 육성	• 수출 강화

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계획(2017)

○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계획」에서는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식품산업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부권 특화 식품업종 육성(남원-허브 등), 향토건강식품 육성(완주-생강 등), 지역농업연계 식품산업 육성(순창-장류 등)이 추진됨

〈표 3-11〉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육성

구분	동부권 대표 식품산업 육성	향토건강식품 육성	지역농업 연계 식품산업
내용	• 남원(허브) • 진안(홍삼 한방) • 무주(천마) • 장수(장수식품) • 임실(치즈) • 순창(건강장수식품)	• 완주(생강) • 진안(홍삼) • 임실(영귀) • 순창(블루베리/청국장) • 고창(복분자) • 부안(오디·봉)	• 순창(장류/발효식품) • 고창(복분자/장어) • 정읍,고창,부안(베리소스) • 정읍,완주(식품소재/반가공)

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계획(2017)

마)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계획(2018)

-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촉진계획」은 수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식품산업 관련 중단기계획으로 ‘인프라’, ‘세계유통망’, ‘협력체계’의 3대 전략을 제시
- 수출 활성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전북이 우위를 지니는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전략이 포함됨
 - 식품 관련 세계유통망 강화를 위해서 식품 박람회, 판촉 행사, 바이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공격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함
 - (중앙)행정-업체-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SNS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함

〈표 3-12〉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촉진계획

구분	내용
목적	•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전략	• (인프라 구축) 수출경쟁력 강화 및 전략품목 육성 • (세계유통망 강화)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중앙·관계기관과 협력 수출 지원사업 추진
세부 전략 내용	- 인프라 구축 • 물류비 지원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 - 유통망 강화 • 시장개척(박람회, 판촉 행사), 대중국 수출확대 및 수출상담회 개최 - 협력체계구축 • 관계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 및 SNS 활용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

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계획(2017)

나. 식품산업 및 식품기업 유치 관련 제도

1) 식품산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전북의 식품산업 관련 조례는 2000년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설치를 위해 제정된 조례에서 시작되었음
 - 2000년 식품위생 관련 자금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군 단위에서도 관련 조례가 차례로 제정되었음
- 2008년 이후 식품산업이 위생에서 산업육성의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2010년 이후 전북도 차원의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 조례가 제정
 - 2010년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의 지역산업으로 생물산업(농식품 포함)이 추가되어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2013년에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전북의 농식품산업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음
 - 2015년에는 소규모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가소득 확대를 목적으로 「전라북도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 2014년 이후 개별 식품산업(쌀 가공, 지역 전통주 등)별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 전북 내 기초지자체별 조례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시군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제정·운영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식품진흥기금, 소규모 식품 가공업 육성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상위 제도를 반영한 기초지자체 조례가 제정
 - 지역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으로 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조례들은 2010년 이후 활발하게 제정
 - 순창군의 경우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1998년에 전통장류 산업의 품질향상과 특산단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임실(치즈), 남원(이너뷰티식품)는 각 시군의 정책 시점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각각 2016년, 2019년에 제정되었음

〈표 3-13〉 전북 식품산업 육성 관련 주요 자치법규 현황

구분		목적	주요 내용	비고
전북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식품위생법 의거)	• 기금 조성 및 운용 •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00 제정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 전북경제 선도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	• 지역산업에 생물(농생명·식품)산업 추가('10) • 지역산업 지원사업 범위	'02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조례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 • 대외경쟁력/소득증대	• 수출기반 확대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 유통/해외시장 개척 지원	'13 제정
	전라북도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농가소득 확대 • 가공식품 안전성 •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 소규모 식품 가공업 지원 • 가공식품 품질관리 • 가공 지원센터 운영	'15 제정
	개별 식품산업 육성 관련 (농촌융복합, 쌀가공, 약용작물, 지역전통주 등)	• 각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 산업별 육성계획 수립 •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및 내용	'14 이후
시군	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 등	• 순창 전통장류 식품의 품질향상 지원 • 특산단지 운영 관련	• 제조기능인 등 순창군 장류산업 육성 지원 • 심의위원회 설치	'98
	시군 단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군 단위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사항	• 기금의 용도와 조성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00 이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시군별)	• 시군단위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농업·농촌·식품산업 지원 범위와 심의회 운영 • 전주·군산·김제·남원·무주·완주·임실·장수·정읍	'11 이후
	•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 조례('14) •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17)	• 지역농식품명인·명품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규정	• 심사위원회 설치 • 명인 발굴 및 육성 지원	'14 '17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 내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품질관리	• 지역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지원 범위와 내용 • 식품 안전성 및 품질관리 • 김제·익산·진안	'15 이후
	임실엔 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낙농/치즈산업 경쟁력 • 특구 계획 및 특화사업 관련 규정	• 특화사업의 범위 •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16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	•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기반조성 • 음식관광 활성화	• 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업지원 범위 • 심의위원회 설치	'17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 이너뷰티식품 공장 운영 및 관리 규정 •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이너뷰티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인력 지원 • 육성위원회 설치	'19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

2) 식품기업 유치 지원제도

-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지자체(전북·시군) 조례에 따른 지원제도가 가장 대표적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홍진기, 2012)
- 전북과 시군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

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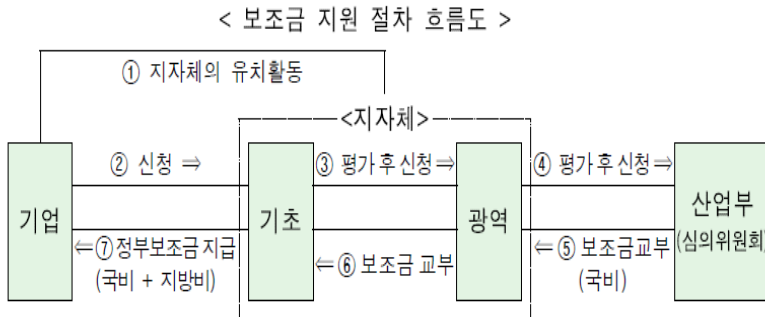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04년부터 지방투자기업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자금임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산업입지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수도권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형태의 기업지원제도임
- 2004년 당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초점을 두었으나, 비수도권 기업의 신·증설(2011), 국내 복귀기업(2012)으로 지원대상과 기준이 점차 확대되었음

〈표 3-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역구분	유형	지원비율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	-	9% 이내	45 : 55
	설비	6% 이내	8%이내	11% 이내	
일반지역 (전주·익산·완주)	입지	-	10% 이내	30% 이내	65 : 35
	설비	8% 이내	11% 이내	14% 이내	
지원우대지역 (기타 시·군)	입지	-	20% 이내	40% 이내	75 : 25
	설비	11% 이내	19% 이내	24% 이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입지	-	25% 이내	50% 이내	75 : 25
	설비	14% 이내	24% 이내	34% 이내	

자료 : 박건우·윤성일(2019), 전라북도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기업의 입지와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비율이 차등적으로 지원됨
 - 전라북도는 일반지역(전주·익산·완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 지원우대지역(기타 시·군)으로 구분되어 투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비의 도비 부담 비율은 일반지역(도비 30%), 성장촉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비 50%), 동부권(도비 70%)의 순서로 높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이 기초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의 심의를 통해 지원되며, 공장설립 전후에 걸쳐 보조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임
 -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1차 보조금은 현지실사를 통한 지원여부 검토 이후에 70%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공장등록 이후에 나머지 30%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그림 3-3>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전북은 2013년 이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액은 약 1,230억 원 규모(1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국비 889.4억 원, 지방비 341.1억 원)

〈표 3-1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비율
전북	889.4	341.1	1230.5	15.8
충북	565.7	393.9	959.6	12.3
충남	565.5	307.8	873.3	11.2
경북	562.3	205.8	768.1	9.9
강원	521.3	189.9	711.2	9.1
세종	418.5	153.2	571.7	7.3
경남	422.3	138.9	561.2	7.2
부산	304.4	161.1	465.5	6.0
전남	292.2	128.9	421.1	5.4
대구	299	114.9	413.9	5.3
제주	194.5	98.4	292.9	3.8
광주	195.5	62.3	257.8	3.3
대전	40.0	49.0	89.0	1.1
울산	58.2	29.5	87.7	1.1
경기	54.8	29.5	84.3	1.1
합계	5,383.6	2,404.2	7787.8	100.0

자료 : 김경수의원 보도자료(2017)

나) 전북의 기업 및 투자촉진 지원제도

- 전북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2006년 제정)」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함
- 국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사전 MOU 체결이 요구되며, 사업 기간, 투자금액, 상시고용, 업종 등에 대한 조건이 존재함
 - 상시고용 기준은 20명(연구소·ICT·탄소·U턴은 5명)이며, 기존기업의 경우에는 주력 산업과 첨단업종 등에 한해 기준 이상 고용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지급됨
 - 투자금액 기준은 10억 원(연구소·ICT·탄소·U턴은 1억 원)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됨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 지원항목과 함께 산업단지 내 임대료 또는 분양가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정상가의 50% 내에서 추가 지원됨(투자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표 3-16〉 전라북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현황

구분	지원대상(기준)			지원내용	한도
	상시고용	투자액	기타		
국내 기업	본사·공장	20명	10억 초과	기준 초과투자액 10%	50억 원
	연구소	5명(연구)	10억 초과		
	집단지전	합계 20명	10억 초과		
	특수업종	5명	1억 초과		
	생산자서비스	20명	10억 초과	초과투자비 5%	10억 원
	기존기업(신설)	20명	10억 초과	주력, 첨단, 심의회중	50억 원
	기존기업(증설)	100명(추가)	300억		20억 원
	대규모 투자 ²⁾	(300명)	(1천억 원)	10억초과 10%	300억 원
외국	수도권 이전	30명		수도권 3년	국가기준
	투자보조	국내 동일	국내 동일	국내 동일	국내동일
	입지보조			차액 지원	50% 내
기타	고용보조금	20명(도민)		초과 1인당 월 100만원(6개월) ³⁾	10억 원
	교육훈련	20명(도민)		액수 심의회 결정	5억 원

1) 특수업종은 ICT산업,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의미

2) 근로자정착금, 기반시설 설치 지원대상

3) 생산자서비스업은 월 30만원(6개월)

4) 휴폐업, 투자축소, 이전, 매입용지 처분 등: 5년 불가, 고용규모 유지 3년

○ 투자보조금 지원금액은 10억 원 초과 투자금액의 10%(생산자서비스업 5%, 최대 50억 원)이며, 투자내용이 완료된 이후 현금으로 일시지급됨

-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달리 요건을 갖춘 모든기업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며, 투자내용이 완료된 이후에 일시지급된다는 특성을 지님
- 투자금액(건당)이 1,000억 원 이상(상시고용 300명 이상)은 100억 원, 2,000억 원 (500명)은 200억 원, 3,000억 원(1,000명)은 30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도내에 있는 기존기업의 증설의 경우에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됨

○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고용보조금과 5억 원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 가능(총 투자액의 50% 미만까지 보조금 가능)

- 연구소·ICT·탄소·U턴의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5명 이상 도내 거주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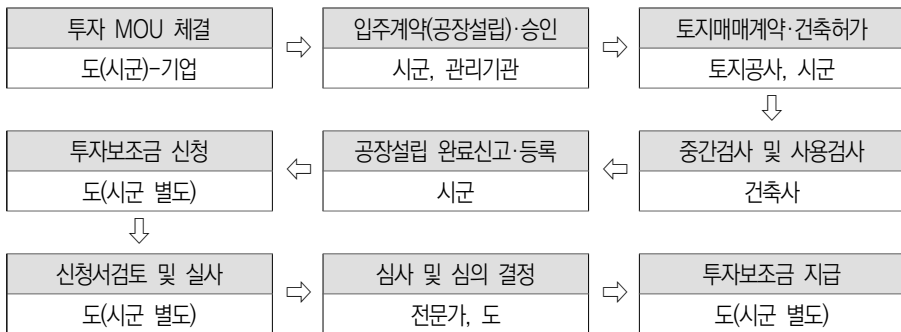
〈표 3-17〉 도 단위 투자 인센티브 제공 현황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입지보조금	○	○	○	○	○	○	○
고용보조금	○	○		○	○	○	○
교육훈련보조금	○	○		○	○	○	○
시설보조금	○	○	○	○	○	○	○
본사이전보조금	○	○	○	○	○	○	○
공장이전보조금	○	○	○	○	○	○	○
연구소이전보조금	○	○	○	○			
서비스업지원		○		○			
컨설팅보조금						○	
미래유망산업지원				○			
성과보상	○	○	○	○	○	○	○

자료: 박건형·라공우(2015) 및 전라북도 조례를 바탕으로 정리

○ 전북의 투자보조금은 MOU → 공장설립 → 투자보조금 신청 → 심사 및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전북도-시군-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

- MOU 체결 시 해당 지자체 투자유치과 보조금지원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보조금관련 예산확보가 가능하며 투자보조금은 투자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됨
- 시군의 활동을 바탕으로 유치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도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북-기업간 MOU가 요구되며, 고용 및 투자금액 기준 충족이 요구됨
- 시군의 기업유치 활동은 도의 투자보조금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보조금 지급기준, MOU 체결, 심사 준비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



〈그림 3-4〉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급 절차

다) 시군의 기업지원제도

○ 전북의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바탕으로 각 시군의 산업여건에 맞추어 조례 제정 및 기업 유치 지원제도를 마련

- 지원항목과 내용은 전라북도 지원기준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한도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표 3-18〉 시군 단위 투자 인센티브 제도

구분	지원항목		내용
고창군	공통기준		- 외부기업: 상시고용 20명(연구소: 5명) - 기존기업: 200억 증설+50명 추가 고용
	시설투자보조금		(기준) 20억 원 이상 투자 (지원) 20억 초과분의 5%(최대 50억 원)
	대규모 투자보조금		(기준) 50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200명 (지원) 20억 초과분의 10%(최대 500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보조금 지원
	기타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물류보조금, 산업단지분양가 지원 -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
군산시	본사이전 (연구소/생산자서비스)		(기준) 상시고용 20명 이상 (내용) 건물취득가 3%(최대 2억)
	공장이전보조금		(기준-고용) 이전기업(고용 20명)/기존기업(고용 30명 이상) (기준-업종) 기계자동차부품 및 첨단업종 (지원) 투자비 20억 초과 5%(최대 50억 원)
	대규모 투자	이전기업	(기준)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 투자금액 5%(최대 100억 원)
		기존기업	(기준) 300억(100명 고용) 신규투자 (지원) 투자액 2% 내(최대 20억 원)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		(기준) 신규투자 10억 초과, 10명 고용(상시고용 10% 증가) (내용) 투자금액 3%(최대 5억 원)
	기존기업 투자촉진장려금		(기준) 300억 신규투자 및 상시고용 100명 (내용) 투자금액 2%(최대 20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입지보조금 지원
	기타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
익산시	공통기준		관외에서 3년 사업 및 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보조금 (본사/연구소/서비스)		(지원-건물취득·시설장비) 취득가의 3%(최대 3억) (지원-임대) 임대료 50%(최대 3억)
	투자보조금(공장)		(지원) 10억 초과 5%(최대 50억 원)
	분공장 투자지원		(기준) 30억 투자, 20명 고용 (지원)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동일
	기존기업 투자비 지원		(기준) 신규고용 10%, 30억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20명 (지원) 투자보조금과 동일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의 5%(최고 100억 원), 인프라/보조금 지원
	기타		- 창업기업, 주력산업(패션, LED),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급 - 공장설립지원 서비스, 공장가동 지원, 기업인 우대(표창 등)

주: 각 조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업체는 지원항목, 투자금액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또는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2018)에 따라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금이 향상되었음
- 지방투자촉진과 투자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선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시 전북·익산시의 투자·고용 등의 보조금 지원 불가
- 전북도민 또는 익산시민을 상시 20명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2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익산시민 고용시 중복 지원 가능)

〈표 3-19〉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조건

구분		주요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³⁾	수도권 이전 ¹⁾	• 대기업 : (설비) 투자금액의 11% 이내 • 중견기업 : (입지) 투자금액의 20% 내, (설비) 투자금액의 19% 이내 • 중소기업 : (입지) 투자금액의 40% 내, (설비) 투자금액의 24% 이내
	신·증설 ²⁾	• 대기업 : (설비) 투자금액의 11%이내(신설·선도산업인 경우) • 중견기업 : (설비) 투자금액의 19%이내 • 중소기업 : (설비) 투자금액의 24%이내
투자보조금	대규모	• 전북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10% 내 최고 300억 원 •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5% 내 최고 100억 원
	일반	• 전북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10% 내에서 최고 50억 원 •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5% 내에서 최고 50억 원
고용보조금	전북도	• 전북도민을 신규 채용하여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10억원
	익산시	• 익산시민을 신규 채용하여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전북도	• 전북도민을 신규 채용하여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원
	익산시	• 익산시민을 신규 채용하여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근로자정책보조금	전북도	• 대규모 투자 시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전북 이주 후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지급/공장가동일로부터 3년 내 신청) • 협력업체도 투자금액 100억이상&10명이상 상시고용 시 지원
중소기업 지원		• 익산시 :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비, 마케팅 활동비 등
창업기업 지원		•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5% 범위내, 기업당 20억 원

주1) 수도권 이전기업 : 이전 전후 1년간 10인이상 고용, 기존공장 완전폐쇄

주2) 신·증설기업 : 투자전 10인이상 고용, 투자후 신규로 10%이상 추가고용, 기존공장 전부유지

주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시 고용·교육훈련보조금·근로자 정책보조금 등은 지원 불가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기업 투자가이드 북(2019)

〈표 3-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비교

구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보조금	
	수도권 이전	신·증설	대규모 투자	일반투자
지원 내용	• (대기업) 설비 11%내 • (중견기업) 설비 19%내 • (중소기업) 설비 24%내		• 10억원 초과투자액의 10%내(전북도) • 10억원 초과투자액의 5%내(익산시) • 요건 충족 시 중복지급 가능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0억		최대 400억 (도 300억, 시 100억)	최대 100억 (도 50억, 시 50억)
	3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	• 10명 이상 고용 • 기존공장 폐쇄	• (전) 10인 고용 • (후) 10%신규고용 • 기존공장 유지	• 천억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인	• 10억 이상 투자 • 20인+ 상시고용
신청 기한	• (설비) 착공신고 후 3개월 내 • (입지) 분양일로부터 1년 내		• 분양일로부터 3년 내	
의무 사항	• 보조금정산 후 5년간 토지처분 불가 • 투자계획서상 계획한 고용규모 유지 • 분양일로부터 1년6개월내 건물착공 • 투자완료예정일 3개월내 투자완료 보고		• 사업개시로부터 5년간 토지처분 불가 • 5년내 사업영위 및 타업종전환 불가 • 분양일로부터 3년내 사업착공	
장점	• 입주초기(1년내) 지원 가능		• 요건이 무난한 편임	
단점	• 요건이 까다로운 편		• 공장 준공후 지원돼 초기부담 증가	
특이 사항	• 수도권 기업이전/신·증설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이 유리 • 설비투자자 입지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		• 요건 갖춘 모든 기업에 해당 • 대기업 유리 • 입지·건축·설비 등 포괄 지원	

자료 :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기업 투자가이드 북(2019)

4. 소결

- 본 장은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 식품산업의 일반현황(산학연)과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음
- 전북 식품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의 식품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기업 중심이며, 도축·육류, 곡물 가공 업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전북의 식품제조업체는 4,159개(전국 7.6%), 종사자 26,585명(전국 9.8%)으로 비중이 크고, 2008년 대비 사업체(16.2%)와 종사자(38.5%)가 크게 성장
 - 10명 미만의 소기업은 91.4%로 도 지역 평균(89.6%)보다 높고, 기타 식품(38.6%, 떡류, 가공식품, 건강보조), 도축·육류(26.6%), 곡물 가공(9.6%)의 비중이 높음
- 전북의 식품 관련 대학, 연구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12개, 공공부문 연구기관은 9개로 혁신 인프라가 우수함
 -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4년제 5개, 전문대 7개로 재학생 규모는 7,000명에 이르며, 연구기관은 정출연 4개, 지출연 5개 등 9개에 이룸
- 전북의 식품산업 정책을 조사한 결과, 농업연계 발전과 기업지원에서 점차 지역별 특화발전, 고부가가치화(기능성/안전성), 수출·판로 확대로 전환되어 추진 중
 - 전북 식품산업 육성정책은 2000년대 이후 농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스마트농생명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 중
 - 전라북도 식품산업 육성 계획(2017)은 농생명 R&D, 식품클러스터 조성,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육성, 지역 농식품 마케팅 및 수출지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
 - 전북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추진 중이나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HMR, 대체식품 등 미래 유망분야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 전북의 식품 관련 제도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에서 시군별 특화산업 육성, 수출확대의 흐름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전북은 식품위생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지역산업육성 조례에 식품산업을 포함하였으며, 수출지원, 소규모 식품 가공산업 지원, 개별산업 육성 관련 조례가 차례로 제정

-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제도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제도로 구분되며,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도-시군-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 관련 제도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중앙)과 전북·시군의 투자보조금 등(고용·교육·근로자정착 및 기타지원 포함)으로 구분됨
- 지원제도 집행을 위해서는 MOU 체결 조건, 적정성 평가 등 전북도-시군-기업 간 사전 협의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장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Jeonbuk Institute

-
1. 분석 개요
 2. 식품산업 구조 분석
 3. 식품기업 입지특성 분석
 4. 소결

제 4 장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1. 분석 개요

-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은 도내 식품산업의 지역과 산업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산업구조 분석과 입지특성 분석으로 구분됨
-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특성 차이가 존재하며, 효과적인 식품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분석과 입지특성 분석이 필요함
- 식품산업구조 분석은 특화도 분석과 산업연관 분석으로 구성되며, 시도별 비교와 전북 내 업종별 분석을 통해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⁵⁾
- 특화도 분석의 경우 LQ 지수를 산출하여 전북 식품산업의 특화 정도를 파악하고 특화도가 높은 세부업종을 도출하였음
- 산업연관분석은 시도별 식품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교하고, 전북의 세부업종별로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농업부문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였음
- 산업연관분석의 경우에는 생산유발계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이용한 전·후방 파급효과를 분석함

5)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산업구조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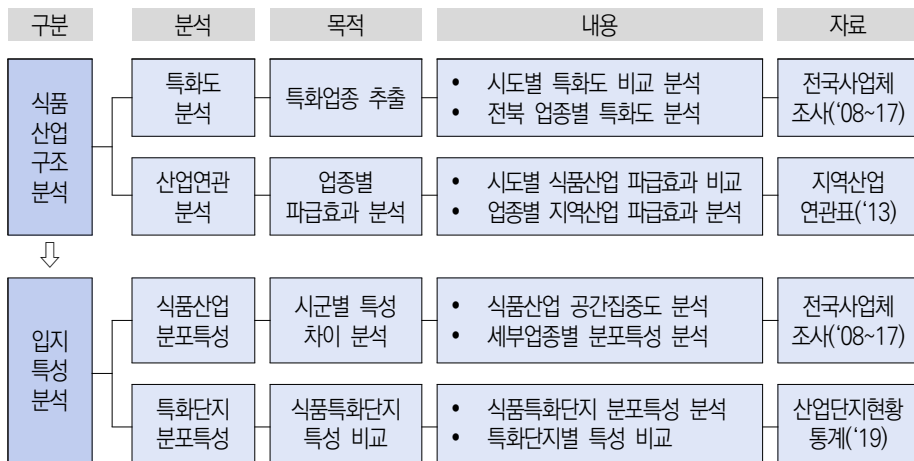
구분	특화도 분석	산업연관분석		
	LQ지수	생산유발계수	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
목적	업종별 특화도 산출	특정산업 성장에 따른 생산파급효과 분석	특정산업의 후방연쇄효과 측정 (기준: >1)	특정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측정 (기준: >1)
내용	$LQ_i = \frac{E_i^r / E^r}{E_i^n / E^n}$ $(E_i^r / E^r: r\text{지역 } i\text{산업 종사자 비율, } E_i^n / E^n: i\text{산업의 전국 종사자 비율})$	$\overline{O_j} = \sum_i \overline{\lambda_{ij}}$ $(\overline{O_j}: i\text{산업 성장에 의한 } j\text{산업 생산유발계수, } \lambda_{ij}: j\text{산업 수요변화에 따른 } i\text{산업 승수효과})$	$U_j = \frac{\sum_i \lambda_{ij}}{\frac{1}{n} \sum_i \sum_j \lambda_{ij}}$ $(U_i: \text{산업 } i \text{ 영향력 계수, } \lambda_{ij}: j\text{산업 수요변화에 의한 } i\text{산업 승수효과, } n: \text{산업수})$	$V_i = \frac{\sum_j \lambda_{ij}}{\frac{1}{n} \sum_i \sum_j \lambda_{ij}}$ $(V_i: \text{산업 } i \text{ 감응도 계수, } \lambda_{ij}: j\text{산업 수요변화에 의한 } i\text{산업 승수효과, } n: \text{산업수})$
활용	전북의 식품산업 특화 수준 파악 및 세부 특화업종 도출	식품산업 수요변화에 따른 농업, 지역산업 생산파급효과 분석	식품산업의 업종별 후방파급효과 분석	식품산업의 업종별 전방파급효과 분석

주: 김홍배(2005),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 입지특성 분석은 전북 식품산업의 지역별 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식품산업 분포 특성 분석과 특화단지 분포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음

- 식품산업 분포 특성 분석은 전북 식품산업의 공간적인 집중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시·군 단위에서 세부업종별 종사자 분포를 분석하였음
- 공간적 집중도는 시군별 전 산업 종사자 비율과 식품산업 종사자 비율(전북 대비)을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2개 시점(2008, 2017)으로 산출하여 불평등 추이를 분석⁶⁾
- 업종별 종사자 분포는 식품산업을 소분류(기타: 세세분류)로 구분하여 시군별 종사자 분포를 산출하고, 지도로 시각화하여 업종별 분포 특성을 분석
- 특화단지 분포 특성은 전북 내 식품 특화단지로 지정되거나 주요 식품기업이 위치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분포, 기반시설, 입주업체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음

○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08~'17년), 지역산업연관표('13)와 한국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통계('19) 시각화는 ArcGIS 10.4.1를 이용하였음



〈그림 4-1〉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 흐름

6) 공간 집중도(불평등도)는 시군별 전 산업 종사자의 전북 비중과 식품산업 종사자의 전북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수치가 클수록 특정 지역으로 집중도가 큼을 의미

$$GCR = \sum_{i=1}^{n-1} |x_i y_{i+1} - x_{i+1} y_i|$$

(x_i : i 번째 지역의 전산업 종사자 누적비율, y_i : i 번째 지역의 식품산업 종사자 비율)

2. 식품산업구조 분석

가. 특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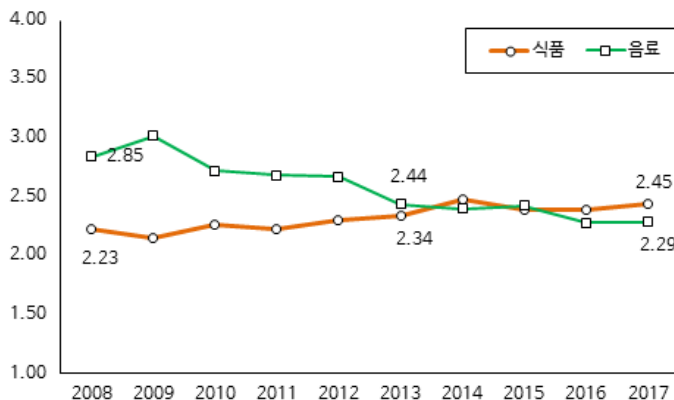
1) 시도별 식품산업 특화도

○ 시도별로 살펴보면 식품산업의 특화도는 특별·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더욱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모든 도 지역의 특화도가 1 이상을 나타내지만, 특별·광역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1 미만을 나타냄
- 음료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기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의 특화도가 1 이상을 나타내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모두 1 미만의 특화도를 나타냄

○ 2017년 기준 전북의 식료품 제조업 특화도는 2.4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증가하는 반면, 음료 제조업의 특화도는 2.29로 감소추세를 나타냄

- 전북의 식료품 제조업의 특화도(2.45)는 충북(2.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08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였음
- 전북의 음료 제조업의 특화도(2.29)는 충북(4.43), 강원(3.68), 제주(3.5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지만 200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였음(감소량 -0.56)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2017)

〈그림 4-2〉 전북 식품산업 특화도 추이(2008~2017)

〈표 4-1〉 시도별 식품산업 특화도 변화 추이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지역	2008	2013	2017	변화량 (08-17)	지역	2008	2013	2017	변화량 (08-17)
충북	2.48	2.63	2.84	0.36	충북	4.40	4.56	4.43	0.03
전북	2.23	2.34	2.45	0.21	강원	2.69	2.69	3.68	0.99
전남	2.41	2.30	2.27	-0.14	제주	2.70	3.00	3.59	0.88
충남	2.32	2.15	2.04	-0.28	전북	2.85	2.44	2.29	-0.56
강원	1.72	1.81	1.92	0.20	충남	1.72	2.03	2.22	0.50
세종	-	2.65	1.58	-1.07*	경남	1.75	1.93	1.75	0.00
경북	1.62	1.54	1.55	-0.06	경북	1.23	1.40	1.52	0.28
경남	1.33	1.30	1.30	-0.03	전남	1.93	1.55	1.23	-0.70
제주	1.09	1.13	1.09	0.00	광주	1.05	1.16	0.99	-0.06
경기	1.03	1.04	1.03	0.00	경기	0.93	0.80	0.79	-0.13
부산	0.82	0.81	0.79	-0.03	대구	0.62	0.83	0.64	0.02
인천	0.80	0.74	0.72	-0.08	대전	0.84	0.71	0.58	-0.26
대구	0.79	0.73	0.69	-0.10	부산	0.51	0.44	0.46	-0.05
대전	0.61	0.57	0.61	0.01	세종*	-	0.43	0.45	0.02
광주	0.58	0.55	0.57	-0.02	울산	0.32	0.26	0.41	0.09
울산	0.40	0.40	0.39	-0.01	인천	0.19	0.22	0.13	-0.06
서울	0.22	0.19	0.18	-0.04	서울	0.10	0.07	0.07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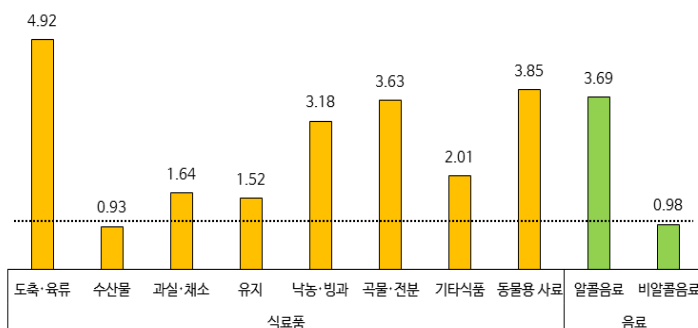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0~2017)

2) 세부업종별 특화도 분석결과

- 전북 식품산업의 특화도를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과 비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나며, 식료품을 중심으로 증가
 - 전북의 식품산업은 수산물가공(0.93)과 비알콜음료(0.98)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특화도가 1 이상의 수치를 나타냄
-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축·육류(4.92), 사료(3.85), 곡물가공(3.63)의 순서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남
 - 도축·육류 제조업은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특화도(4.92)를 나타내며, 2008년 대비 특화도는 0.16 증가하였음
 - 동물용 사료의 특화도는 3.85로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2008년 (2.78) 대비 특화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에 해당함

○ 전북은 음료 제조업 중에서 알콜음료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알콜과 비알콜 음료 모두 2008년 대비 특화도가 감소

- 전북의 음료 제조업은 알콜 음료(3.69)에만 특화되어 있으며, 알콜(-0.71)과 비알콜 음료(-0.12) 모두 특화도의 감소가 나타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7)

〈그림 4-3〉 전북 식품제조업 특화도(2017년, 소분류 기준)

〈표 4-2〉 전라북도 식품산업 업종별 특화도(소분류)

구분		2008년	2013년	2017년	변화량 (08~17)
식료품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4.76	4.78	4.92	0.16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2.78	3.14	3.85	1.08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 제품 제조업	3.56	3.49	3.63	0.07
	낙농 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2.95	2.42	3.18	0.23
	기타 식품 제조업	1.89	1.97	2.01	0.1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	1.65	1.64	0.1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1.05	1.52	0.48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76	0.85	0.93	0.17
음료	알콜음료 제조업	4.40	3.98	3.69	-0.7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0	0.85	0.98	-0.12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2017)

○ 기타 식료품 제조업을 세세분류 단위까지 구분해보면, 식초·발효 및 화학조미료 (9.46), 장류(4.68), 코코아·과자류(3.19)의 순서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식초·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9.46)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특화도를 나타내지만 2008년(14.92)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 장류 제조업(4.68)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 특화도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08년 대비 특화도는 -0.33 감소하였음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3.19)의 특화도는 기타 식료품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2008년 대비 특화도가 0.42 증가하였음

○ 기타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6개 세세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특화도가 1 이상이며, 2008년 대비 특화업종은 10개에서 12개로 증가

- 두부(1.26), 빵류(1.02), 차류 제조업(1.46)가 2017년에 새롭게 특화업종에 포함되었으며, 수프(0.95)는 특화업종에서 제외되었음

〈표 4-3〉 전라북도 기타 식료품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세세분류)

구분	2008년	2013년	2017년	변화량(08~17)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14.92	15.15	9.46	-5.46
장류 제조업	5.01	5.59	4.68	-0.3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2.78	3.02	3.19	0.42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2.16	3.22	2.94	0.77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25	2.56	2.64	0.39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2.88	1.72	2.19	-0.68
인삼식품 제조업	1.49	1.21	1.89	0.40
떡류 제조업	1.58	1.60	1.68	0.10
차류 가공업	0.65	0.80	1.46	0.8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0.97	1.16	1.26	0.28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89	1.70	1.24	-0.65
빵류 제조업	0.80	0.78	1.02	0.21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2.74	0.22	0.95	-1.7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0.51	0.97	0.82	0.31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0.00	0.11	0.82	0.8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0.61	0.87	0.75	0.14
커피 가공업	0.08	0.48	0.73	0.65
설탕 제조업	0.00	0.00	0.00	0.0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2017)

나. 전북 식품산업 연관구조 분석

1) 시도별 생산유발계수 산출결과

○ 식품산업이 각 지역 농업부문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대체로 도 지역이 특별·광역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식품산업의 지역 전 산업 생산유발계수는 도(평균:1.486)가 특별·광역시(평균:1.216)보다 높고, 지역농업 부문도 계수는 도(평균 0.277)가 특별·광역시(0.046)보다 큼

○ 전북 식품산업의 지역 전체 파급효과는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지역 농업부문 파급효과는 전남, 경북, 제주·충남에 이어 다섯 번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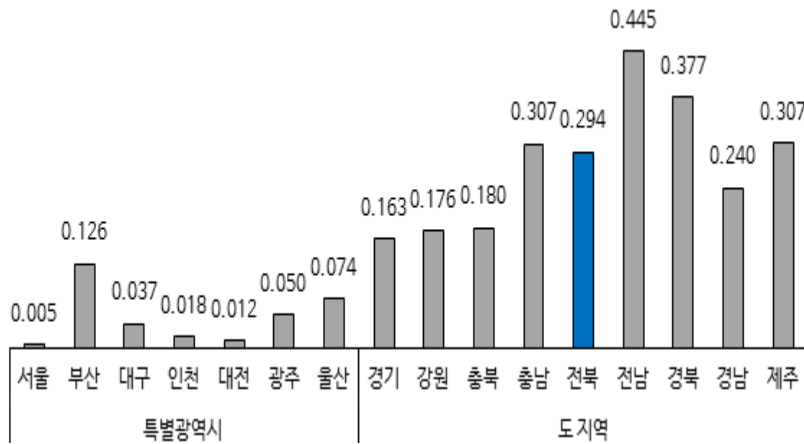
- 각 지역 식품산업의 지역 총 생산유발계수는 전남(1.665), 경북(1.576), 전북(1.51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농업부문 생산유발계수는 전남(0.445), 경북(0.377), 충남·제주(0.307) 순서로 크게 나타났으며, 전북은 0.294로 다섯 번째를 나타냄

〈표 4-4〉 시도별 식품제조업의 생산 유발계수

구분	각 지역 내			전국
	농업	식품산업	전체산업	
특별·광역시	부산	1.012	1.339	2.330
	서울	0.005	1.024	2.310
	대구	0.037	1.028	2.421
	울산	0.074	1.030	1.957
	광주	0.050	1.051	2.453
	인천	0.018	1.020	1.941
	대전	0.012	1.009	2.421
	시 평균	0.046	1.077	2.262
도 지역	전남	0.445	1.025	2.455
	경북	0.377	1.048	2.453
	전북	0.294	1.102	2.377
	충남	0.307	1.069	2.386
	경남	0.240	1.051	2.345
	경기	0.163	1.021	2.352
	제주	0.307	1.076	2.532
	충북	0.180	1.054	2.404
	강원	0.176	1.069	2.368
	도 평균	0.277	1.063	2.408
전국 평균		0.176	1.045	2.344

주: 지역산업연관표(2013)를 이용하여 지역별 식품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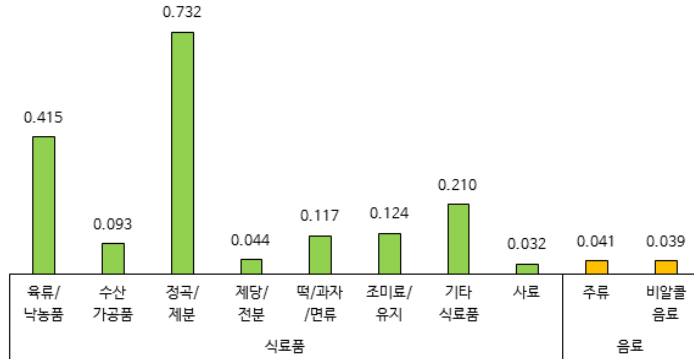
〈그림 4-4〉 시도별 식품산업이 지역농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

2) 전북 식품산업의 연관구조 분석

가) 업종별 생산유발계수 산출결과

- 전북 내 세부업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생산유발계수를 산출하였음
 - 생산유발계수는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체계를 바탕으로 농업부문, 식품제조업, 외식업, 기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 전북의 식료품 제조업은 정곡·제분, 육류·낙농품, 기타 식료품의 순서로 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남
 - 지역 전체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는 정곡·제분(1.809), 육류·낙농품(0.729), 기타 식료품(1.449)의 순서로 크게 나타남
 - 지역농업으로 한정했을 때도 정곡·제분(0.732), 육류·낙농품(0.415), 기타 식료품(0.210)의 순서로 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남
- 음료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유발계수는 주류와 비알콜 음료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나 외식업의 경우에는 주류의 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남
 - 음료 제조업은 알콜음료(전체: 1.289, 농업: 0.041)와 비알콜 음료(전체: 1.298, 농

- 업: 0.039)가 농업부문과 지역전체에 대한 생산유발계수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외식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알콜 음료(주류)가 0.011로 비알콜 음료(0.003)보다 생산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전북 식품산업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농업부문)

〈표 4-5〉 전북 식품산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 산출결과

구분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육류 낙농	수산 가공	정곡· 제분	제당 전분	떡·과 자·면	조미료 유지	기타 식품	사료	알콜	비알 콜
지역 내	농식품	0.013	0.003	0.702	0.041	0.088	0.106	0.169	0.027	0.039	0.035
	축식품	0.399	0.001	0.003	0.001	0.016	0.005	0.006	0.001	0.000	0.001
	수산물	0.000	0.08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타	0.003	0.001	0.027	0.002	0.013	0.013	0.035	0.003	0.002	0.003
	농업계	0.415	0.093	0.732	0.044	0.117	0.124	0.210	0.032	0.041	0.039
식품제조업		1.201	1.020	1.003	1.120	1.174	1.119	1.131	1.064	1.052	1.106
외식업		0.003	0.004	0.002	0.006	0.003	0.003	0.002	0.004	0.011	0.003
기타 산업		0.110	0.131	0.073	0.116	0.122	0.115	0.105	0.114	0.185	0.149
전북 전산업		1.729	1.248	1.809	1.286	1.416	1.361	1.449	1.213	1.289	1.298

주: 전북 외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은 제외하였음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3)

나) 영향력/감응도 계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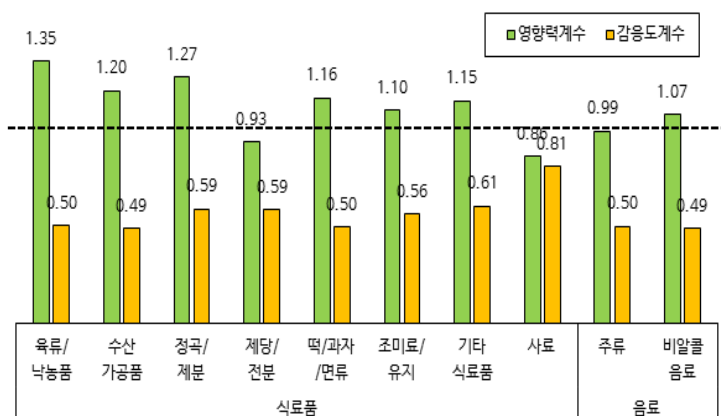
- 전북 식품산업의 대부분의 업종은 전방파급효과는 높지 않으나, 후방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전북 식품산업의 감응도 계수는 모든 업종에서 1 미만의 수치를 나타내지만, 영향력 계수는 주류, 제당·전분, 사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 이상을 나타냄

- 전북 식품산업의 후방파급효과는 육류·낙농품, 정곡·제분, 수산가공품, 떡·과자·면류, 기타 식료품의 순서로 크게 나타남
- 전북 식품산업 중 육류·낙농품의 영향력 계수는 1.348로 전북 식품산업 중에서 후방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정곡·제분의 영향력 계수는 1.266, 수산가공품의 영향력 계수는 1.197로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후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6〉 전북 식품제조업의 지역 내 전후방 파급효과 비교

구분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육류·낙농	수산가공	정곡·제분	제당·전분	떡·과자·면	조미료·유지	기타 식료품	사료	알콜	비알콜
영향력계수	1.348	1.197	1.266	0.934	1.160	1.098	1.145	0.860	0.989	1.072
감응도계수	0.503	0.489	0.590	0.586	0.495	0.564	0.605	0.809	0.500	0.489

주: 지역산업연관표(2013)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제외



〈그림 4-6〉 전북 식품업종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3. 식품기업 입지특성 분석

가. 식품기업 분포 특성

1) 시군별 식품산업 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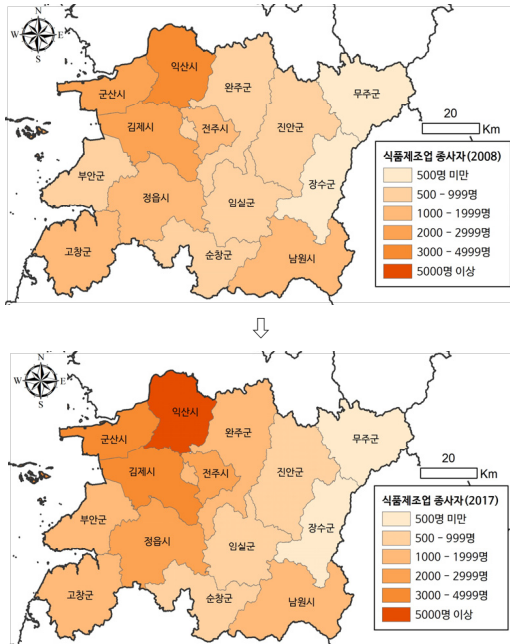
- 전북의 식품산업은 서부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의 순서로 식품산업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식품산업 종사자는 익산이 5,512명(24.4%)으로 가장 많고, 군산이 3,380명(12.5%), 김제가 3,219명(11.1%)의 순서를 나타냄
 - 익산, 군산, 김제의 식품산업 종사자 합계는 12,111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식품산업의 48.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은 익산, 군산, 김제 등 서부권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 전북 식품제조업의 지역 집중도는 2008년 0.3762에서 2017년 0.4213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식품산업의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식품제조업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서부권에 비해 무주, 장수, 진안 등 동부권의 식품제조업 성장은 다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4-7〉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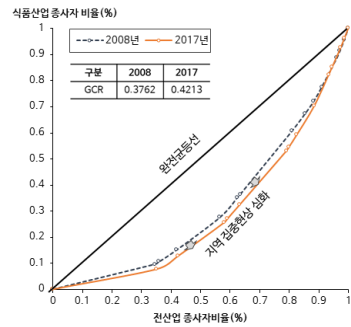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구분	식품업체수		식품 종사자수	
	개수	비율	종사자	비율
익산시	558	13.4	5,512	24.4
군산시	431	10.4	3,380	12.5
김제시	311	7.5	3,219	11.1
전주시	653	15.7	2,056	9.6
정읍시	363	8.7	2,894	7.6
남원시	253	6.1	1,372	6.7
고창군	309	7.4	1,257	5.4
부안군	235	5.7	1,967	4.8
완주군	271	6.5	1,364	4.5
순창군	189	4.5	985	4.4
임실군	149	3.6	954	4.1
진안군	225	5.4	787	2.8
장수군	95	2.3	404	1.2
무주군	117	2.8	434	1.0
합계	4,159	100.0	26,585	100.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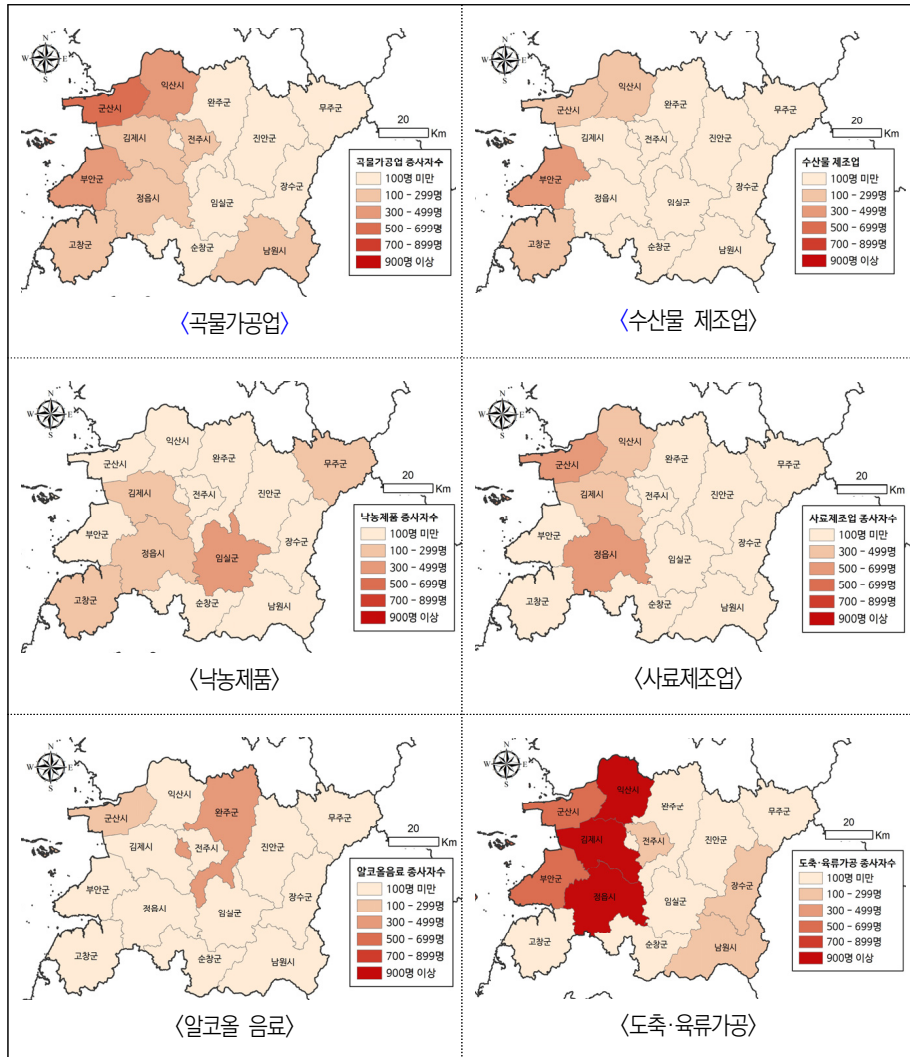
〈그림 4-7〉 시군별 식품 종사자 추이(08~17)



〈그림 4-8〉 전북의 식품산업 지역집중도 변화

○ 전북 식품산업의 종사자 분포(시군)는 시군별 특산물과 전략품목, 주요기업 위치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냄

- 도축·육류가공업은 하림(익산·정읍), 목우촌(김제) 등 주요기업이 위치한 익산(48.8%), 정읍(17.4%), 김제(13.0%)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수산물의 경우 삼해상사 등 대형 김 제조업체가 위치한 부안군(41.9%)과 중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군산시(22.1%)가 60% 이상을 차지
- 과일·채소 제조업의 익산(18.1%), 고창(19.9%), 정읍(10.4%)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시군별 비중 차이는 적은 편임
- 낙농 제품의 경우 푸르밀과 지역 전략품목인 치즈 업체가 집적된 임실(33.5%)과 매일유업이 위치한 고창군(20.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곡물·전분은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원료수급 이점으로 주요 업체(대두식품, 대상·물엿)들이 입주한 군산(24.6%)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주류의 경우에는 하이트진로가 위치한 완주(29.0%), 롯데칠성이 위치한 군산(26.6%)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7)

〈그림 4-9〉 전북 식품산업의 주요 업종별 종사자 분포 현황(2017)

〈표 4-8〉 전라북도 식품산업 업종 현황(소분류, 종사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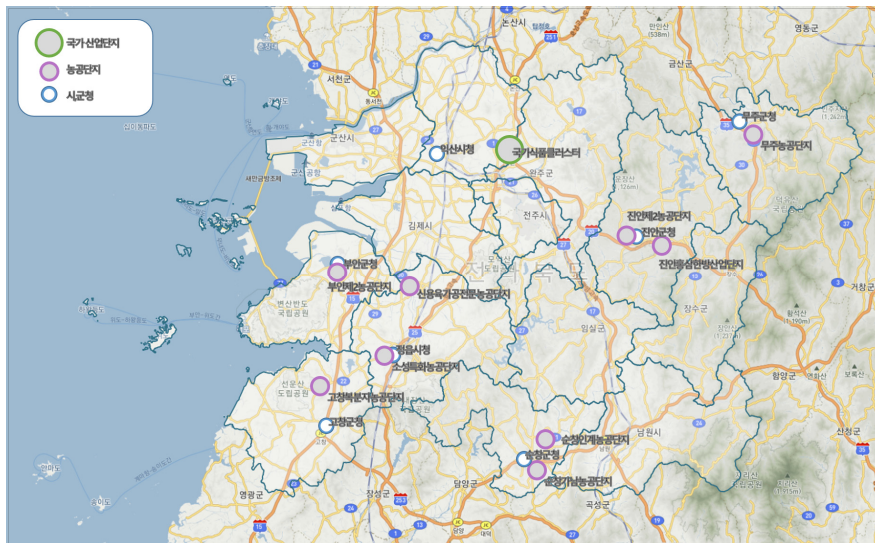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합계
	도축 육류	수산 물	과실 채소	유지	낙농 제품	곡물 전분	기타 식품	사료	주류	음료	
익산	3,092 (43.8)	110 (9.4)	190 (13.1)	16 (4.2)	3 (0.3)	313 (12.2)	1,454 (14.2)	231 (17.6)	85 (8.1)	18 (6.1)	5,512 (20.7)
군산	699 (9.9)	258 (22.1)	122 (8.4)	50 (13.0)	7 (0.7)	630 (24.6)	961 (9.4)	356 (27.2)	278 (26.6)	19 (6.5)	3,380 (12.7)
김제	920 (13.0)	5 (0.4)	66 (4.6)	93 (24.2)	139 (13.2)	293 (11.4)	1,455 (14.2)	231 (17.6)	7 (0.7)	10 (3.4)	3,219 (12.1)
정읍	1,230 (17.4)	33 (2.8)	151 (10.4)	82 (21.3)	123 (11.6)	159 (6.2)	716 (7.0)	311 (23.7)	31 (3.0)	58 (19.7)	2,894 (10.9)
전주	101 (1.4)	33 (2.8)	73 (5.1)	53 (13.8)	44 (4.2)	150 (5.9)	1,468 (14.3)	29 (2.2)	99 (9.5)	6 (2)	2,056 (7.7)
부안	645 (9.1)	490 (41.9)	8 (0.6)	6 (1.6)	0 (0)	314 (12.3)	463 (4.5)	5 (0.4)	33 (3.2)	3 (1)	1,967 (7.4)
남원	101 (1.4)	43 (3.7)	78 (5.4)	25 (6.5)	9 (0.9)	189 (7.4)	816 (8.0)	13 (1)	41 (3.9)	57 (19.4)	1,372 (5.2)
완주	91 (1.3)	26 (2.2)	139 (9.6)	21 (5.5)	0 (0)	77 (3.0)	655 (6.4)	21 (1.6)	304 (29.0)	30 (10.2)	1,364 (5.1)
고창	6 (0.1)	140 (12.0)	158 (10.9)	14 (3.6)	214 (20.2)	166 (6.5)	419 (4.1)	30 (2.3)	80 (7.6)	30 (10.2)	1,257 (4.7)
순창	27 (0.4)	5 (0.4)	91 (6.3)	6 (1.6)	60 (5.7)	79 (3.1)	649 (6.3)	9 (0.7)	15 (1.4)	44 (15)	985 (3.7)
임실	0 (0)	22 (1.9)	111 (7.7)	5 (1.3)	354 (33.5)	67 (2.6)	371 (3.6)	17 (1.3)	7 (0.7)	0 (0)	954 (3.6)
진안	34 (0.5)	0 (0.0)	123 (8.5)	5 (1.3)	3 (0.3)	45 (1.8)	552 (5.4)	0 (0.0)	25 (2.4)	0 (0.0)	787 (3.0)
무주	10 (0.1)	2 (0.2)	77 (5.3)	2 (0.5)	101 (9.6)	38 (1.5)	157 (1.5)	0 (0)	28 (2.7)	19 (6.5)	434 (1.6)
장수	103 (1.5)	3 (0.3)	58 (4.0)	7 (1.8)	0 (0)	42 (1.6)	117 (1.1)	58 (4.4)	16 (1.3)	0 (0)	404 (1.5)
합계	7,059 (100)	1,170 (100)	1,445 (100)	385 (100)	1,057 (100)	2,562 (100)	10,253 (100)	1,311 (100)	1,049 (100)	294 (100)	26,585 (10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8, 2017)

나. 식품 특화단지 조성 현황

- 식품 특화단지는 국가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시군의 전략품목의 집적화 또는 주요 식품기업 입지를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를 의미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임
- 식품특화 농공단지는 시군의 전략품목의 집적화를 위해 조성된 전문단지와 주요 식품기업이 입주한 농공단지를 의미함⁷⁾
- 전북의 식품 특화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특화 농공단지(4개), 주요 식품기업이 입주한 농공단지(5개) 등 10개가 조성되어 있음
- 식품 전문단지는 시군별 전략품목에 맞추어 소성식품(정읍), 신용육가공(정읍), 복분자(고창), 홍산한방(진안) 등 4개가 조성되어 있음
- 주요 식품기업이 입주한 농공단지는 가남(대성), 인계(사조), 무주(풀무원 다논), 한국고려홍삼(진안2), 참프레(부안) 등 5개임



〈그림 4-10〉 전라북도 식품특화단지 위치 현황

- 7) 본 연구에서 식품특화 농공단지는 시군별 전략품목의 육성을 위해 조성된 식품 전문단지와 함께 주요 식품기업(풀무원 다논, 대성 등)이 입주한 농공단지를 포함

- 식품 특화단지에 입주한 식품기업은 112개로 전체 업체의 약 72%를 차지하며, 식품산업 연관업종(플라스틱 용기 등)을 포함한 나머지 업종이 28%를 차지
- 전체 기업 대상 종사자는 총 3,313명이며, 이 중 식품기업 종사자는 2,926명으로 종사자의 약 88%가 식품기업에 종사함

〈표 4-9〉 전라북도 식품 특화단지 일반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시군	단지명	입주기업수		종사자수	
			식품	전체	식품	전체
국가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44	45	681	730
농공	정읍시	정읍소성식품특화농공	6	6	25	25
		정읍신용(육가공)전문	5	5	422	422
	고창군	고창복분자농공단지	11	11	259	259
	순창군	순창가남농공	1	2	113	142
		순창인계농공	6	11	143	169
	진안군	진안제2농공단지	15	36	176	330
		진안홍삼한방농공	15	28	114	232
	부안군	부안제2농공단지	8	8	867	867
	무주군	무주농공단지	1	2	126	137
합계			112	154	2,926	3,313

자료: 전국공장등록통계(2019.12.), <https://www.femis.go.kr>, (확인일 : 2020.1.15.)

- 전북의 식품 특화단지는 준공 시기, 유치업종, 분양가격, 분양률 등이 다양하며, 일부 단지는 분양률 제고,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7년 준공되었으며, 식료품·음료 및 연관업종(폐수 제외) 입주 가능하며, 분양률은 59.6%로 추가적인 기업유치가 요구되고 있음
- 순창가남농공단지는 1988년 조성되어 30년 이상 경과하여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며, 기반시설 정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⁸⁾
- 정읍소성, 고창복분자농공단지는 유치업종이 식품 및 연관업종으로 제한된 식품전문 단지로 분양률 제고를 위한 기업유치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순창가남농공단지, 진안제2농공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장 부재로 폐수 전처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예상됨

8) 순창가남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 설치, 진입로 정비, 확장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정비수요가 있음(대상 관계자 인터뷰 결과)

〈표 4-10〉 전라북도 식품 특화단지 업종 및 인프라 현황

(단위: 원/㎡, %, 년)

구분	시군	단지명	공동폐수 처리장 규모	유치업종	분양가	분양률	준공년
국가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12,000 (일 1만㎡)	식품·음료제조· 창고·운송업 등	154,715	59.6	2017
	정읍시	정읍소성 식품특화	2,496 (일 903.5㎡)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59,620	25.4	2017
		정읍신용 (육가공)전문	2,496 (일 600㎡)	기타 육지 동물고기 가공· 저장처리업	24,808	100.0	2016
농공	고창군	고창북분자 농공단지	400 (일 790㎡)	식품·음료 제조업, 창고 및 운송	47,560	70.0	2013
	순창군	순창가남	개별처리	전 업종 (폐수업종 제외)	9,377	100.0	1988
		순창인계	2,963	음·식품 등	22,687	100.0	2008
	진안군	진안제2농공	개별처리	제조업종, 태양광 발전업	23,885	100.0	2003
		진안홍삼 한방	진안하수처리 장 연계	제조업종, 태양광 발전업	34,560	95.6	2010
	부안군	부안제2농공	13,029	식품, 음료제조업	79,781	94.4	2013
	무주군	무주농공	개별처리	전 업종 (폐수배출 관련 업종 제한)	38,589	100.0	2008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19.11. 기준), www.industryland.or.kr (확인일 : 2020.1.15.)

4. 소결

- 본 장에서는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식품기업의 유치여건 분석을 위해 산업구조 분석(특화도·산업연관)과 입지특성 분석을 수행
 - 식품산업구조 분석을 위해 식품산업의 특화도 분석과 산업연관 분석을 시도 단위와 전북 내 세부업종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 입지특성 분석을 위해 식품산업 분포 특성 분석(집중도, 업종별 분포)과 식품 특화단지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음
- 식품산업의 특화도 분석결과, 전북의 식품업종 대부분이 특화도가 높은 수준이며, 축산, 곡물, 주류, 발효식품 관련 업종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남
 - 전북은 도축·육류(4.92), 사료(3.85), 곡물가공(3.63), 낙농 제품(3.18) 순서로 특화도가 높고, 기타업종은 식초·발효조미료(9.46), 장류(4.68)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남
 - 음료 제조업의 경우 알콜 음료(3.69)만 특화산업에 해당하며, 2008년 대비 특화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식품산업연관구조 분석결과, 지역 총 생산유발효과는 큰 편이나, 농업부문 유발효과는 비교적 적고, 곡물과 육류 부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 전북 식품산업의 지역 총 생산유발계수(1.52)은 전남(1.67), 경북(1.5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지만, 농업부문(0.294)은 도 단위에서 다섯 번째를 나타내 농업부문과의 연계 발전방안 모색이 요구됨
 - 세부업종별 생산유발계수는 지역 전체와 농업부문 모두 정곡·제분(1.81), 육류·낙농(1.73)의 순서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전북 식품산업의 분포 특성 분석결과, 서부권의 집중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식품 특화단지는 노후기반시설 정비, 분양률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전북 식품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서북부권에서 높게 나타나며,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비서북부권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전북 내 식품특화단지는 10개로 기업유치 활성화(국립·정읍소성·고창북분자)와 기반시설 정비(순창가남·진안홍삼·진안2농공) 방안 마련이 요구됨

5

장

정책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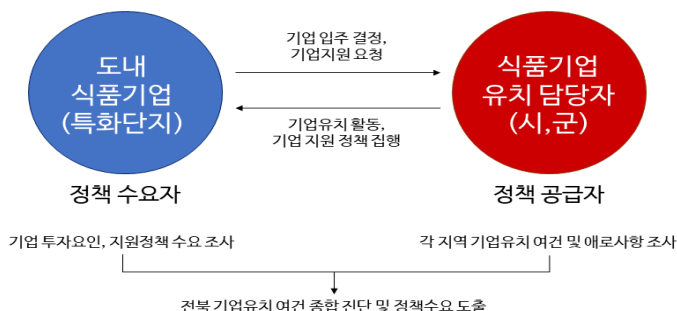
Jeonbuk Institute

-
1. 조사 개요
 2. 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3. 공무원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4. 소결

제 5 장 정책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 전북 식품산업 여건의 종합적인 진단과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도내 식품기업(수요자)과 기업유치 담당자(공급자)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
- 도내 식품기업은 식품산업 지원정책의 가장 주된 수요자로서, 해당 조사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임
- 식품기업 유치 담당자는 기업과 가장 긴밀히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행정주체(시·군 공무원)이자 정책의 공급자로서, 해당 조사는 지역의 기업유치 여건을 진단하기 위함임
- 식품기업(수요자)과 공무원(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하여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종합적인 진단 및 활성화 전략 수립을 도모하였음



〈그림 5-1〉 정책 수요조사 개요

1) 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개요

- 기업 대상 수요조사는 전북 내 식품업종에 특화되거나 주요 식품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10개)에 입주한 식품기업(108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음
-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입주업체 관련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계획입지로서, 지역의 기업유치 활동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미 FTA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과 연계성이 높은 식

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거점 산업단지에 해당함

- 식품특화단지는 농공단지의 주된 목적인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략품목 및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단지에 해당함
- 식품에 특화된 농공단지 외에도 기업 규모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내 주요 식품기업(대상, 사조, 참프레, 풀무원 다논) 입주 농공단지를 대상에 포함
- 조사대상은 기업의 투자 및 경영 전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므로 각 기업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표 5-1〉 정책 수요조사 대상 산업단지 현황

구분		시군	식품기업(등록)	비고
국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시	42	국가식품전문
농공 단지	정읍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정읍시	6	특화단지
	정읍신용(육가공)전문단지	정읍시	5	전문단지
	고창북분자(특화)농공단지	고창군	11	특화단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진안군	13	특화단지
	진안제2농공단지	진안군	15	홍삼업체 집적
	순창가남농공단지(1장류)	순창군	1	대상 입주
	순창인계농공단지(2장류)	순창군	6	사조 입주
	부안제2농공단지	부안군	8	참프레 입주
	무주농공단지	무주군	1	풀무원 다논
합계			108	

주: 공장등록현황통계(2019)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선정

○ 조사 기간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휴일 제외 10일)이며, 각 기업
체 방문을 통한 1:1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음

- 시·군별 기업유치 담당자 협조를 통해 기업 방문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원을 파견하였으
며, 주요기업이 입주한 2개 농공단지(인계, 무주)에 대해서는 연구진 직접 조사
- 기업체 방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1:1 조사를 수행하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기업에 한정해서 FAX를 통한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내용은 기업체 일반현황, 입지특성, 정책 수요, 발전 방향 등 4개 부문에 대
한 19개 문항으로 구성됨

- 일반현황은 기업체 위치, 업종, 생산품, 종사자, 매출액, 입주 형태 등 기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 구성됨(총 6문항)
- 입지특성은 기업체의 입주 특성(입주기간, 이전특성),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판매·노

동시장의 범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됨(총 5문항)

- 정책 수요는 인센티브 현황, 지원정책/시설 수요, 전복의 식품기업 유치여건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총 5문항)
- 발전 방향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유치 업종, 유치 활성화 방안,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총 3문항)

2) 공무원 대상 정책 수요조사 개요

- 공무원 대상 정책 수요조사는 특화단지 또는 주요 식품업체가 위치한 시·군의 기업유치 담당자(팀장급)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 식품 특화단지(주요기업 입주 농공단지 포함)가 위치한 시, 군의 기업유치 담당자(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원센터 기업유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7개 시·군)
- 조사 기간은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식품클러스터는 11월 7일) 약 1주일에 걸쳐 진행하였음(조사당 약 1.5시간 소요)
-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면담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 질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지역별로 식품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내용은 크게 해당 지역의 식품기업 유치현황, 기업유치 여건, 애로사항으로 구성되며, 세부 질문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하였음

〈표 5-2〉 정책 수요조사 개요

구분	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공무원 대상 정책 수요조사
조사목적	식품기업 입주요인 및 지원정책 수요조사 (정책 수요자 대상)	시군별 기업유치 여건 및 기업유치 정책 추진상의 애로사항 조사 (정책 공급자 대상)
조사가간	19년 12월 16일 ~ 12월 30일(10일)	19년 12월 4일~ 12월 12일(6일)
조사대상	도내 식품특화단지, 주요 식품업체 입주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사조, 풀무원다논)	7개 시군 공무원 (익산시-지원센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조사방법	1:1 방문 조사(구조화된 문항)	1:1 방문 면담(반구조화된 문항)
조사내용	• 기업 일반 현황 • 기업 입주특성(투자요인) • 지원정책 수요 • 유치 활성화 방안(총 19문항)	• 지역 식품기업 유치현황 및 여건 • 지역 지원제도/프로그램 현황 • 지역 식품기업 유치 애로사항 등

2. 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가. 조사 참여자(응답자) 현황

- 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에는 108개 조사대상 기업(등록공장 기준) 중에서 67개 식품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미참여 기업의 대부분은 폐업·가동준비 단계에 해당
- 공장등록(미가동) 단계(18개)와 휴·폐업(10개)으로 조사가 어려운 업체는 총 80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응답률은 83.8%로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비율과 본사 외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입지 유형(산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2개로 전체 32.8%를 차지하며, 농공단지는 45개로 6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주 형태는 생산공장 기능이 33개(49.3%), 본사 기능이 29개(43.3%)로 생산공장이 소폭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업체의 규모(종사자, 매출액)는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지만, 소기업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조사 참여 기업 중 식료품 제조업체는 60개(89.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음료 제조업체는 7개(10.5%)로 나타남
- 종사자 수는 10명 미만 기업이 31개(46.3%)로 가장 많으며, 11~49명 기업이 20개(29.9%), 50명 이상이 14개(20.9%)를 나타냄
- 매출액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식료품 제조업 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10억~50억 원(26.9%)과 50억 원 이상(26.9%)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함

〈표 5-3〉 응답자 현황

구분			빈도수	비중
입지 유형	국가	국가식품클러스터	22	32.8
	농공	정읍소성특화단지	4	6.0
		정읍신용육가공단지	5	7.5
		고창북분자단지	9	13.4
		진안홍삼단지	7	10.4

구분			빈도수	비중
		진안2농공단지	8	11.9
		순창가남농공단지	1	1.5
		순창인계농공단지	4	6.0
		부안2농공단지	6	9.0
		무주농공단지	1	1.5
		농공 소계	45	67.2
입주 형태 (기능) ²⁾	본사		29	43.3
	생산공장(물류기능 포함)		33	49.3
	미응답		5	7.5
업종 ¹⁾	식 료 품	육류·낙농·수산물	18	26.9
		과실·채소가공	13	19.4
		건강기능식품	10	14.9
		떡·과자·면·빵류	7	10.4
		조미료·장류·유지	7	10.4
		기타 식료품	5	7.5
		식료품 소계	60	89.5
	음료	음료 제조업	7	10.5
종사자수	10명 미만		31	46.3
	11~49명		20	29.9
	50명 이상		14	20.9
	미응답		2	3.0
매출액	1억 원 미만		10	14.9
	1억~5억 원		11	16.4
	5억~10억 원		8	11.9
	10억~50억 원		18	26.9
	50억 이상		18	26.9
	미응답		2	3.0
합계			67	100.0

1) 생산공정에 따라 재분류하였으며, 기타 식료품은 간편식·이유식(3), D&D(1), 곡물·전분(1)임

2) 본사+생산공장: 본사, 생산공장+연구소: 생산공장으로 재분류

나. 사업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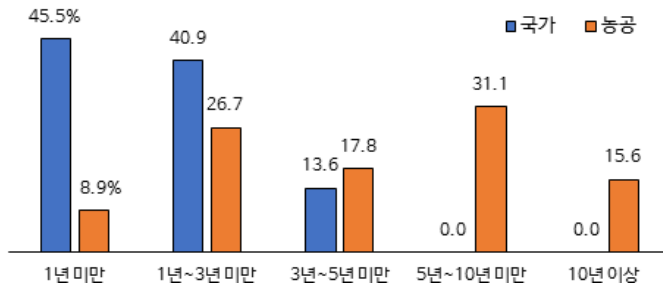
○ 현 사업장에 입주한 기간에 대해서 1~3년(31.3%), 1년 미만(20.9%)과 5~10년 미만(20.9%)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냄

-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산단은 1년 미만(45.5%)과 1~3년(40.9%)의 비중이 높지만, 농공단지는 5년~10년(31.1%)과 1~3년(26.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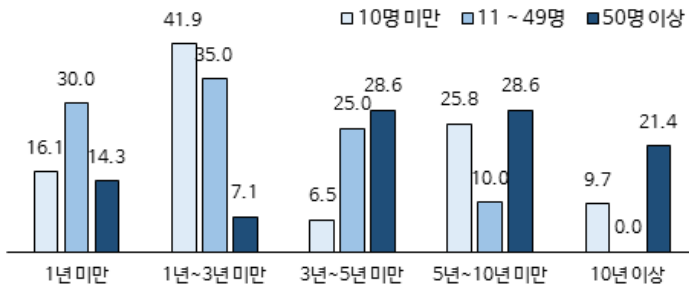
- 규모별로 보면, 10명 미만과 11~49명 업체는 1~3년 미만 업체 비율이 가장 높지만, 50명 이상 업체는 3~5년과 5~10년의 비중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4〉 현 사업장의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

구분		1년 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합계
유형	국가	10 (45.5)	9 (40.9)	3 (13.6)	0 (0.0)	0 (0.0)	22 (100.0)
	농공	4 (8.9)	12 (26.7)	8 (17.8)	14 (31.1)	7 (15.6)	45 (100.0)
종사 자수	10명 미만	5 (16.1)	13 (41.9)	2 (6.5)	8 (25.8)	3 (9.7)	31 (100.0)
	11~ 49명	6 (30.0)	7 (35.0)	5 (25.0)	2 (10.0)	0 (0.0)	20 (100.0)
	50명 이상	2 (14.3)	1 (7.1)	4 (28.6)	4 (28.6)	3 (21.4)	14 (100.0)
	미응답	1 (50.0)	0 (0.0)	0 (0.0)	0 (0.0)	1 (50.0)	2 (100.0)
입주 형태	본사	4 (13.8)	9 (31.0)	5 (17.2)	6 (20.7)	5 (17.2)	29 (100.0)
	생산	9 (27.3)	9 (27.3)	6 (18.2)	7 (21.2)	2 (6.1)	33 (100.0)
	미응답	1 (20.0)	3 (60.0)	0 (0.0)	1 (20.0)	0 (0.0)	5 (100.0)
합계		14 (20.9)	21 (31.3)	11 (16.4)	14 (20.9)	7 (10.4)	67 (100)



〈그림 5-2〉 현 사업장의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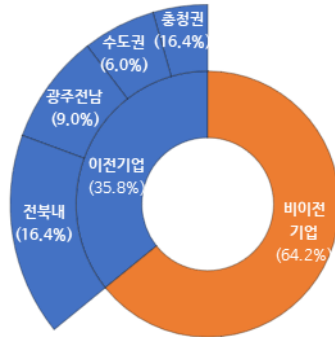


〈그림 5-3〉 현 사업장의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기업규모별)

- 기업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기업이 24개로 응답자의 35.8%를 차지하며, 이전업체의 기존 사업장은 전북(1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한 업체의 기존사업장 위치에 대해서는 전북(16.4%), 광주·전남(9.0%), 수도권 (6.0%)의 순서로 많은 응답 비중을 나타냄

〈표 5-5〉 기업의 이전특성에 대한 응답 분포

구분	기존사업장 위치(이전기업)					비이전 업체	합계
	전북 내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	소계		
응답 현황	11 (16.4)	4 (6.0)	3 (4.5)	6 (9.0)	24 (35.8)	43 (64.2)	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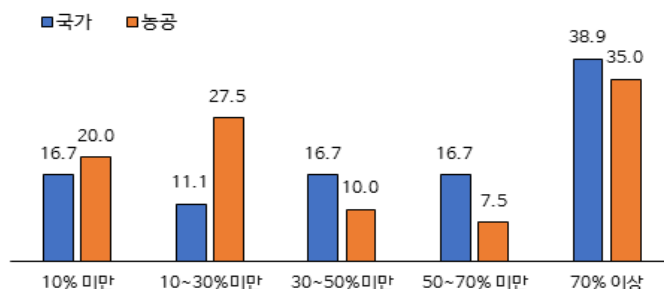
〈그림 5-4〉 기존사업장 위치 응답 분포(이전업체)

- 지역 원료 이용에 대해 70% 이상(36.2%)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종사자 50명 이상 그룹에서 지역 원료 투입비율이 낮게 나타남
- 지역 원료 이용 비율에 대하여 70% 이상(36.2%), 10~30% 미만(22.4%), 10% 미만 (19.0%)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종사자 50명 이상 그룹은 10% 미만과 10~30% 미만 응답이 30.8%로 가장 많지만, 10명 미만과 10~49명 업체는 70% 이상 응답이 각각 45.8%와 36.8%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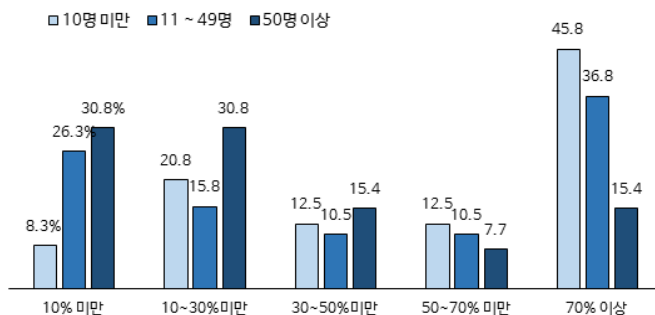
〈표 5-6〉 해당 지역의 원료(농산물) 이용 현황

구분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 이상	합계
유형	국가	3 (16.7)	2 (11.1)	3 (16.7)	3 (16.7)	7 (38.9)	18 (100.0)
	농공	8 (20.0)	11 (27.5)	4 (10.0)	3 (7.5)	14 (35.0)	40 (100.0)
종사 자수	10명 미만	2 (8.3)	5 (20.8)	3 (12.5)	3 (12.5)	11 (45.8)	24 (100.0)
	11~ 49명	5 (26.3)	3 (15.8)	2 (10.5)	2 (10.5)	7 (36.8)	19 (100.0)
	50명 이상	4 (30.8)	4 (30.8)	2 (15.4)	1 (7.7)	2 (15.4)	13 (100.0)
입주 형태	본사	6 (22.2)	10 (37.0)	1 (3.7)	1 (3.7)	9 (33.3)	27 (100.0)
	생산	4 (15.4)	2 (7.7)	6 (23.1)	5 (19.2)	9 (34.6)	26 (100.0)
	미응 답	1 (20.0)	1 (20.0)	0 (0.0)	0 (0.0)	3 (60.0)	5 (100.0)
합계		11 (19.0)	13 (22.4)	7 (12.1)	6 (10.3)	21 (36.2)	58 (100.0)

주: 미응답 및 기타 의견 제외



〈그림 5-5〉 지역 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응답 분포(유형별)



〈그림 5-6〉 지역 원료 투입비율 응답 분포(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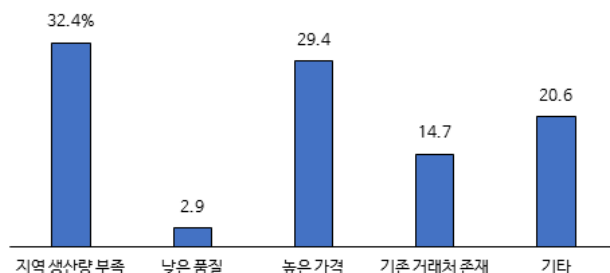
○ 지역 원료 투입이 낮은 이유(50% 미만 업체 대상)는 지역 생산량 부족(32.4%), 높은 가격(29.4%)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 원료 투입이 낮은 기타 의견으로는 재배(구매) 불가, 다양성 부족, 농가에서 직접 시장에 출하(판매), 수입산 이용, 첨가물 용도로만 이용 등이 있음

〈표 5-7〉 지역 원료 투입비율이 낮은 이유(50% 미만 업체 대상, 중복응답)

구분	생산량부족	낮은품질	높은가격	기존거래처존재	기타	합계
응답 현황	11 (32.4)	1 (2.9)	10 (29.4)	5 (14.7)	7 (20.6)	34 (100.0)

* 기타: 다양성 부족, 지역 내 재배 불가, 수입산 이용 등



〈그림 5-7〉 지역 원료 투입비율이 낮은 이유(중복응답)

○ 기업의 주된 판매시장의 범위는 국내 전체의 응답이 가장 많지만, 노동시장의 범위는 해당 시군에 한정되는 응답이 많아 대조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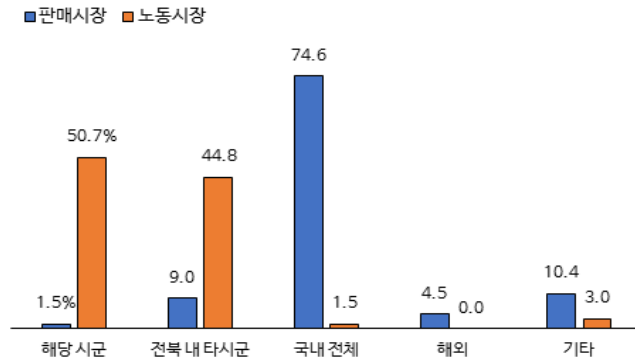
- 판매시장의 범위는 국내 전체(74.6%)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지만, 노동시장은 해당 시군(50.7%)과 전북 타 시군(44.8%)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 넓은 판매시장과 좁은 노동시장의 범위는 수도권 업체보다 높은 물류비 부담과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표 5-8〉 판매 및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

구분	해당 시군	전북타시군	국내 전체	해외시장	기타	합계
판매시장 범위	1 (1.5)	6 (9.0)	50 (74.6)	3 (4.5)	7 ¹⁾ (10.4)	67 (100)
노동시장 범위	34 (50.7)	30 (44.8)	1.0 (1.5)	0 (0.0)	2 (3.0)	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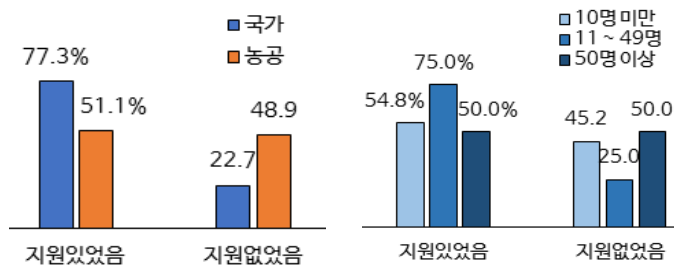
1) 주요 해외시장: 미국, 동남아, 중국 등



〈그림 5-8〉 판매 및 노동시장의 범위

다. 기업입주 지원

- 행정기관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다는 응답은 40개(59.7%)로 지원이 없었다는 응답(27개, 40.3%)보다 많은 비중을 나타냄
-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있었다는 응답은 77.3%를 나타내지만, 농공단지의 경우 지원 있었다는 응답이 51.1%를 나타냄
-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는 입주 시 지원이 있었다는 응답은 11~49명 그룹이 75.0%를 나타내며, 10명 미만 그룹은 54.8%, 50명 이상 그룹은 50.0%를 나타냄



〈그림 5-9〉 입주 시 행정기관의 지원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표 5-9〉 현 사업장 입주 시 행정 기관지원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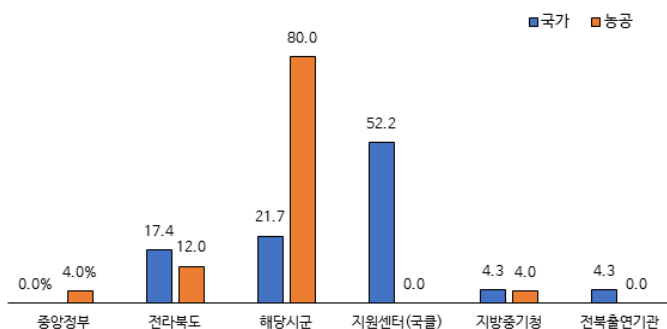
구분		지원 있었음	지원 없었음	합계
입지 유형	국가	17 (77.3)	5 (22.7)	22 (100.0)
	농공	23 (51.1)	22 (48.9)	45 (100.0)
종사 자수	10명 미만	17 (54.8)	14 (45.2)	31 (100.0)
	11 ~ 49명	15 (75.0)	5 (25.0)	20 (100.0)
	50명 이상	7 (50.0)	7 (50.0)	14 (100.0)
	미응답	1 (50.0)	1 (50.0)	2 (100.0)
입주 형태	본사	19 (65.5)	10 (34.5)	29 (100.0)
	생산	20 (60.6)	13 (39.4)	33 (100.0)
	미응답	1 (20.0)	4 (80.0)	5 (100.0)
합계		40 (59.7)	27 (40.3)	67 (100.0)

○ 주요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52.1%), 국클 지원센터(25.0%), 전라북도 (14.6%)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지원센터(52.2%), 해당 시·군 (익산시, 21.7%), 전라북도(17.4%)의 응답 비율을 보이지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해당 시·군(80.0%)의 응답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함
- 종사자 규모와 입주 형태에 따라서는 모든 그룹에서 주요 지원기관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원센터가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5-10〉 주요 지원기관에 대한 응답 분포(중복응답)

구분		중앙 정부	전라 북도	해당 시군	국립 지원센터	지방중소 기업청	전북 출연기관	합계
입지	국가	0 (0.0)	4 (17.4)	5 (21.7)	12 (52.2)	1 (4.3)	1 (4.3)	23 (100.0)
	농공	1 (4.0)	3 (12.0)	20 (80.0)	0 (0.0)	1 (4.0)	0 (0.0)	25 (100.0)
종사 자수	10명 미만	0 (0.0)	2 (10.5)	10 (52.6)	5 (26.3)	1 (5.3)	1 (5.3)	19 (100)
	11~49명	1 (5.0)	3 (15.0)	10 (50.0)	5 (25.0)	1 (5.0)	0 (0.0)	20 (100)
	50명 이상	0 (0.0)	2 (25)	5 (62.5)	1 (12.5)	0 (0.0)	0 (0.0)	8 (100)
	미응답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
입주 형태	본사	1 (4.8)	3 (14.3)	12 (57.1)	4 (19.0)	0 (0.0)	1 (4.8)	21 (100.0)
	생산	0 (0.0)	4 (15.4)	13 (50.0)	7 (26.9)	2 (7.7)	0 (0.0)	26 (100.0)
	미응답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합계		1 (2.1)	7 (14.6)	25 (52.1)	12 (25.0)	2 (4.2)	1 (2.1)	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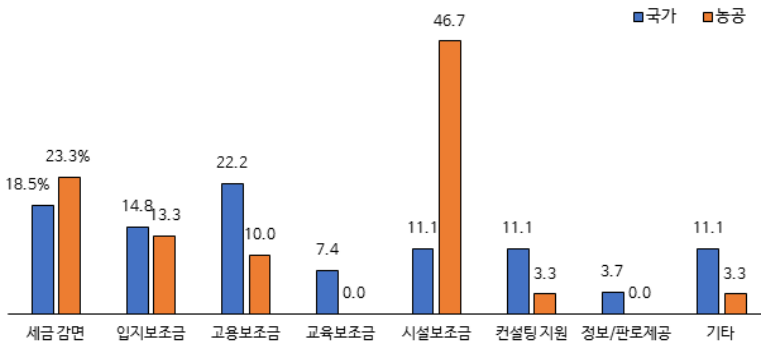
〈그림 5-10〉 지원기관에 대한 응답 분포(입지유형별)

- 입주 시 지원항목은 시설보조금(29.8%), 세금 감면(21.1%), 고용보조금(15.8%)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고용보조금(22.2%), 세금 감면(18.5%)의 응답 비율이 높고, 농공단지 시설 보조금(46.7%), 세금 감면(23.3%)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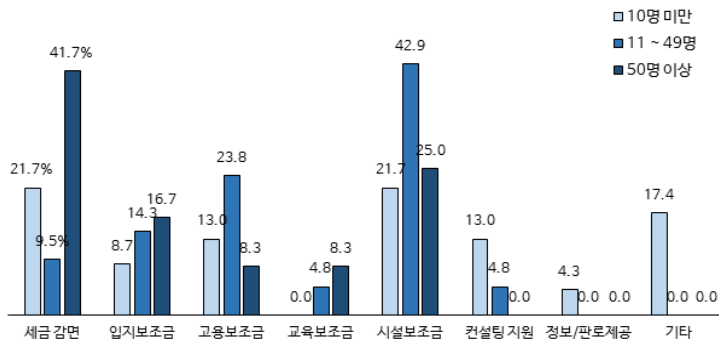
- 기업 규모가 50명 이상 기업은 세금 감면(41.7%), 11~49명은 시설 보조금(42.9%), 10명 미만 기업은 세금감면 및 시설보조금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의 입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본사의 경우 세금 감면(34.6%)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생산시설의 경우 시설 보조금(34.6%)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1〉 주요 지원항목 대한 응답 분포(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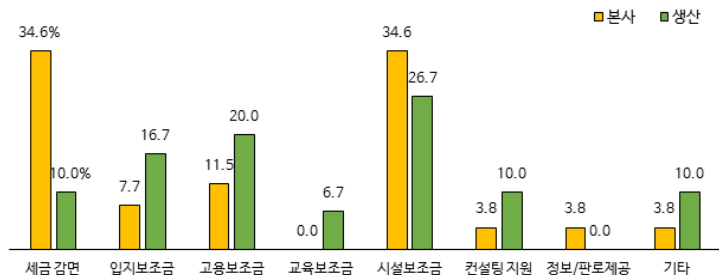
구분		세금 감면	보조금				컨설팅	정보판 로	기타	합계
			입지	고용	교육	시설				
입지	국가	5 (18.5)	4 (14.8)	6 (22.2)	2 (7.4)	3 (11.1)	3 (11.1)	1 (3.7)	3 (11.1)	27 (100.0)
	농공	7 (23.3)	4 (13.3)	3 (10.0)	0 (0.0)	14 (46.7)	1 (3.3)	0 (0.0)	1 (3.3)	30 (100.0)
종사 자수	10명 미만	5 (21.7)	2 (8.7)	3 (13.0)	0 (0.0)	5 (21.7)	3 (13.0)	1 (4.3)	4 (17.4)	23 (100.0)
	11~ 49명	2 (9.5)	3 (14.3)	5 (23.8)	1 (4.8)	9 (42.9)	1 (4.8)	0 (0.0)	0 (0.0)	21 (100.0)
	50명 이상	5 (41.7)	2 (16.7)	1 (8.3)	1 (8.3)	3 (25.0)	0 (0.0)	0 (0.0)	0 (0.0)	12 (100.0)
	미응답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입주 형태	본사	9 (34.6)	2 (7.7)	3 (11.5)	0 (0.0)	9 (34.6)	1 (3.8)	1 (3.8)	1 (3.8)	26 (100.0)
	생산	3 (10.0)	5 (16.7)	6 (20.0)	2 (6.7)	8 (26.7)	3 (10.0)	0 (0.0)	3 (10.0)	30 (100.0)
	미응답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합계		12 (21.1)	8 (14.0)	9 (15.8)	2 (3.5)	17 (29.8)	4 (7.0)	1 (1.8)	4 (7.0)	57 (100.0)



〈그림 5-11〉 지원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입지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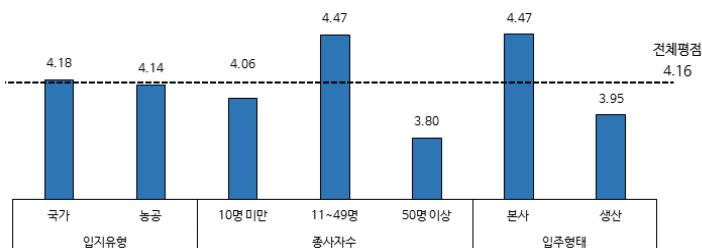
〈그림 5-12〉 지원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기업규모별)



〈그림 5-13〉 지원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기능별)

○ 행정기관 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 매우 도움 됨의 응답이 52.6%로 가장 많으며, 평점은 4.1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는 종사자 11~49명 그룹이 4.47점을 나타내며, 10명 미만 그룹은 4.06점, 50명 이상 그룹은 3.80점을 나타냄
- 입주형태별로 살펴보면, 본사 기능의 경우 평점 4.47점을 나타내지만, 생산기능의 경우에는 3.95점을 나타냄



〈그림 5-14〉 행정기관 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점

〈표 5-12〉 행정기관 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분포 및 평점

구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합계	평점 ¹⁾
입지 유형	국가	0 (0.0)	0 (0.0)	5 (29.4)	4 (23.5)	8 (47.1)	17 (100.0)	4.18
	농공	0 (0.0)	2 (9.5)	5 (23.8)	2 (9.5)	12 (57.1)	21 (100.0)	4.14
종사 자수	10명 미만	0 (0.0)	0 (0.0)	6 (35.3)	4 (23.5)	7 (41.2)	17 (100.0)	4.06
	11~49명	0 (0.0)	1 (6.7)	2 (13.3)	1 (6.7)	11 (73.3)	15 (100.0)	4.47
	50명 이상	0 (0.0)	1 (20.0)	1 (20.0)	1 (20.0)	2 (40.0)	5 (100.0)	3.80
	미응답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3.00
입주 형태	본사	0 (0.0)	1 (5.9)	3 (17.6)	0 (0.0)	13 (76.5)	17 (100.0)	4.47
	생산	0 (0.0)	1 (5.0)	6 (30.0)	6 (30.0)	7 (35.0)	20 (100.0)	3.95
	미응답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3.00
합계		0 (0.0)	2 (5.3)	10 (26.3)	6 (15.8)	20 (52.6)	38 (100.0)	4.16

1) 평점은 전혀 도움 안 됨(1) ~ 보통(3) ~ 매우 도움 됨(5)으로 환산된 평균점수임(미응답 제외)

라. 입지여건

○ 사업장 위치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저렴한 용지(26.6%), 우수한 자연환경(15.6%), 농식품 산업집적(10.9%)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1순위 응답의 경우 저렴한 용지가격(25.7%), 농식품 산업집적(17.1%), 우수한 자연환경(14.3%)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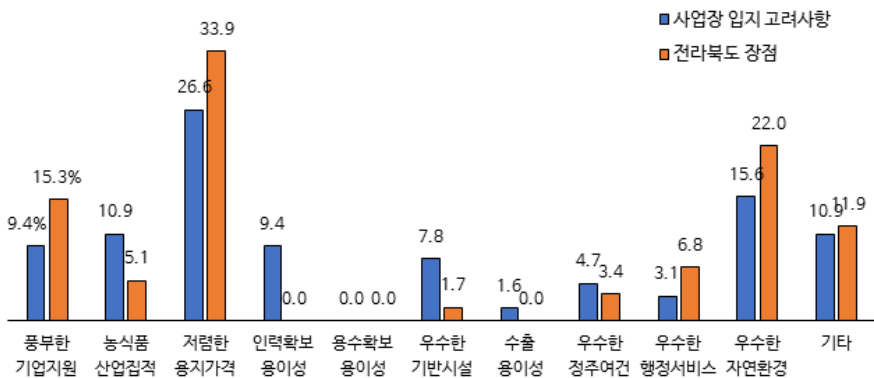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측면의 장점으로서는 저렴한 용지가격(33.9%), 우수한 자연환경(22.0%), 풍부한 기업지원제도(15.3%)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으로는 저렴한 용지가격(36.4%), 우수한 자연환경(18.2%), 기타(12.1%)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주요 기타 의견은 지역브랜드(특화)와 교통·물류 우수 등으로 나타남

〈표 5-13〉 사업장 위치선정 고려사항 및 전라북도 유치여건(장점)

구분	사업장 위치선정 시 고려사항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장점)		
	1순위	2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합계
풍부한 기업지원제도	4 (11.4)	2 (6.9)	6 (9.4)	3 (9.1)	6 (23.1)	9 (15.3)
농식품 산업집적	6 (17.1)	1 (3.4)	7 (10.9)	2 (6.1)	1 (3.8)	3 (5.1)
저렴한 용지가격	9 (25.7)	8 (27.6)	17 (26.6)	12 (36.4)	8 (30.8)	20 (33.9)
인력확보 용이	1 (2.9)	5 (17.2)	6 (9.4)	0 (0.0)	0 (0.0)	0 (0.0)
용수확보 용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수한 기반시설	3 (8.6)	2 (6.9)	5 (7.8)	1 (3.0)	0 (0.0)	1 (1.7)
수출 용이	0 (0.0)	1 (3.4)	1 (1.6)	0 (0.0)	0 (0.0)	0 (0.0)
우수한 정주 여건	2 (5.7)	1 (3.4)	3 (4.7)	2 (6.1)	0 (0.0)	2 (3.4)
우수한 행정서비스	0 (0.0)	2 (6.9)	2 (3.1)	3 (9.1)	1 (3.8)	4 (6.8)
우수한 자연환경	5 (14.3)	5 (17.2)	10 (15.6)	6 (18.2)	7 (26.9)	13 (22.0)
기타	5 (14.3)	2 (6.9)	7 (10.9)	4 (12.1)	3 (11.5)	7 (11.9)
합계	35 (100.0)	29 (100.0)	64 (100.0)	33 (100.0)	26 (100.0)	59 (100.0)

- 1) 주요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브랜드(특화), 우수한 교통·물류 등으로 나타남
2) 해당 문항에 대한 미응답은 제외하였음



〈그림 5-15〉 사업장 입지 애로사항 및 전라북도 장점 응답 분포

○ 사업장 위치선정 시 애로사항은 인력 부족(31.7%), 기업지원 부족(23.0%), 열악한 인프라(15.1%)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 역시 인력 부족(36.9%), 기업지원 부족(24.6%), 열악한 인프라(18.5%)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전라북도의 식품기업 유치 측면의 단점으로는 인력 부족(27.4%), 기업지원 부족(22.6%), 수도권 접근성 부족(15.3%)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기업지원 부족(31.8%), 인력 부족(25.8%), 수도권 접근성 부족(16.7%)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사업장 위치선정 시 인력 부족, 기업지원 부족, 인프라, 수도권 접근성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전북의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사업장 위치선정 시 주된 애로사항(인력, 기업지원, 접근성 등)이 지역의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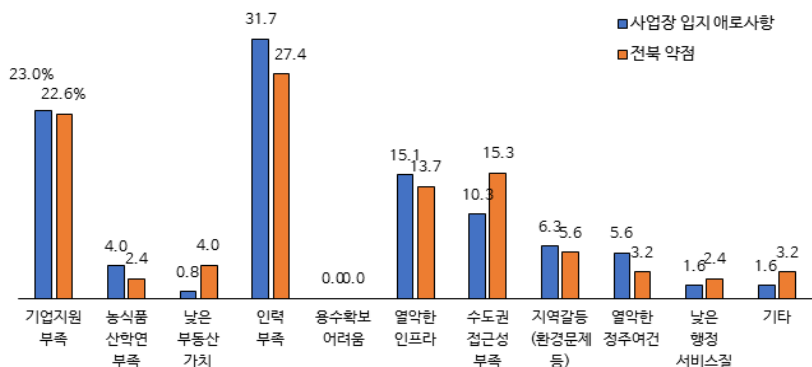
〈표 5-14〉 사업장 위치선정 애로사항 및 전라북도 유치여건(단점)

구분	사업장 위치선정 시 애로사항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단점)		
	1순위	2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합계
기업지원 부족	16 (24.6)	13 (21.3)	29 (23.0)	21 (31.8)	7 (12.1)	28 (22.6)
농식품산업 부족	1 (1.5)	4 (6.6)	5 (4.0)	0 (0.0)	3 (5.2)	3 (2.4)
낮은 부동산가치	1 (1.5)	0 (0.0)	1 (0.8)	2 (3.0)	3 (5.2)	5 (4.0)
인력 부족	24 (36.9)	16 (26.2)	40 (31.7)	17 (25.8)	17 (29.3)	34 (27.4)
용수확보 어려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열악한 인프라	12 (18.5)	7 (11.5)	19 (15.1)	7 (10.6)	10 (17.2)	17 (13.7)
수도권 접근성 부족	5 (7.7)	8 (13.1)	13 (10.3)	11 (16.7)	8 (13.8)	19 (15.3)
지역갈등 (환경문제 등)	1 (1.5)	7 (11.5)	8 (6.3)	1 (1.5)	6 (10.3)	7 (5.6)
열악한 정주 여건	3 (4.6)	4 (6.6)	7 (5.6)	3 (4.5)	1 (1.7)	4 (3.2)
낮은 행정서비스 질	1 (1.5)	1 (1.6)	2 (1.6)	1 (1.5)	2 (3.4)	3 (2.4)

구분	사업장 위치선정 시 애로사항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단점)		
	1순위	2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합계
기타 ¹⁾	1 (1.5)	1 (1.6)	2 (1.6)	3 (4.5)	1 (1.7)	4 (3.2)
합계	65 (100.0)	61 (100.0)	126 (100.0)	66 (100.0)	58 (100.0)	124 (100.0)

1) 주요 기타 의견으로는 도로교통 부족, 애로사항 없음, 젊은 인력 부족 등이 있음

2) 해당 문항에 대한 미응답은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5-16〉 사업장 입지 애로사항 및 전라북도 단점 응답 분포

마. 정책수요

○ 기업지원시설의 수요에 대해서는 품질안전성지원시설(36.1%), 기능성평가 지원 시설(27.9%), 패키징 지원시설(16.4%)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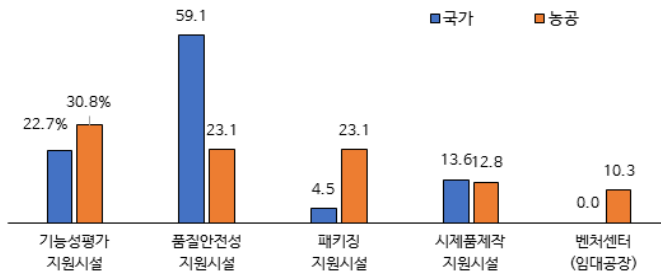
-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품질안전성지원시설(59.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나, 농공단지에는 기능성평가 지원시설(30.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규모에서 품질안전성과 기능성평가 지원시설 수요가 높지만, 10명 미만은 패키징(24.1%), 11~49명은 시제품 제작(25.0%)의 시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15〉 필요한 기업지원시설 수요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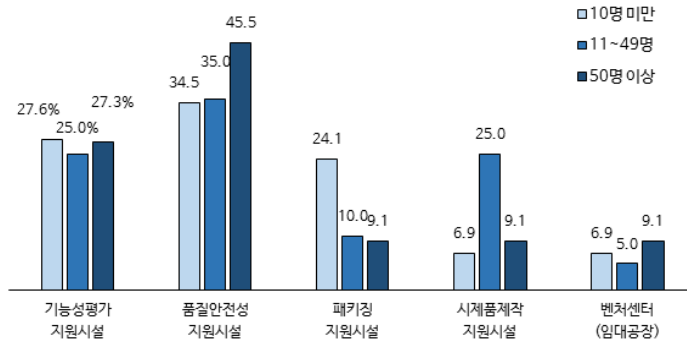
구분	기능성평가 지원시설	품질안전성 지원시설	패키징 지원시설	시제품제작 지원시설	벤처센터 (임대공장)	합계
입지 유형	국가	5 (22.7)	13 (59.1)	1 (4.5)	3 (13.6)	22 (100.0)
	농공	12 (30.8)	9 (23.1)	9 (23.1)	5 (12.8)	39 (100.0)

구분		기능성평가 지원시설	품질안전성 지원시설	패키징 지원시설	시제품제작 지원시설	벤처센터 (임대공장)	합계
종사 자수	10명 미만	8 (27.6)	10 (34.5)	7 (24.1)	2 (6.9)	2 (6.9)	29 (100.0)
	11 ~ 49명	5 (25.0)	7 (35.0)	2 (10.0)	5 (25.0)	1 (5.0)	20 (100.0)
	50명 이상	3 (27.3)	5 (45.5)	1 (9.1)	1 (9.1)	1 (9.1)	11 (100.0)
	미응답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입주 형태	본사	5 (20.8)	10 (41.7)	3 (12.5)	4 (16.7)	2 (8.3)	24 (100.0)
	생산	10 (31.3)	12 (37.5)	4 (12.5)	4 (12.5)	2 (6.3)	32 (100.0)
	미응답	2 (40.0)	0 (0.0)	3 (60.0)	0 (0.0)	0 (0.0)	5 (100.0)
합계		17 (27.9)	22 (36.1)	10 (16.4)	8 (13.1)	4 (6.6)	61 (100.0)

주: 해당문항에 대한 미응답 제외



〈그림 5-17〉 기업지원시설 수요(입지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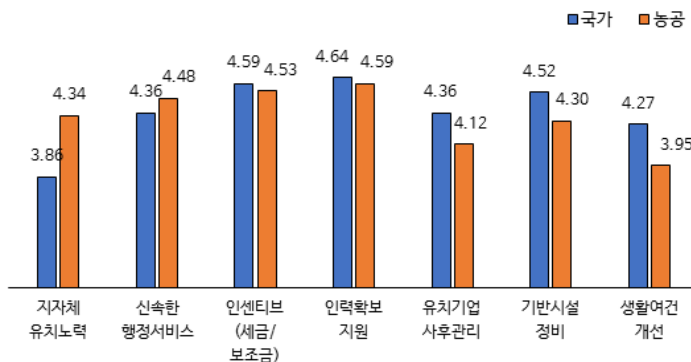
〈그림 5-18〉 기업지원시설 수요(기업규모별)

-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는 평점 4.06~4.61 수준을 보이며, 인력확보 지원(4.61), 인센티브(4.55), 신속 행정(4.44)의 순서로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통으로 인력확보와 인센티브의 중요도가 가장 높으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반시설 정비(4.52), 농공단지는 신속행정(4.48)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정책 중요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며, 50명 이상 기업은 지자체 유치 노력과 신속 행정, 49명 이하 기업은 인력확보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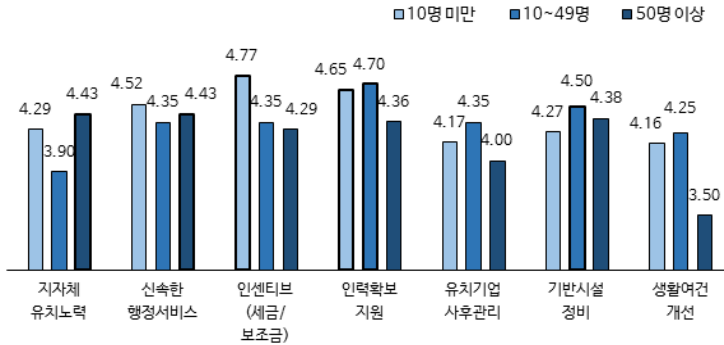
〈표 5-16〉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 평가

구분	입지유형		종사자수			기능		전체
	국가	농공	10명 미만	11~49명	50명 이상	본사	생산 공장	
지자체 유치노력	3.86	4.34	4.29	3.90	4.43	4.21	4.18	4.18
신속한 행정서비스	4.36	4.48	4.52	4.35	4.43	4.57	4.30	4.44
인센티브(세금/보조금)	4.59	4.53	4.77	4.35	4.29	4.59	4.48	4.55
인력확보 지원	4.64	4.59	4.65	4.70	4.36	4.79	4.45	4.61
유치기업 사후관리	4.36	4.12	4.17	4.35	4.00	4.29	4.16	4.20
기반시설 정비	4.52	4.30	4.27	4.50	4.38	4.59	4.25	4.38
생활여건 개선	4.27	3.95	4.16	4.25	3.50	4.18	4.03	4.06
중요도 평균	4.37	4.33	4.40	4.34	4.20	4.46	4.27	4.35

주: 해당문항에 대한 미응답 제외



〈그림 5-19〉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 평가(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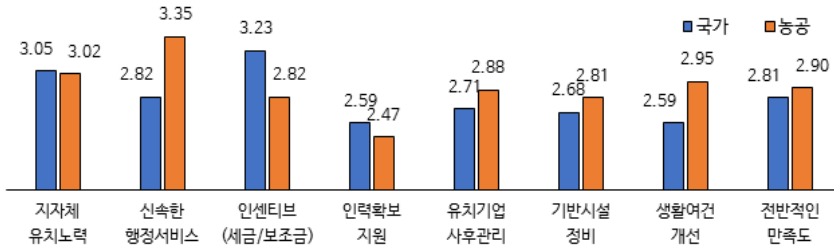
〈그림 5-20〉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 평가(기업규모별)

- 식품기업 유치 정책의 만족도는 2.51~3.17점(전반적 만족도: 2.87)을 보이며, 신속 행정(3.17), 지자체 유치 노력(3.03), 인센티브(2.95)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입지유형별에 따라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인센티브(3.23), 지자체 유치노력(3.05)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농공단지는 신속 행정(3.35), 지자체 유치 노력(3.02)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속 행정, 지자체 유치 노력, 인센티브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며, 50명 이상 기업에서만 생활여건 개선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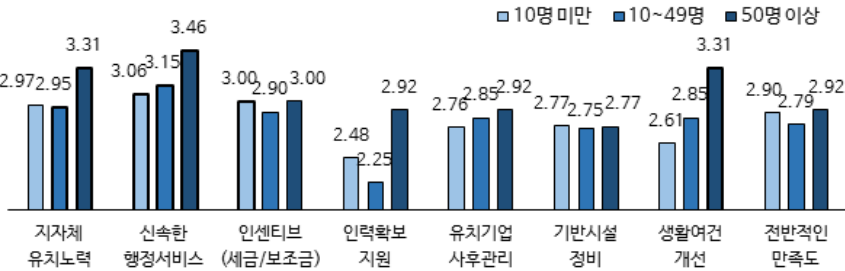
〈표 5-17〉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만족도 평가

구분	입지유형		종사자수			기능		전체
	국가	농공	10명 미만	11~49명	50명 이상	본사	생산	
지자체 유치노력	3.05	3.02	2.97	2.95	3.31	3.07	3.00	3.03
신속한 행정서비스	2.82	3.35	3.06	3.15	3.46	3.30	3.06	3.17
인센티브(세금/보조금)	3.23	2.82	3.00	2.90	3.00	2.96	3.00	2.95
인력확보 지원	2.59	2.47	2.48	2.25	2.92	2.44	2.52	2.51
유치기업 사후관리	2.71	2.88	2.76	2.85	2.92	2.96	2.69	2.83
기본시설 정비	2.68	2.81	2.77	2.75	2.77	2.96	2.64	2.77
생활여건 개선	2.59	2.95	2.61	2.85	3.31	3.04	2.70	2.83
전반적인 만족도	2.81	2.90	2.90	2.79	2.92	3.00	2.74	2.87

주: 해당문항에 대한 미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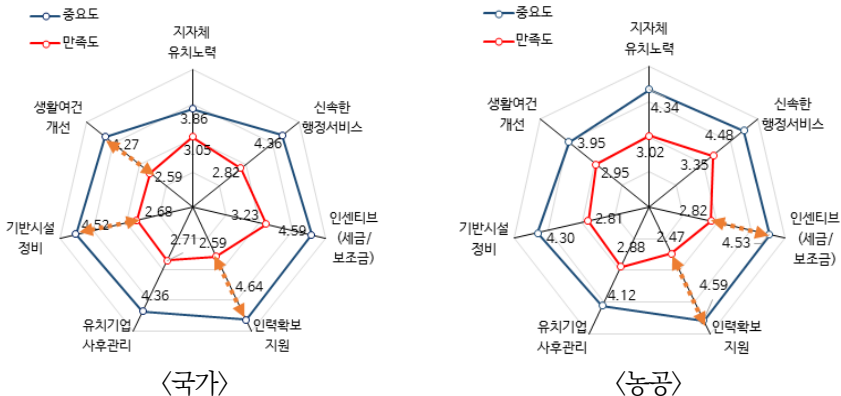
〈그림 5-21〉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만족도 평가(유형별)



〈그림 5-22〉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만족도(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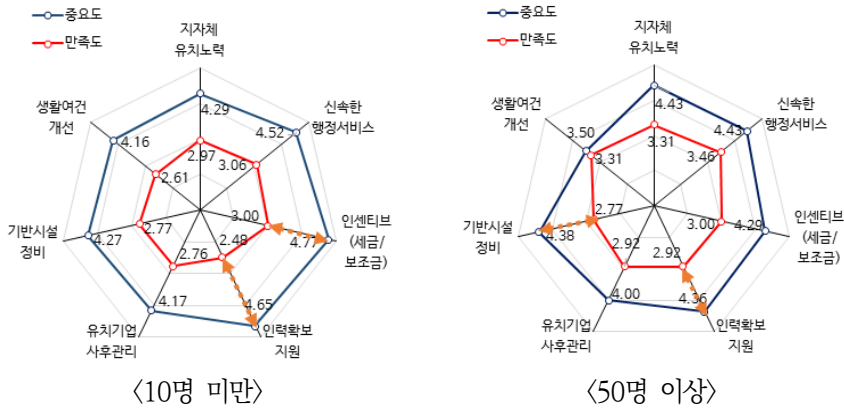
○ 입지 유형에 따른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력확보 지원정책이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확보 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반시설 정비와 생활여건 개선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지만, 농공단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5-23〉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종합(입지유형별)

- 10명 미만 기업은 인력확보 지원과 인센티브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지만,
50명 이상은 기반시설 정비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냄
- 모든 기업 규모 그룹에서 인력확보 지원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명 이하 그룹에서는 인센티브 지원이, 50명 이상 그룹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5-24〉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종합(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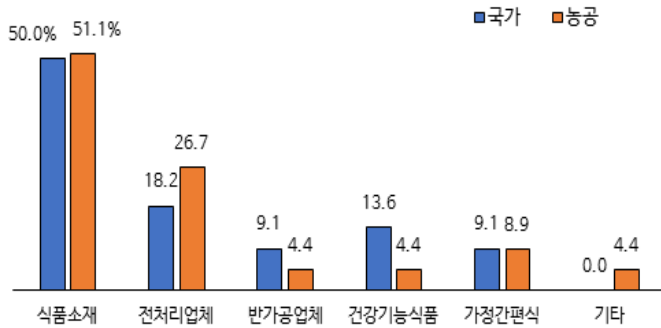
바.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 전북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유치업종에 대해서 식품소재(50.7%), 전처리 업체(23.9%), 가정간편식(9.0%)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통으로 식품소재와 전처리업체의 응답이 많은 비율을 보이지만, 농공단지에서 전처리업체의 응답 비율(26.7%)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 역시 식품소재, 전처리업체의 순서로 응답이 많게 나타나지만, 50명 미만의 업체는 식품소재, 50명 이상의 업체는 전처리업체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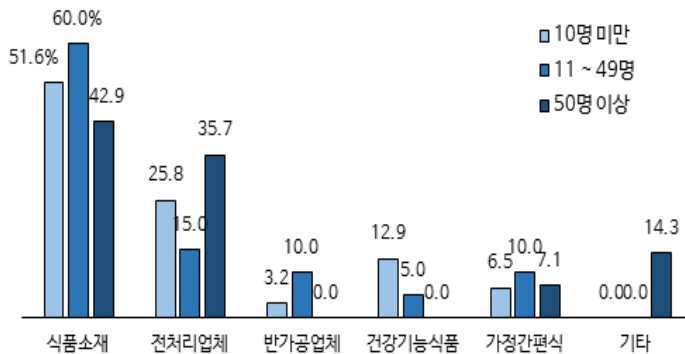
〈표 5-18〉 전략적 유치업종에 대한 응답분포

구분		식품 소재	전처리 업체	반가공 업체	건강기능 식품	가정 간편식	기타	합계
입지 유형	국가	11 (50.0)	4 (18.2)	2 (9.1)	3 (13.6)	2 (9.1)	0 (0.0)	22 (100.0)
	농공	23 (51.1)	12 (26.7)	2 (4.4)	2 (4.4)	4 (8.9)	2 (4.4)	45 (100.0)
종사 자수	10명 미만	16 (51.6)	8 (25.8)	1 (3.2)	4 (12.9)	2 (6.5)	0 (0.0)	31 (100)
	11~ 49명	12 (60.0)	3 (15.0)	2 (10.0)	1 (5.0)	2 (10.0)	0 (0.0)	20 (100)
	50명 이상	6 (42.9)	5 (35.7)	0 (0.0)	0 (0.0)	1 (7.1)	2 (14.3)	14 (100)
	미응답	0 (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
입주 형태	본사	17 (58.6)	5 (17.2)	2 (6.9)	2 (6.9)	1 (3.4)	2 (6.9)	29 (100.0)
	생산	15 (45.5)	9 (27.3)	2 (6.1)	3 (9.1)	4 (12.1)	0 (0.0)	33 (100.0)
	미응답	2 (40.0)	2 (40.0)	0 (0.0)	0 (0.0)	1 (20.0)	0 (0.0)	5 (100.0)
합계		34 (50.7)	16 (23.9)	4 (6.0)	5 (7.5)	6 (9.0)	2 (3.0)	67 (100.0)

기타: 중복응답(전처리업체 및 가정간편식)



〈그림 5-25〉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유치업종(입지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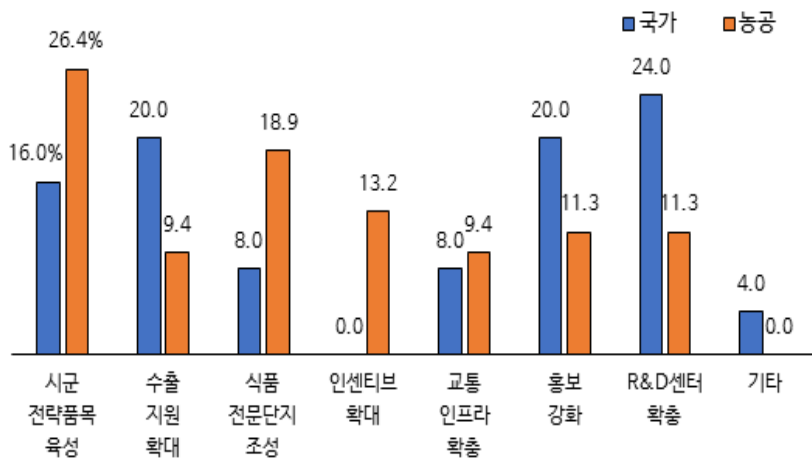


〈그림 5-26〉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유치업종(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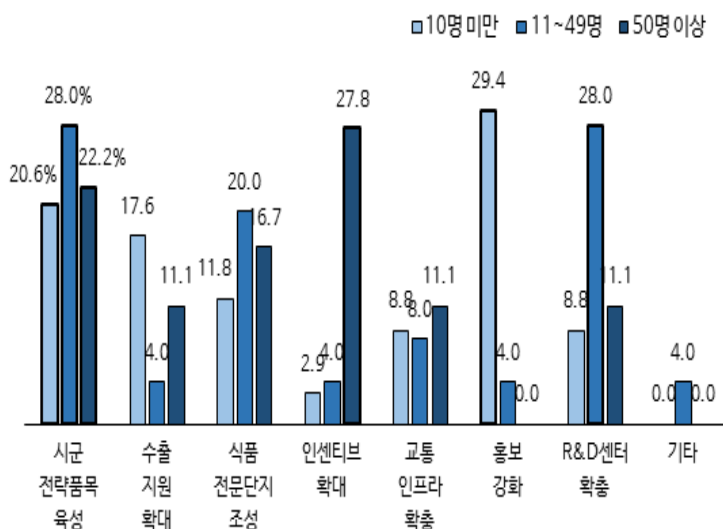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군전략품목 육성(23.1%), 식품 전문단지 조성 및 R&D 지원센터 확충(15.4%)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R&D센터 확충(24.0%), 수출 지원(20.0%), 홍보 강화(20.0%)의 응답이 많지만, 농공단지는 시군 전략품목 육성(26.4%), 식품 전문단지 조성(18.9%)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50명 이상 기업은 인센티브 확대(27.8%), 11~49명 기업은 R&D센터·시군 전략품목 육성(28.0%), 10명 이하 기업은 홍보 강화(29.4%)의 응답이 가장 많음
- 입주형태별로 살펴보면, 본사는 R&D센터 확충(24.2%), 식품 전문단지 조성(21.2%)의 순서로 응답이 많지만, 생산기능의 경우 시군 전략품목 육성(30.8%), 홍보 강화(17.9%)의 순서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9〉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분포(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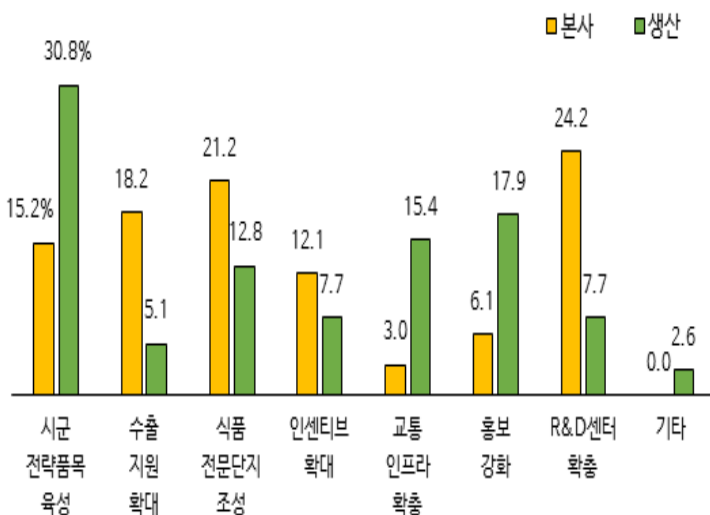
구분		시군 전략 품목 육성	수출 지원 확대	식품 전문 단지 조성	인센 티브 확대	교통 인프라 확충	홍보 강화	R&D 지원 센터 확충	기타	합계
입지 유형	국가	4 (16.0)	5 (20.0)	2 (8.0)	0 (0.0)	2 (8.0)	5 (20.0)	6 (24.0)	1 (4.0)	25 (100.0)
	농공	14 (26.4)	5 (9.4)	10 (18.9)	7 (13.2)	5 (9.4)	6 (11.3)	6 (11.3)	0 (0.0)	53 (100.0)
중사 자수	10명 미만	7 (20.6)	6 (17.6)	4 (11.8)	1 (2.9)	3 (8.8)	10 (29.4)	3 (8.8)	0 (0.0)	34 (100.0)
	11~ 49명	7 (28.0)	1 (4.0)	5 (20.0)	1 (4.0)	2 (8.0)	1 (4.0)	7 (28.0)	1 (4.0)	25 (100.0)
	50명 이상	4 (22.2)	2 (11.1)	3 (16.7)	5 (27.8)	2 (11.1)	0 (0.0)	2 (11.1)	0 (0.0)	18 (100.0)
	미 응답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입주 형태	본사	5 (15.2)	6 (18.2)	7 (21.2)	4 (12.1)	1 (3.0)	2 (6.1)	8 (24.2)	0 (0.0)	33 (100.0)
	생산	12 (30.8)	2 (5.1)	5 (12.8)	3 (7.7)	6 (15.4)	7 (17.9)	3 (7.7)	1 (2.6)	39 (100.0)
	미응 답	1 (16.7)	2 (33.3)	0 (0.0)	0 (0.0)	0 (0.0)	2 (33.3)	1 (16.7)	0 (0.0)	6 (100.0)
합계		18 (23.1)	10 (12.8)	12 (15.4)	7 (9.0)	7 (9.0)	11 (14.1)	12 (15.4)	1 (1.3)	78 (100.0)



〈그림 5-27〉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 방향(유형별)



〈그림 5-28〉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 방향(기업규모별)



〈그림 5-29〉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 방향(기능별)

〈표 5-20〉 기타 애로사항

구분	내용	합계
고창군	인력확보, 연구소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인력수급
	인건비 지원 확대 필요	
	공장설립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정착 필요(업체가 모르는 제도 포함)	행정서비스
	입주 시 법/제도적 절차 지원, 신속한 행정서비스와 홍보 활동 지원 강화	
	수출기업 지원 확대	물류/교통
	물류비 지원 확대로 수도권 업체 수준의 경쟁력 확보 필요	
	환경개선 문제 시급함(과도한 규제 등)	환경처리
	편의시설(식당/편의점)과 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하며, 차량 없이 이동 불가	편의시설
	먹거리(식사) 어려움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금융지원 확대)	금융지원
부안군	식품 품질검사 외주 의뢰	품질/연구
	(복분자) 연구소 기술/장비 수준 향상	
	기업인력 부족 및 지역의 인력수급 어려움	인력수급
	세금감면 혜택 강화	금융지원
	기업지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세금면제	행정서비스
순창군	신속한 업무처리	
	유통 시 물류비 증가	물류/교통
	불필요하게 긴 이동 경로	
	운영자금 지원 확대	금융지원
익산시	물류비 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	
	인력수급이 제일 어려움	인력
	농공단지 노후화로 인한 단지 기반시설 정비 필요(도로, 출입문, 창고 등)	기반시설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환경 처리시설 확충 필요	환경처리
	군 차원의 환경처리시설 통합/체계적 관리 필요	
익산시	공동폐수처리 시설의 까다로운 전처리 기준	환경처리
	폐기물(음식물 포함) 처리 문제	
	폐수처리가 기업으로 가장 큰 문제임	
	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 필요(거리적 문제), 전문인력 확보 지원	인력수급
	다른 지역의 인재 채용의 어려움(주거비용, 익산시 지원금 기준)	
	교통 불편, 물류 어려움	물류/교통
	시내와 거리가 멀고 주변에 상권이 없음	
	단지 내 문화시설, 편의시설(식당 등), 복지시설 부족	편의시설
	생활여건개선(기업필요시) 필요	
	행정서비스 개선(전담인력 부족, 오픈행정, 빠른 서비스, 적극성)	행정서비스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 확대(시기, 대상 등)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법인세 감면 혜택 등)	
	수출관련 지원사업의 확대 및 기획의 장 마련	네트워크/거버넌스
	입주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필요(지원센터 등)	
기타	HACCP 관련 기술/설비 지원 확대	품질/연구
	신제품 기술 지원 및 단지 내 연구소 개방	
	제조업체별 필요사항을 선별하여 장기적인 투자(국내 및 지역 농산물 수급 동향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추진 및 시설 확보(저온창고/유통시설 등)	기타
	타지역 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구분	내용	합계
정읍시	- 고령화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어려움(관리/생산직 전반) - 고용지원금 확대 - 인재 채용 관련 데이터 구축 및 관내 교육기관과의 연계 지원 강화	인력
	- 폐수처리 관련 지원 확대 - 식품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장 없음	환경처리
	- 운영자금 등 기업지원 확대 필요 - 환경개선지원금 필요	금융지원
	- 입주 시 행정서비스는 만족스러우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부족 - 과도한 위생규제(전문단지 대상)로 인한 어려움 - 현장(기업)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사업 추진	행정서비스
	- 아직 분양률이 낮아 대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 발생 - 정읍의 전략품목 발굴·육성·홍보를 통한 기업유치 확대	전략품목/ 기업유치
진안군	(전문)인력수급이 어려움(군 지역 고령화, 전주에서 출퇴근 어려움) - 여성지원센터의 인력지원 확대	인력
	- 유통 인프라/유통망 확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제품의 홍보와 판매 지원 확대 필요	유통/판로
	- 지원사업 및 세제 보조금 등 정보 부족 - 설비투자 대출 이자 부담(유해물질 처리시설)	금융지원
	- 식품 안전성 및 위생 관련 규제 부담(조사평가 포함) - 홍삼 한방단지내 폐수처리(하수종말유입)시설 부재	환경처리
	6년근 수삼 부족 - 지역원료 수급 어려움(쌀)	원료수급
	- 타지역 기업인에 대한 차별 해소 - 농공단지 부족	기타
	- 특화된(특색있는) 상품을 생산업체 유치 노력 필요 -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가공업체가 발전해야 1차산업 발전) - 비즈니스 마인드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노력	행정서비스
무주군	투자/지역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및 확대	인력
	접근성은 좋으나 물가가 높아 생활비 부담이 존재	정주여건
	단기간의 건축 및 투자 확대 요구에 대한 부담	기타

주: 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유형화하여 정리하였음

3. 공무원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가. 지역별 식품기업 유치여건

-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의 기업지원 인프라는 관련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니지 않은 중소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유일한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우수한 기업지원시설과 기업자금지원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산단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따른 물류비용, 지원·복지시설의 부족, 수도권 대비 부동산 투자여건의 한계, 폐수 처리 부담은 기업유치의 어려움으로 작용
- 순창군·진안군·고창군의 경우 전략품목에 대한 강한 브랜드와 지자체연구소의 기업지원 기능이 기업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순창군(장류), 진안군(홍삼), 고창군(복분자)은 전략제품에 대한 강한 브랜드를 통해 기업의 투자 필요성이 조성되면서 대상·사조(순창), CJ(진안), 국순당(고창) 등의 주요 기업유치 및 설립에 성공하였음
 - 강한 지역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과 군 자체적인 유치 활동의 어려움이 공통으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농공단지 노후화(순창), 정주여건(진안),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 구도 심화(고창) 등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주군은 청정이미지와 접근성 대비 낮은 분양가격이 기업유치에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정주·문화 인프라와 앵커기업의 파급효과 부족은 어려움으로 나타남
 - 무주군은 청정이미지와 접근성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인 풀무원 다논(본사)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천마·머루 등 전략품목을 보유하고 있음
 - 유제품 가공업체 특성상 앵커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전략 품목(천마·머루) 생산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제품의 수용성 부족은 관련 기업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읍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우수한 축산 인프라가 식품기업 유치에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물류·유통, 특화단지의 규제 등은 어려움으로 나타남
 - 정읍시의 우수한 축산업 기반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은 동원 F&B 등의 기업유치와 육가공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물류·유통체계 비효율성, 기업유치와 관련된 전북-정읍시의 협력 어려움, 특화단지에 대한 규제(업종, 위생) 등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나타남

○ 부안군은 농공단지의 접근성과 집적화, 앵커기업(참프레) 위치 등이 강점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정책과의 미스매치, 환경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으로 나타남

- 부안1·2·3 농공단지는 군청과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집적되어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 필요성은 식품기업 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1〉 지역별 식품기업 유치여건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구분	유치여건(장점)	유치여건(어려움)
국가 식품 클러 스터 (익산)	- 국내 유일 식품 국가산단 - 기업지원시설(중소기업 유치여건) - 우수한 기업자금지원 - 지속적인 지원사업(시설/복지 등) 확대 - 접근성 개선(철도/도로망) 추진	- 높은 물류비용 문제 - 부동산 투자여건(대기업 유치 제한) - 폐수처리 부담(전처리 기준) - 지원·복지시설 부족 - 높은 보조금 지급 기준 (전문) 인력수급 어려움
정읍시	-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조찬모임 등) - 특화단지(소성특화, 신용육가공) - 앵커기업 위치(동원F&B, 매일유업, 투썸플레이스 등) - 우수한 축산업/도축업 인프라	- 물류비 부담/유통체계 개선 필요 - 지역 균형 기업유치를 지원체계 부재 - 기업유치를 위한 도-시 협력 어려움 - 특화단지의 규제(위생점검, 업종제한) - 콜드체인 인프라 부재
순창군	- 강한 지역 브랜드(장류) - 지자체 연구소(장류미생물/건강장수) - 장류/소스의 높은 소비자 충성도(수요) - 순창군 출자회사(한국절임, 순창장류) - 저렴한 토지가격	- 농공단지 노후화 - 높은 물류비용 - 기업유치 인력/예산 부족 - 수출지원 어려움(발효식품 특성) - 지역 원료(교추) 가격경쟁력 약화 - 인력수급 어려움
진안군	- 강한 지역 브랜드(홍삼) - 진안홍삼연구소(개발/기술/평가지원) - 높은 지역 원료 사용률 - 홍삼특화 농공단지(집적화)	- 공동폐수처리장 부재(세척수 처리 부담) - 인력수급 어려움 - 문화/복지시설 부재 - 군 자체 기업유치 활동 어려움 - 접근성 좋고 저렴한 용지확보 한계
무주군	- 지역의 청정이미지 - 교통 접근성 대비 낮은 분양가격 - 다국적기업(풀무원 다논) 유치 - 특화품목(천마/머루) 보유	- 투자유치 활동 어려움 - 지역 인프라 부족(정주/문화) - 풀무원다논의 앵커기능 한계(업종특성) - 특화품목 가공제품의 수용성 부족
고창군	- 우수한 자연환경(청정) - 적극적인 식품기업 유치 활동/의지 - 북분자연연구소의 우수인프라/기업지원 - 특화품목(북분자) 기반(특화단지, 연구소) - 기업유치 실적(매일유업, 하이트진로 등)	- 식품기업 협의체 부재(소통 어려움) - 국·클·타지역과 기업유치 경쟁 구도 - 기업지원 관련 도-군 협력 어려움 - 인력수급의 어려움
부안군	- 부안농공단지의 우수한 접근성과 집적 - 앵커기업 위치(참프레) - 전략품목(오디·뽕), 식품(젓갈) 보유	- 환경문제 지역사회 합의 필요 - 군 산업정책과의 미스매치 - 상대적으로 비싼 부지가격

나. 시군별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등 물리적 측면의 개선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현재 추진 중인 접근성 개선 및 물류체계 개선(항만 이용 활성화, 철도망 구축)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정읍시의 경우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식품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물류·유통체계 조성 및 연계체계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순창군), 공동폐수처리시설 확충(진안군) 등 농공단지 내 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지역 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략제품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기업유치, 기업지원 제도에 대한 미비점 개선 등 정책 추진상의 미비점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음

- 기업보조금 지급제도 개선(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 유치를 둘러싼 도-시군 간 거버넌스 체계 강화(정읍·고창)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5-22〉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구분	주요 내용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	• 지속적인 접근성 및 물류체계 개선(물류비용 감소) • 기업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개선 •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 대학 연계 강화
정읍시	• 특화단지 중심의 지역/권역별 거점 및 연계체계 조성 • 도내 클러스터 거점 중심의 물류/유통체계 개선 • 도-시군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순창군	•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 지자체연구소의 창업 지원기능 확대 • 발효제품의 수출/물류 측면의 어려움 개선
진안군	• 지역 전략산업의 집중적인 육성 • 소기업/대기업의 차별화된 유치전략 추진 • 폐수 처리 관련 기업부담 해소
무주군	• 군 단위 기업유치 활동 여건 개선 • 지역 정주환경 개선
고창군	• 기업유치에 대한 도-시군간 협력 강화 및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식품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기금 마련 및 특화산업 중심 분배 기능 강화 • 기업지원제도 상의 문제점 공유 및 개선 노력
부안군	• 식품산업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4. 소결

○ 본 장에서는 정책 공급자(공무원)와 수요자(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음

-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조사하여 지역의 기업유치 여건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임
- 기업 수요조사는 식품 특화단지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고, 공무원 수요조사는 시군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

○ 기업 수요조사 결과, 사업장 특성 부문에서는 지역 원료의 가격 경쟁력 및 생산량 확보, 물류비와 인력수급 부담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지역 원료 이용비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으며, 지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량 확보 측면의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판매시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동시장은 해당 시군에 한정되면서 물류비 부담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주 당시 행정기관의 지원은 해당 시군(특화단지), 지원센터(국庫)를 통한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지원의 도움 정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기업입지 측면에서 전북의 주된 장점은 저렴한 용지가격, 단점은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품질 안전성, 기능성 평가 지원시설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북의 기업유치 측면의 장점으로 저렴한 용지가격, 우수한 자연환경, 풍부한 기업지원제도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전북의 기업유치 측면의 단점으로 인력부족, 기업지원 부족, 수도권 접근성 부족, 인프라 부족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필요한 기업지원시설에 대해서 품질안전성 지원시설과 기능성평가 지원시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기업 대상 유치지원정책의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입지 유형과 기업 규모별로 정책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함

- 식품기업 유치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인력확보(중요도: 4.6, 만족도: 2.5), 기

반시설 정비(중요도: 4.38, 만족도: 2.7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반시설, 생활여건 개선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으나, 농공단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10명 미만의 소기업은 인센티브 지원이, 50명 이상 중견그룹 이상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소재의 전략적 유치, R&D 지원센터 확충(국가),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농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북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유치 업종은 식품소재(50.7%)와 전처리 업체(23.9%)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R&D 지원센터 확충(24.0%), 특화단지(농공)의 경우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의 응답이 가장 많음

○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식품기업 유치여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과 도-시·군의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가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우수한 기업지원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 유치여건이 우수하지만,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접근성 향상, 지원시설 구축, 투자여건 개선이 필요
- 시·군 단위에서는 강한 지역 브랜드(순창·진안·고창), 청정이미지(무주), 축산 인프라(정읍) 등 지역별 고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지역별 차별화된 유치전략 모색하는 한편, 지역 간 식품기업 유치 경쟁 해소, 시군 단위 기업유치 활동의 어려움, 기업유치 지원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북도-시군-기업 간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6

장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Jeonbuk Institute

-
1. 전략 수립 개요
 2.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종합
 3.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기본구상
 4. 분야별 추진계획

제 6 장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1. 전략 수립 개요

-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은 산업, 입지, 제도적 측면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여건 종합, 기본구상, 전략 수립의 순서로 수립되었음
- 여건 종합 단계에서는 산업, 입지, 제도적 측면의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을 도출함
-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도출된 정책요인을 바탕으로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함
-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과제별 실행전략을 수립함

구분	분류	내용
여건 종합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종합	• 산업/입지/제도 측면의 기업유치 여건 종합 •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요인 도출
↓		
기본 구상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목표 설정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비전 설정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목표 설정
↓		
전략 수립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과제 도출	• 목표별 핵심 추진과제 도출 • 추진과제별 실행전략 수립

〈그림 6-1〉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개요

2. 전북 식품기업 유치여건 종합

- 산업 측면의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종합한 결과, 전북은 농업과 식품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지역-지역 등 전북 내 지역상생발전이 정책요인으로 도출되었음
- 전북 식품산업은 높은 성장률과 특화업종(육류·곡물)을 지니지만, 소기업 비중이 높고 서북부 집중심화 및 지역 간 경쟁 심화로 지역 간,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
- 전북 식품산업은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가 크지만, 농업부문 파급효과는 적은 것으

- 로 나타나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농업-식품산업의 상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식품산업은 공공부문의 우수한 혁신 인프라를 지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전문 및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공통으로 나타나 산학연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

○ 입지 측면의 식품기업 유치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지역별 전략품목 고도화, 인프라 강화, 청정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이 정책요인으로 도출

- 전북은 전략품목 브랜드를 지닌 지역은 연구소 설립,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투자여건이 지속해서 강화되지만, 브랜드가 약한 지역은 전략품목 육성, 고도화가 필요
- 전북은 저렴한 용지가격과 자연환경의 장점이 있지만, 수도권 접근성 부족과 물류비용 부담은 기업유치 약점으로 작용해 관련 인프라 확충 및 부담경감이 필요
- 전북은 다수의 식품 특화단지가 조성되었으나, 일부 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진안홍삼, 가남 등)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및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적 측면의 기업유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북-시군-기업 간 소통을 통한 협력지원체계 강화가 정책요인으로 도출되었음

- 전북은 풍부한 인센티브 제도와 유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관련 사전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해 전북도-시군-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전북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액 기준 식품기업 유치 실적이 우수하지만,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유치기업 성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6-1〉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요인 도출

구분	전북 여건 종합			정책요인 도출
	장점	단점		
산업	• 식품산업 성장/특화 • 육류·낙농·곡물 특화 • 총 생산유발효과 큼 • 공공 혁신역량 우수	• 특정 지역 집중 증가 • 소기업 비중 높음 • 농업 파급효과 낮음 • 민간 인력 부족	⇒	• 지역상생발전 - 지역-지역 - 대-중소기업 - 농업-식품
입지	• 지역별 특화 브랜드 • 저렴한 용지가격 • 우수한 자연환경 • 식품 전문단지 조성	• 전략품목 부재 지역 • 수도권 접근성 부족 • 물류비용 부담 • 농공단지 인프라 부족	⇒	• 투자환경조성 - 전략품목 육성·고도화 - 인프라 확충 - 청정환경 조성
제도	• 우수한 인센티브 제도 • 우수한 기업유치 실적 •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 인센티브 협의의 어려움 •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 • 사후관리 어려움	⇒	• 협력지원체계 - 전북도-시군-기업 - 유치기업 성장 지원

3.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기본구상

가. 비전과 목표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상(식품기업), 부문별 정책요인, 정책의 지향점을 도출하였음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국내 식품기업(전북 외)이며, 정책 비전은 정책대상을 반영해야 함
-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여건으로부터 도출된 정책요인은 지역상생발전(산업), 투자환경 조성(입지), 협력지원체계(제도)이며, 비전은 정책요인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함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이며, 공공 영역에서는 지역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지역(地域)과 기업(企業)이 상생하는 글로컬(Glocal) 식품산업 투자 중심지 조성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 입지,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각각의 목표를 제시
- 산업 측면에서의 목표는 전북의 지역과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음
- 입지 측면의 목표는 전북 내 전략품목의 고도화와 입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설정하였음
- 제도 측면의 목표는 기업유치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지원체계 강화'로 설정하였음

나. 추진전략 도출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의 비전과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목표 1]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산업)	(식품산업 분야)
--------	-----------------	-----------

○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산업)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 지역농업 연계 강화,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을 추진과제로 도출

(과제 1-1)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상생 협력 지원체계 구축

- 전북 식품산업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여건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개별 산업단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 작용
- 국가식품클러스터(거점)와 전문단지 중심의 권역별 클러스터(연계)를 지정하고, 거점-연계 산단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식품기업 유치 환경조성 추진
- 거점(국가식품클러스터)은 글로벌 식품산업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계 산단은 미니클러스터 조성 및 거점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상호 시너지 창출 도모

(과제 1-2) 지역농업 연계 강화

- 전북 식품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크지만, 농업부문과의 연계 확대를 위해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전략품목의 가공원료를 생산하는 전략농업을 규모화·조직화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

(과제 1-3) 맞춤형 유치 지원체계 구축

- 전라북도 식품기업은 규모별로 지원정책 수요는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업유치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 자체적인 R&D, 홍보, 설비, 판로 등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입지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소기업은 유치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

(과제 1-4) 산-학 연계 인력양성 지원

- 인력수급 문제는 업종,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식품기업 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권역별 식품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고(생산기술), 대학(관리, 설비운용), 대학원(전문)에 이르는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목표 2]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입지 분야)
--------	---------------	---------

○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입지)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 특화품목 고도화, 식품 기업 유통·물류 경쟁력 확보, 식품 전문단지 기반시설 확충의 추진전략 도출

(과제 2-1) 시군 전략품목 고도화

- 지역의 우수한 전략품목은 식품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조성하며, 전북은 식품특화 품목이 존재하지만, 지역별로 특화 정도와 시장규모는 차이를 나타냄
- 전략품목이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순창, 고창, 진안)과 제품화 및 시장성 확대가 필요한 지역(기타 지역)을 구분하여 전략품목 고도화 지원체계를 구축
- 전략품목 브랜드가 강한 지역의 경우 제품의 고도화와 기업의 집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브랜드가 약한 지역의 경우 전략품목 발굴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초점

(과제 2-2) 식품기업 유통·물류 경쟁력 확보

- 국내 주요 시장인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은 식품기업 유치(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물류 인프라 조성을 추진
- 유통량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 3-3) 식품 전문단지 기반시설 확충

- 전라북도 식품 전문단지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지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거점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글로벌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부족한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에 초점을 둠
- 전문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별 수요에 맞추어 입주기업 공동시설(공동창고, 공동폐수처리장) 확충 및 노후 시설정비 추진

[목표 3]	식품기업 협력·지원체계 강화	(제도 분야)
--------	-----------------	---------

○ 식품기업 협력·지원체계 강화(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식품기업 유치 도-시군 협력 강화, 기업-시군 소통 강화,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도출

(과제 4-1) 식품기업 유치 도-시군 협력 강화

-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시군별 경쟁 해소,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시군-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 전라북도 식품산업 지방자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애로사항 공유, 보조금 지급 협의, 전북-시군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기업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군(국클지원센터)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역별 식품기업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추진

(과제 4-2)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

- 전북은 다양한 기업유치제도에 비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유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 거점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자체 추진하는 기술지원(R&D), 안정성/기능성 인증, 장비 지원의 기능을 연계 전문단지로 확대 추진
- 연계단지의 경우 권역별 지자체 연구소와 사업단을 중심으로 제품 고도화, 마케팅, 품질인증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함

〈표 6-2〉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방향

구분	목표	전북 여건 종합(정책요인 도출)		추진전략
		장점	단점	
산업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 높은 성장률 • 총 생산유발효과 큼 • 육류·낙농·곡물 특화 • 공공 혁신역량 우수	• 특정 지역 집중 증가 • 농업 파급효과 낮음 • 소기업 비중 높음 • 민간 인력 부족	→ 클러스터 상생협력 강화 → 지역농업 상생발전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산학연계 인력양성
입지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 지역별 특화 브랜드 • 저렴한 용지가격 • 우수한 자연환경 • 식품 전문단지 조성	• 전략품목 부재 지역 • 수도권 접근성 부족 • 물류비용 부담 • 단지 인프라 부족	→ 시군 특화품목 고도화 → 유통·물류경쟁력 확보 → 기반시설 확충
제도	협력·지원 체계강화	• 우수한 인센티브 제도 •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 • 우수한 기업유치 실적	• 협력체계 구축 어려움 • 인센티브 협의 필요 • 사후관리 어려움	→ 전북-시군-식품기업 협력체계 강화 →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

다. 전략체계 종합

비전

**지역(地域)과 기업(企業)이 상생하는
글로컬(Glocal) 식품산업 투자 중심지 조성**

3대 목표

- ▶ (산업)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
- ▶ (입지)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 ▶ (제도) 협력·지원체계 구축

9대 추진 과제

1.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

- ① 식품클러스터 상생협력 강화
- ② 지역농업 상생발전
- ③ 산학연계 인력양성 강화
- ④ 맞춤형 식품기업 유치 지원체계 구축

2.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⑤ 시군 특화품목 고도화
- ⑥ 식품산업 기반시설 확충
- ⑦ 유통·물류 경쟁력 확보

3. 협력·지원체계 구축

- ⑧ 전북-시군-식품기업 협력체계 강화
- ⑨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

4. 분야별 추진계획

가.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산업)

1) 식품클러스터 상생 협력 강화

-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식품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단지별 유치가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상황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자체 연구소의 기술지원, 기업지원 서비스는 해당 단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라북도 식품산업 상생발전을 방해하고 있음

〈표 6-3〉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술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용	지원 내용	
		국庫 입주기업	비입주기업
현장으로 기술지원	유효성·안전성 평가/제품개발	70% 지원	지원 불가
전문 코디네이터	기술인증/공정개선, 패키징, 시장조사 등	70% 지원	지원 불가
장비 공동활용(기술)	시험분석 성적서 발급	60% 지원	자부담 100%
장비 공동활용(생산)	상품화 위한 장비 활용	50% 지원	자부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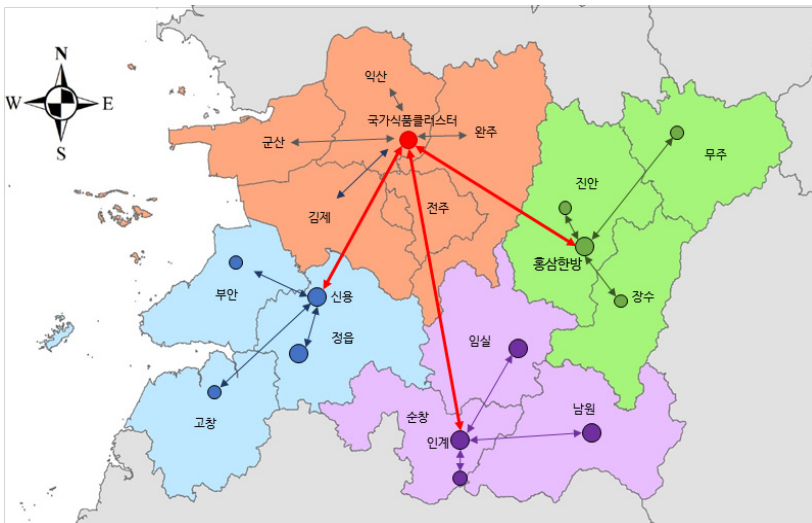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식품산업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유치 및 식품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추진
- 식품산업 특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반영하여 전라북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권역별 집적지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한 익산과 산업기반이 구축된 전주, 완주, 군산, 김제 지역을 전라북도 식품산업 거점 지역으로 선정
- 정읍·부안·고창, 순창·임실·남원, 진안·장수·무주 등 3개 권역을 설정하여, 지자체 연구소와 식품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미니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우수한 기업지원시설을 입주업체 외 전라북도 식품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비용지원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는 식품산업 거점으로 우수한 기업지원시설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비 입주기업이 해당 기업지원시설과 평가, 인증 관련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비용지원을 추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

○ 권역별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식품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온 창고 구축 및 지자체 연구소의 공동 R&D 지원

- 저온 창고는 식품기업의 원료수급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시설로서, 전문단지에 권역별 공동 저온 창고를 구축하여 원료수급의 효율성을 제고
- 지자체 연구소의 기능을 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기업과의 공동 R&D(소재지 외 시군 의무 할당 비율 설정)를 지원하여 연구소 중심의 권역별 혁신생태계를 구축



〈그림 6-2〉 전라북도 식품산업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안)

2) 지역농업 상생발전

- 전북 식품산업은 지역 생산유발효과에 비해 농업부문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농업 상생발전을 위해 원료생산자 측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전북 식품산업의 지역 총 생산유발효과는 전국 3위 수준이지만 농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5위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식품기업-농업의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함

- 지역 원료 활용에 대한 주요 애로사항은 가격과 생산량이므로 생산자에 대해서는 보급과 조직화를 지원하고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원료 이용지원이 필요
- 도내 원료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원료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지역농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함
- 중앙정부에서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국산원료 구입 비용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접금융 형태로서 지역 농식품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이 필요
- 전북 지역농업-식품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전라북도 식품산업 후방산업 육성 대상은 지역농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략 식품품목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 식품기업-지역농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전략 식품을 중심으로 원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생산자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화와 공동생산 및 출하를 지원하고,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원료매입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추진

〈표 6-4〉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개요	농식품 제조업체 대상 국산원료 구입비용 지원	
대상	농식품 제조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30억 원	전처리 10억 원
지원내용	국산농산물 구매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고정/변동금리 선택
조건	구매량: 지원금액 125% 이상	
담당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중소기업 성공 잡이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

3) 산학연계 인력양성 강화

- 전북 식품기업은 공통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인력 구조를 반영한 산학연계형 인력양성 강화가 필요함
- 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전북의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가

장 큰 단점으로 조사되었음

- 식품산업의 인력은 경영관리, 연구개발, 물류유통, 생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직 충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식품산업의 인력은 경영관리, 연구개발, 물류유통, 생산직의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생산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생산직의 경우 취업하려는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며, 경영관리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농림축산식품부, 2014)
- 전라북도 식품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생산기술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
 - 생산기술인력의 수요는 관리직에 비해 많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4개 권역별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와 연계한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 4개 권역별로 1전문대-1시군 매칭 취업연계형 식품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
 - 전문·관리 인력의 경우에는 도내 대학을 선정하여 식품산업 전문·관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4년제 2개 대학 선정)

〈표 6-5〉 전라북도 식품기업 인력공급 방향

구분	생산기술인력	전문인력
목적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산학연계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원)
세부사업	• 권역별 특성화고 지정을 통해 식품기업 생산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 권역별로 1전문대-1시군을 매칭하여 취업연계형 기능인력 양성	• 도내 대학 활용 취업연계형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4) 맞춤형 식품기업 유치 지원체계 구축

- 전라북도 식품기업은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 수요는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를 반영한 기업유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경우 R&D, 기업지원기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R&D, 유통 지원보다 세금감면 등의 수요가 높음

- 식품산업 중소기업은 기업지원시설, 보조금, 기술지원, 인증 등 포괄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전라북도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유치여건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기업 투자박람회 개최를 추진
- 대기업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은퇴 인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식품기업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확보

○ 자체적인 연구기능을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권역별 지자체 연구소를 활용하여 강소 식품기업 유치 지원 전략을 추진

- 시군 전략품목 중심의 지자체연구소의 기능을 권역으로 확대하고, 기업 공동 입주공간을 확충하여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
- 권역별로 지자체연구소와 식품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업형 R&D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

1. 사업명 :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식품산업 집적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개별 단지별로 기업유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창출 효과가 부족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권역별 식품 전문단지를 연계하여 식품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및 기업지원 기능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3년)
 - 총사업비 : 150억 원
 - 사업대상 :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도내 식품전문단지
 - 국가식품클러스터(거점): 익산·전주·완주·군산·
 - 신용·소성·복분자(연계): 고창·정읍·부안
 - 홍삼한방(연계): 무주·진안·장수
 - 인계농공(연계): 남원·임실·순창
4. 사업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공동활용 지원
 - 국클 비입주기업 대상 기술지원비용 지원(1억 원*30건)
 - 권역별 식품산업 미니클러스터(MC) 조성
 - 연계 산단 저온 창고 구축 지원(20억 원*4개소, 1천 평 기준)
 - 4개 지자체 연구소 공동 R&D 지원(10개*1억 원*4개 권역)
5. 기대효과
 - 전라북도 권역별 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과제1-2]	지역농업 상생발전	(식품산업 분야)
1. 사업명 : 전북 식품 후방산업(농업) 육성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식품산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만, 농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임 - 전북 식품산업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전국 3위 수준으로 높지만, 농업부문의 생산유발 효과는 5위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전북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원료수급을 지원하여 식품기업과 지역농업의 상생 발전과 식품기업 유치여건 개선이 필요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3년) ○ 총사업비 : 120억 원 ○ 사업대상 : 시군 4. 사업내용 ○ 식품 가공용 원료생산자 조직화·규모화 지원 - 식품 가공용 원료생산자 조직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10개 품목*1억 원) ○ 식품 가공용 원료 보급 지원 - 식품 가공용 원료 보급 및 생산 지원(10개 품목*10억 원) - 도내 식품기업 대상 지역 원료 이용 보조(10억 원) 5. 기대효과 ○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원료수급 체계를 마련하여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및 농 식품산업 연계발전 도모		

[과제1-3]	산학연계 인력양성 강화	(식품산업 분야)
1. 사업명 : 전북 식품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전북 식품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인력구조를 반영한 산학연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 ○ 식품산업의 인력 수급구조(생산기술, 관리, 연구)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해소 필요 - 전북 식품기업의 높은 생산기술인력 수요에도 공급이 부족해 일자리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5년) ○ 총사업비 : 110억 원 ○ 사업대상 : 전북지역에 소재한 특성화고, 식품기업, 대학 4. 사업내용 ○ 취업연계형 식품 생산기술인력 양성 지원 - 권역별 특성화고 식품산업 생산기술인력 양성과정 운영(4권역*2억 원*5년) - 1전문대-1시군 취업연계형 식품산업 기능인력 양성(4권역*2억 원*5년)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식품산업 강소기업 대상 식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2개 대학*3억 원*5년) 5. 기대효과 ○ 전라북도 식품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인력수급 문제 해소 및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1. 사업명 : 맞춤형 식품기업 유치 지원사업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식품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책 수요는 차이를 나타냄
- 대규모와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업유치 지원 필요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5년)
- 총사업비 : 137.5억 원
- 사업대상 : 시군

4. 사업내용

- 식품기업(대기업) 투자 활성화
 - 글로벌 식품기업 투자박람회 개최(3억 원*5년)
 - 대기업 은퇴 인력 활용 대규모 투자 전담인력 확보(5천만 원*5년)
- 강소식품기업(중소기업) 유치·육성 지원
 - 지자체연구소 연계 기업공동 입주공간 확충(4개*20억 원)
 - 지자체연구소 공동 R&D 지원(10개*2억 원)

5. 기대효과

- 기업규모에 따른 식품기업 유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나.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입지)

1) 시군 전략품목 고도화

○ 식품 분야 전략품목(브랜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식품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지만, 전략품목의 시군별 전략품목의 브랜드와 시장규모는 차이를 나타냄

- 장류(순창), 홍삼(진안)의 경우 시장규모가 크고, 지역의 브랜드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대기업(사조, 대상, CJ 등)의 투자로 이어짐
- 일부 지역의 경우 전략품목의 시장규모가 작거나 브랜드화가 부족하여 식품기업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시군 전략품목 고도화를 위해서 전략품목의 시장성과 브랜드화 수준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육성전략이 필요함

- 시군 전략품목 브랜드가 강한 지역의 경우에는 전략품목의 발굴보다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경제와의 연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 필요
- 전략품목 브랜드가 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는 식품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함

○ 브랜드가 강한 지역의 경우에는 4개 지자체연구소와 연계하여 전략품목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연계발전을 위한 지자체 출자법인 설립을 지원

- 지자체 출자법인은 원료이용, 인력수급 등과 관련하여 지역농업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며, 대기업 유치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브랜드가 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전략 식품 발굴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전략품목에 대한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 브랜드가 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된 전략식품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제품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표 6-6〉 지자체 출자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개요

구분	내용
설립시기	2010년
사업비	1공장 : 180억원(국비: 135, 도: 22.5, 군: 22.5), 2공장 : 120억 원(국비: 50, 도: 11.3, 군: 38.7)
출자지분	순창군 49.6%, 관내 5개 지역농협: 35.5%, 기타: 14.9%
규모	1공장 : 대지 10,553㎡, 연면적: 7,101㎡(지하1층, 지상2층) 2공장 : 대지 3,764㎡, 연면적 3,617.79㎡(지하1층, 지상2층)
생산제품	순창메주, 한식된장, 한식관장, 청국장, 고추장 및 소스류
기대효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상생형 기업유치 활성화
비고	 

자료: 순창장류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cmeju.com/>)

2) 식품산업 기반시설 확충

○ 전북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 전문단지(특화단지)가 위치하지만, 기반시설 부족 또는 노후화로 인해 식품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경쟁력 확보가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신규산업단지로서 지원시설 및 근로자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인력확보 및 기업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 식품 전문단지의 경우 모두 농공단지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시설 정비에 필요한 상황임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도내 식품 전문단지의 인프라 여건을 반영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 전문단지는 조성목적, 규모, 조성시기, 관리주체가 다르며, 기반시설 여건 역시 차이를 보이므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에 상권이 없어 근무 및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므로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함

- 식품전문단지의 경우에는 폐수처리문제가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폐수 처리장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농공단지에 대한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추진
- 현재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나,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지자체 부담 및 민간 기업 허가 형태만 가능
- 진안홍삼, 고창복분자 등 공동폐수처리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생 폐수발생량과 기업 협의를 통해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또는 폐수처리비용 지원 추진
- 순창가남농공단지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식품특화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정비 추진

구분	내용
제29조 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산업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 지원 가능 ② 농림부 또는 해수부장관은 농공단지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제외)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 지원 가능
제37조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중략) ③ 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증설	① 농공단지의 확장,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증설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기존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방치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다. ② 질소·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3) 유통·물류 경쟁력 확보

- 131 –

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라북도내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에 따른 기업의 유통·물류비 부담은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주요 단점으로 나타남

○ 전북의 식품산업 물류·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통체계 효율화 지원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전문단지를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를 이용하여 전북 거점(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문단지(권역별 소규모 거점)의 물류시설 구축 지원

○ 자체적인 유통망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

- 전라북도 시군 단위에서 식품기업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하여 소규모 식품기업의 물류경쟁력 확보를 지원

○ 자체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을 활용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물류 유통체계 구축을 지원

- 식품산업 대기업 유통망을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전라북도 식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물류·유통체계를 구축

〈표 6-8〉 울산광역시 물류공동운송사업 협동조합 사례

구분	내용
창립시기	2013년
목적	조합 중소기업의 물류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물류이용
자본금	3.14억 원
출자기업수	30개
효과	기존 물류운송 비용보다 5~10% 감소
비고	

자료: 경상일보(www.ksilbo.co.kr)

[과제2-1]	시군 전략품목 고도화	(입지 분야)
1. 사업명 : 전라북도 시군 전략품목 고도화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전략품목은 식품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조성하지만, 전북 시군별 전략품목의 브랜드와 시장규모는 차이를 나타냄 ○ 시군 전략품목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제품 고도화(브랜드 강한 지역)와 전략품목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브랜드 약한 지역) 지원이 필요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3년) ○ 총사업비 : 110억 원 ○ 사업대상 : 시군(사업단, 지자체연구소) 4. 사업내용 ○ 시군 전략품목 제품 고도화 지원(브랜드 강한 지역) - 지자체연구소 연계 전략품목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4연구소*2억*3년) - 전략품목 이용 지자체 출자법인 설립(50억 원) ○ 시군 미래 전략품목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브랜드 약한 지역) - 시군 특산물 연계 전략품목 발굴 및 제품화 지원(4시군*2억*3년) - 시군 전략품목 홍보·마케팅 지원(4시군*1억*3년) 5. 기대효과 ○ 시군 전략품목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식품브랜드 확립과 식품기업 투자환경 조성		

[과제2-2]	식품산업 기반시설 확충	(입지 분야)
1. 사업명 : 전라북도 식품 전문단지 기반시설 확충 2.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 전문단지는 전북 식품기업 유치거점에 해당하지만, 기반시설 노후화와 부족으로 인해 식품기업 입지경쟁력을 약화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신규산업단지로 지원시설 및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 - 식품 전문단지는 농공단지로 규모가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작아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일부 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정비가 필요 3.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5년) ○ 총사업비 : 132.9억 원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시군 4. 사업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설립(설계: 1.9억 원, 시공: 27억 원) ○ 식품 전문단지 기반시설 확충 지원 -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지원(2개 단지*50억 원) - 노후기반시설 정비 지원(2개 단지*2억 원) 6. 기대효과 ○ 전라북도 식품 전문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입지경쟁력 확보 및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1. 사업명 :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통·물류 효율화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식품기업의 높은 물류·유통비용 부담으로 인해 식품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식품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유통·물류 체계 효율화를 통해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여건 개선이 필요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3년)
- 총사업비 : 145억 원
- 사업대상 : 시군(사업단, 지자체연구소)

4. 사업내용

- 전북 식품산업 유통체계 효율화
 - 국클(전북거점)-전문단지(소규모거점) 물류시설 구축 지원(50억 원)
- 중소 식품기업 공동 유통망 구축 지원
 - 시군별 식품기업 조직화·규모화 지원(14개*1억 원*5년)
- 도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물류·유통체계 구축
 - 대기업 유통망 중소기업 공동 이용 지원(5억 원*5년)

5. 기대효과

- 전북 식품기업 유통·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해 물류비 부담 감소 및 식품기업 친화적 입지환경 조성

다. 협력·지원체계 구축(제도)

1) 식품클러스터 상생협력 강화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적인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 도-시·군-식품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함
 -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별 경쟁구도를 해소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추어 기업유치가 이루어져야 함
 -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며, 기업유치와 관련한 공동대응이 중요함
- 전북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도-시군(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식품기업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 전북도, 시군, 식품기업의 중간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식품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인력(PM)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식품기업 유치 활동과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유도함
- 전북도-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식품기업 투자설명회를 권역별로 수행하여 투자설명회의 규모와 위상을 확대하고, 도-시·군 공동대응을 도모
 - 권역별로 도-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식품기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식품기업 유치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함

〈표 6-9〉 국가식품클러스터-시군 공동투자유치 활동 사례

구분	내용
개요	군산국제건강식품과학회 개최
일자	2017년 10월 22일 ~ 25일
장소	군산컨벤션센터
주요내용	투자관심 식품기업 초청 공동 투자유치 상담
비고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http://www.foodpolis.kr/>)

2) 식품기업 사후관리 지원강화

- 전북의 다양한 식품기업 유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후지원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
 - 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결과 지원사업이 신규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치기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사후지원으로 해당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유치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4개 지자체연구소와 연계하여 사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확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을 추진
 - 지자체연구소와 연계하여 식품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확대에 대한 부지확보 및 설비투자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함

〈표 6-10〉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세부사업 제안

목표	사업명	세부사업명
1. 상생형 식품산업 육성(산업)	전북 식품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 국·도 기업지원시설 공동활용 지원 • 권역별 식품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전북 식품 후방산업(농업) 육성 지원	• 식품가공용 원료생산자 조직화 지원 • 식품 가공용 원료보급 지원
	맞춤형 식품기업 유치 지원사업	• 식품 대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강소 식품기업 유치육성 지원
	수요맞춤형 식품 인력양성 지원	• 취업연계형 식품 생산기술인력 양성 • 식품산업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2. 식품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입지)	시군 전략품목 고도화 지원	• 전략품목 고도화 지원 • 미래 전략품목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
	식품기업 유통·물류 효율화 지원	• 전북 식품산업 유통체계 효율화 • 대·중소기업 상생형 물류유통체계 구축
	식품 전문단지 기반시설 확충	•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 식품 전문단지 기반시설 확충 지원
3. 협력·지원체계 강화(제도)	식품기업 유치 협력체계 구축	• 전북 식품기업 유치 민간 전문인력 확충 • 도-시군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유치 식품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 유치 식품기업 사후 기술개발 지원 • 유치 식품기업 투자 확충 지원

1. 사업명 : 전북도-시군-기업 식품기업 유치 협력체계 구축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 도-시군-식품기업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경쟁 해소,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도-시군-식품기업의 공동대응이 필요
- 전북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도-시군(국클지원센터)-식품기업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식품기업 상생발전 도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3년)
- 총사업비 : 37.8억 원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시군, 식품기업

4. 사업내용

- 전북 식품기업 유치 전담 민간 전문인력(PM) 확충
- 전북도-시군-식품기업 중간자로서 유치 활동수행
- 식품기업 유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0.5억 원*3년)
- 민간 전문인력 식품기업 유치 활동비 지원(0.1억 원*3년)
- 전북도-시군 공동 식품기업 투자설명회 개최(4권역*3억 원*3년)

6. 기대효과

-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도-시군 협력형 식품기업 유치 활동 수행 활성화
- 지역여건을 반영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과제3-2]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	(제도 분야)
1. 사업명 : 유치 식품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의 다양한 식품기업 유치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사후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유치된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투자 확대에 대한 사후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도모 필요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3년) ○ 총사업비 : 10.9억 원 ○ 사업대상 : 전라북도, 시군, 식품기업 4. 사업내용 ○ 유치 식품기업 대상 사후 기술개발 지원(30개*300만 원) - 지자체연구소 연계 식품기업 사후 기술개발 지원 ○ 유치 식품기업의 투자 확충 지원 - 유치 식품기업의 투자 확대 시 부지확보 비용 지원(10개 업체*5천만 원) - 유치 식품기업 설비투자 비용 지원(10개 업체*5천만 원) 5. 기대효과 ○ 유치된 식품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지속 성장 도모 ○ 전라북도 식품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대일(2017), 한국 식품산업의 규제특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 강상욱(2016), 국내 식품산업의 현황 및 대응 방안, Deloitte.
- 강영훈(2018),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강태진(2006), 식품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 건설교통부.(2007).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건설교통부.
- 권대영(2017), 식품산업 지속성장의 길, 한국외식정보.
- 고정삼(2008), 현대 식품산업의 이해, 유한문화사.
- 고정삼(2012), 쉬운 식품가공학, 유한문화사.
- 국가식품클러스터(2019),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기업 투자가이드북, 동 기관.
- 김경필, 이동소, 최지현.(201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식품유통연구, 31(3), 85-105.
- 김관수(2016), 2016 식품산업 트렌드와 2017 식품산업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환(2008),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용.(2013). 지역농업과 연계한 경남지역 식품산업 육성하자!, 경남발전 124호, 16-21.
- 김성용(2019), 식품산업 경제학, 박영사.
- 김재수(2007),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 백산출판사.
- 김주현.(2015). 식품산업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7가지 핵심 요인 및 국내 적용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김홍배(2005),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농림수산식품부(2011),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0-200(2012~2017), 동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2011), 신식품정책(2014~2017), 동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 동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2016). 국내외 식품 시장 정보 및 동향 분석. 동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2017).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진흥정책방안 마련 연구. 동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2).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동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동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6).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분석. 동 기관.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자료확인일: 2019.12.4.)

박건형, 라공우.(2015). 강원지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
 상정보연구, 17(1), 115-134.

박성재(2017), 농식품 가치사슬 혁신 전략, GS&J 인스티튜트

박익성, 유철중(2016), 전북지역 농생명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전북본부.

박재홍, 강혜정(2013), 주요 식품산업 정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저널편집부(2016), 식품유통연감, 식품저널.

윤석후.(2017). 4차산업혁명과 식품산업의 미래, 식품과학과 산업, 제50권 제2호, 60-73.

이상만(2008),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희, 황성혁(2012), 식품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 충남연구원.

이현동(2009).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수산식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산정책연구, 제
 3권, 13-37.

전라북도(2012), 전라북도종합계획(2012~2020), 동 기관.

전라북도(2017), 전북 식품산업 육성계획, 동 기관.

전라북도(2018),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 동 기관.

전라북도(2019), 전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동 기관.

전북테크노파크(2019), 전북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 동 기관.

조승현, 김시백, 강지현.(2016), 식품산업 경쟁력의 원천, 국가식품클러스터 : 도약과 응집을 위
 한 제언,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vol.155.

최정은, 홍성훈, 황희진(2018), 전북지역 식품산업 현황과 대응전략, 한국은행 전북본부.

최지현(2017),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식품산업진흥정책방안 마련,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김관수.(2010), 농어촌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동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분석.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전북본부(2018), 전북지역 식품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동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2018),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최근 트렌드, 동 기관.

부록

<부록> 식품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지

ID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과 전북연구원에서는 정책과제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식품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도내 식품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북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조사는 식품기업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임원 또는 팀장급 이상인 분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오직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2019. 12.

조사주관기관: 전북연구원

문의 : 정미선 전문연구원(Tel: 063-280-7136, E-mail: jms1207@jthink.kr)

양유타 부연구위원(Tel. 063-280-7187, E-mail: ywtak1103@jthink.kr)

기업 일반현황

1) 업체 위치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④ 고창북문자단지 ⑦ 순창가남농공단지	② 정읍소성특화단지 ⑤ 진안홍삼단지 ⑧ 순창인계농공단지	③ 정읍신용육가공단지 ⑥ 진안제2농공단지 ⑨ 부안제2농공단지
2) 대표 업종	① 도축·육가공 ⑥ 낙농·빙과 ⑫ 간편식	② 곡물·전분 ⑦ 유지 ⑬ 주류	③ 과실·채소가공 ⑧ 떡·과자·면류 ⑭ 비알콜 음료 ⑤ 사료 ⑨ 조미료·장류 ⑮ 기타()
3) 주 생산품	()		
4) 종사자수	① 10명 미만 ⑤ 100명 이상	② 11~49명 ⑥ 50명~100명	③ 50~99명 ⑦ 100~299명 ⑧ 300명 이상
5) 연간 매출액	① 1억 원 미만 ⑤ 10억 원~50억 원	② 1억 원~3억 원 ⑥ 50억 원~100억 원	③ 3억 원~5억 원 ⑦ 100억 원 이상
6) 업종 형태	① 본사 ② 생산공장	③ 연구소	

입지 특성

1. 귀사는 해당 사업장에 입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2. 귀사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입니까? ()

- ① 예(=2-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3번 문항으로)

2-1) 어느 지역에서 이전하였습니까? ()

- ① 전라북도 내 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③ 충청권(대전·충청·세종) ④ 광주·전남 ⑤ 대구·경북
⑥ 부산·울산·경남 ⑦ 강원 ⑧ 제주 ⑨ 기타()

3. 귀사는 생산과정에서 해당 지역 원료(농산품)의 투입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

3-1) 지역 원료(농산품)의 투입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① 지역 생산량 부족 ② 낮은 품질 ③ 높은 가격 ④ 기존 거래처 존재 ⑤ 기타(_____)

4. 귀사가 지향하는 주된 시장(판매처)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_____)

- ① 해당 사군 ② 전라북도 ③ 국내 전체 ④ 해외(국가명: _____) ⑤ 기타(_____)

5. 귀사의 인력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수급하고 있습니까? (_____)

- ① 해당 사군 ② 전북 내 타사군 ③ 전북 외 타사군 ④ 해외(국가명: _____) ⑤ 기타(_____)

입지 선정 및 지원제도

6. 귀사가 현재 사업체에 입주하실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_____)

- ① 예(=6-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7번 문항으로)

6-1) 어느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_____)

- ① 중앙부처 ② 전북도청 ③ 시청군청 ④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⑤ 중소벤처기업청 ⑥ 도출연기관(테크노파크/생물산업진흥원 등) ⑦ 기타(_____)

6-2) 지원받은 항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_____)

- ① 세금 감면 ② 입지 보조금(용지매입/임대료) ③ 고용보조금 ④ 교육훈련 보조금
⑤ 시설 보조금(건축/설비) ⑥ 운영 컨설팅 지원 ⑦ 사업 운영권 ⑧ 정보/판로지원
⑨ 기타(_____)

6-3) 지원받은 항목이 경영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_____)

-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별로 도움이 안 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7. 귀사의 사업장 위치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과 전라북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1) 사업장 위치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2) 타 지자체 대비 전라북도의 장점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풍부한 기업지원제도	② 농식품산업 집적(산학연)	③ 저렴한 용지 가격	④ 인력확보 용이성
⑤ 용수확보 용이	⑥ 우수한 기반시설	⑦ 수출 용이성	⑧ 우수한 정주 여건
⑨ 우수한 행정서비스	⑩ 안정적인 노사관계	⑪ 깨끗한 자연환경	⑫ 기타(_____)

8. 귀사의 사업장 위치선정 시 애로사항과 전라북도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1) 사업장 위치선정 시 주된 애로사항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8-2) 타 지자체 대비 전라북도의 약점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기업 지원 부족	② 농식품 산학연 부족	③ 낮은 부동산 가치	④ 우수인력 부족
⑤ 용수확보 어려움	⑥ 열악한 산업 인프라	⑦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	⑧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 갈등
⑨ 열악한 정주 여건	⑩ 낮은 행정서비스 질	⑪ 불안정한 노사관계	⑫ 기타(_____)

9. 귀사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다음의 기업지원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식품기능성평가지원시설 ② 식품품질안전센터(안전성 평가) ③ 패키징지원센터
④ 파일럿플랜트(시제품 제작) ⑤ 식품벤처센터(임대형 공장)

10. 귀하께서는 전북 및 시군의 각 기업유치 제도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칸에 V 해주세요.

항목	중요도					만족도				
	① 전혀 안 중요	② 별로 안 중요	③ 보통	④ 약간 중요	⑤ 매우 중요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 자체 기업유치 노력										
2) 신속한 행정서비스										
3) 세제/보조금										
4) 인력확보 지원										
5) 기업 사후관리										
6) 기반시설 정비확충										
7) 생활여건 개선										
8) 전반적인 만족도										

유치전략 및 발전방안

11. 전북의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치가 가장 필요한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식품소재 ② 전처리 업체 ③ 반가공 업체(전처리 제외) ④ 건강기능식품 ⑤ 가정간편식 ⑥ 기타()

12. 전북의 식품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군별 전략품목 육성 ② 수출지원 확대 ③ 식품 전문단지 조성 ④ 인센티브 확충
⑤ 교통인프라 확대 ⑥ 홍보(투자설명회 등) ⑦ R&D 지원센터 확충 ⑧ 기타()

13. 귀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입주/경영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전북 식품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고, 간략히라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직책		E-mail	
-----	----	--	--------	--

정책연구 2020-02

전라북도 식품기업 유치기반 정책 방향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3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81-3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